

한국정치운동관련문헌해제

〈 연구참여자 〉

책임연구원 : 정기영(정치학 박사)

공동연구원 : 김윤철(정치학 박사과정)

최상구(정치학 석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학술연구부

발 간 사

오늘날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국내외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이 특별한 사명과 과제를 지니고 있고, 특별한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구상 최후의 분단국가로서 세계화시대에 새로운 평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시험무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국민의 동의를 확대하여 평화의 토양을 더욱 더 다져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여전히 전쟁과 파괴, 독재와 야만으로 얼룩져있는 세계에서, 한국의 민주화과정은 특별한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한국 민주화역사는 민주화를 향한 평화적 이행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작은 발걸음이지만 한국은 87년 민주항쟁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화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 이전의 어두운 과거로 되돌아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심화'를 논할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진전된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세기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결과입니다. 한국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지닌 나라에서 피어난 민주주의는, 전쟁과 불안, 독재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민중들에게 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 민주화운동의 기반은 굳건하지 못합니다. 민주화의 진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거청산을 위한 동의와 합의의 토대가 아직은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주화운동의 미래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호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지금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수행해야 할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말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여전히 채워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또하나의 현실인 듯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 토대인 과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복원하는 것, 오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전망을 모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지평과 합의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거나 역사 속에 묻혀버린 과거 민주화운동을 발굴·복원하는 것은 민주

화운동에 힘 입어 설립된 저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여러 이론적 논의들을 연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밝혀내어 향후 새로운 민주주의 상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연구총서의 발간입니다.

연구총서 발간은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논의 등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총서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은 연구소로서 본격적인 연구 이전의 선행연구로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 현황을 조사하고 그에 기초하여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내실을 다져가는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민주화운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문이 많지만 연구소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노동운동, 학생운동, 정치운동, 교회운동 4개 부문을 먼저 조사·연구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족함이 많은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땀과 노력을 기울여 이뤄낸 작은 성과임은 분명합니다. 이번 민주화운동 연구 현황과 과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향후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오늘에 되살려내는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저희의 이번 조사·연구가 민주화운동 연구에 작은 도움이 되고, 더 심화된 연구를 위한 자극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연구에 참여해 귀찮고 힘든 작업을 성실히 해주신 연구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간된 연구총서 기초조사사업을 토대로, 향후 한국민주화운동의 과거복원과 미래전망의 정립에 기여하는 여러 이론적 성과들이 축적되어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질정을 부탁드립니다.

2003.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박 형 규

목 차

I. 한국정치운동연구의 현황과 과제	7
II. 해제 문헌 차례	37
III. 문헌 해제	43
1. 종 합(기존정당참여/ 독자정당활동 모두 포함, 한국 민주화와 정당정치관련) ...	45
2. 기존정당참여	87
3. 독자정당활동	90
4. 기타(시민·노동운동의 정치참여,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146
IV. 참고문헌	181
1. 종합(기존정당참여/ 독자정당활동 모두 포함, 한국 민주화와 정당정치관련) ...	186
가. 총 괄	186
나. 참여동기/ 논쟁	196
다. 활동사항	197
라. 결과 및 평가	199
2. 기존정당참여	202
가. 총 괄	202
나. 참여동기/ 논쟁	203

다. 활동사항	203
라. 결과 및 평가	205
3. 독자정당활동	206
가. 총 괄	206
나. 참여동기/ 논쟁	209
다. 활동사항	210
라. 결과 및 평가	212
4. 개별참여	214
가. 총 괄	214
나. 참여동기/ 논쟁	214
다. 활동사항	214
라. 결과 및 평가	215
5. 기타(시민 · 노동운동의 정치참여,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215
가. 총 괄	215
나. 참여동기/ 논쟁	218
다. 활동사항	219
라. 결과 및 평가	220

I . 한국 정치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I. 한국 정치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정기영 · 김윤철

I. 조사연구 목적

본 조사연구는 한국의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세력이 전개한 정치운동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민주화운동 세력의 정치운동은 권위주의시대에 비제도적인 영역에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한 사회세력이 제도적인 정치사회에 진입하고자 하거나 진입한 정치활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정치사회의 제도적 영역에 참여한 민주화운동 세력의 정치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합법적인 정당 창당활동, 기존정당 참여, 선거참여, 시민운동, 정치제도 개혁운동, 정치권력 투쟁과정에서의 참여 등을 민주화운동 세력의 정치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연구에서는 민주화운동세력의 정치참여, 특히 정당 및 선거에의 참여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자 한다.

민주화운동세력의 정치참여의 형태는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그 하나가 기존정당에 집단적으로 참여한 정치운동이다. 평화민주통일연구회(이하 평민연), 신민주연합추진위원회(이하 신민연), 민주주의민족통일연합(이하 민연), 통합정당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 통일시대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 등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독자적으로 정당을 창당하여 제도정치에 참여한 정치운동이다. 신한민주당, 한겨레민주당(이하 한겨레당), 민중의 당, 민중당,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 등이 그것이다. 세 번째는 각종 선거에 개별적으로 참여한 정치운동이다. 13, 14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백기완 후보의 선거참여, 1990년 영등포을 보궐선거에서 고영구 후보의 선거참여,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와 함께 진행된 민주화운동세력의 개별적 선거참여 등이 그것이다. 네 번째는 정당이나 선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민주화운동세력의 조직적 활동이다. 1992년 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후보'를 선정해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의 선거참여 활동, 2000년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천후보', '낙선후보'를 선정하여 조직적으로

낙천 및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활동을 전개한 2000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 활동 등이 그것이다.

민주화운동세력의 정치운동 내용은 참여 동기 및 정치적 지향, 정치세력화 정도, 시민사회 영역의 민주화운동과의 관계, 정치사회에서의 활동 내용 및 효과 등을 포함한다. 정치운동의 동기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및 주객관적 조건, 정치지형, 민주화운동세력의 정치참여에 대한 합의수준, 참여의 목적 등을 고려하게 되며, 정치적 지향은 정치참여를 통해 획득하고자 한 이념과 정책을 포함한다. 정치세력화 정도의 문제는 정치운동세력이 민주화운동 진영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뿐만 아니라 국민적 지지기반의 확보, 기존 정치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 영역의 민주화운동과의 관계는 정치운동을 전개한 세력이 제도 정치권에 참여한 후의 활동과 정에서 나타난 조직 및 정책의 연대활동 등을 통해 나타난 제 현상을 의미하며, 정치활동의 구심, 연계의 긴밀성, 상대적 자율성, 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 정치사회에서의 활동과 효과 등에 대해서는 당시 한국사회가 지니고 있는 민주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내용과 그 성과를 의미하게 되며, 주요하게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반 활동, 정당 및 선거 등 영역에서 정치개혁과제를 위한 활동, 권위주의 유산의 청산활동, 민주적 사회실현을 위한 활동 등을 고려할 수 있다.

II. 민주화운동세력의 정치참여

한국의 민주화와 함께 비제도권의 재야운동세력¹⁾은 제도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형태는 기존 정당에 참여하거나 독자적으로 정당을 창당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그리고 참여의 시기는 크게 네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1987년 대통령선거

1) '재야'라는 개념은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독특한 정치 현실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개념이다. 재야세력의 형성과 발전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우리 사회운동은 민주화운동, 민족민주운동, 재야운동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 왔다. 여기서는 그 구성세력의 측면에서 민주화운동은 제도권야당과 재야세력 그리고 부문운동세력을 포함하며, 민족민주운동은 재야세력과 부문운동세력으로 구분한다면, 재야운동이란 민족민주운동 가운데 부문운동세력을 제외한 재야세력이 펼쳤던 여러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은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합법정치공간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권력지향적이지 않았으며 전문적인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집권세력이나 제도권야당과 구별되며, 또한 기존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회대중운동을 기반으로 그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했던 사회대중운동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를 전후한 시기이며, 두 번째는 1992년 양대 선거과정이고, 세 번째는 1995년 지방자치선거와 1996년 국회의원 총선거과정이며, 네 번째는 2000년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세력의 정치참여 수준이나 규모, 그리고 형태의 성격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민주화운동세력의 기존야당 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재야운동세력이 처음 형성된 것은 1964년 '대일 굴욕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이하 범국민투쟁위)가 조직된 시기이다. 박정희정권이 한일협정의 방침을 세우자 당시 야당들이 '대일 저자세 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한 직후, 여기에 야당 이외의 다양한 세력이 가담하면서 범국민투쟁위가 결성되었다. 당시 야당은 한일회담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박정희정권의 대일외교상의 저자세를 공격하면서 권력장악을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참여했다면, 범국민투쟁위는 민족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결성된 최초의 범국민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상층부였으며, 야당 외에 다양한 세력이 참여한 연합전선적 조직이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3선개헌에 대응하여 '3선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는 유신체제를 거치면서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 된 상층연합전선의 기초가 되었다. 1971년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재야지식인 연합체라 할 수 있는 '민주수호국민협의회'가 결성되었고, 이는 이후 1974년 '민주회복국민회의'와 1979년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군부권위주의체제가 강화되면서 1960년대 후반에 명망있는 인사들의 소집단 정도로 출발한 재야운동은, 1970년대 들어와 조직적 움직임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이처럼 당시 재야운동세력은 어떤 직업적 활동가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종교인, 지식인, 박해받은 정치인 등이 주축이 된 운동세력으로 특징 지워진다.²⁾

1980년대 들어와서 재야운동은 70년대와는 다른 양상을 띠었다. 제반 부문운동과 연결이 되었고, 정권반대의 수준을 넘어서 체제 비판적이고 변혁지향적인 목표를 설정 하였던 것이다. 1983년 청년활동가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결성된 이후,

2) 예컨대 70년대 대표적인 재야세력의 전국조직인 '민주회복국민회의'의 경우 전체 71명 가운데 정계인사 23.9%, 종교계인사 28.2%, 학계·문인·언론인·법조인·독립투사·여성계 등이 47.9%였다. 이와 같은 구성을 지닌 재야운동세력을 대략 네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혁신정당이나 야당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정치활동에 환멸을 느껴 정치판을 떠나든지 독재정권에 의해서 공개적·합법적 정치활동이 금지된 경우, 둘째, 종교계·언론인·교수·문인·법조인 내의 진보적 인사들이 독재정권의 인권탄압 및 반민주적·반민족적 행위에 반대해 참여한 경우, 셋째, 60년대 이후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1970년대 민중운동 속에서의 활동을 통해 참여하는 경우 등이다. 박태균, 「한국민주주의의 주도세력」,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창작과 비평사, 1993), 171-2쪽 참고.

각 부문영역에서 운동단체들이 속출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 재야명망가 중심의 '민주통일국민회의'가 창립되었다. 이처럼 양분된 재야운동은 2·12 총선을 거치면서 통합하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이하 민통련)을 결성하였다. 민통련은 이후 반독재민주화, 반외세자주화, 민중생존권 투쟁을 전개하여 전체운동의 구심체가 되었고, 전국적인 개헌투쟁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 민통련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이하 국본)를 결성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주헌법쟁취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출범한 국본은 6·10고문살인은폐 규탄집회, 6·18최루탄 추방의 날, 6·26평화대행진 등으로 이어지는 6월민주화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여 마침내 집권세력으로부터 6.29선언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6.29선언 이후 확장된 합법적 정치공간과 정당정치의 활성화는 결국 재야운동세력의 새로운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변화된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재야운동은 반합법 전선체운동,³⁾ 기존 야당에 참여한 재야 입당파,⁴⁾ 독자창당운동⁵⁾ 등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기존야당에 참여한 재야운동세력의 당내 활동은 야당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1. 기존정당 참여

1) 평화민주통일연구회의 평민당 참여

제 13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선언하고 그를 지원했던 문동환, 박영숙, 서경원, 양성우, 박석무, 김영진, 이철용, 이상수, 정상용, 이해찬 등 97명의 재야인사⁶⁾가 1988년 2월 3일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과 올바른 정책정당 육성을

3) 반합법 전선체운동은 1989년 1월 21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1990년 4월 21일 '민자당일당독재 분쇄와 민중기본권 쟁취 국민연합', 1991년 12월 1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등으로 이어지면서 변화하였다.

4) 재야입당파는 13대 총선에서 평민당에 입당한 '평화민주통일연구회', 14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입당한 민주연합, 6·27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한 통일시대국민회의 그룹, 그리고 15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합당한 개혁신당 그룹 등을 말한다.

5) 독자창당운동은 13대 국회의원총선을 앞둔 1988년 3월 7일에 민중의당을 창당하여 선거에 참여하였고, 이후 1991년 지방선거와 14대 총선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 11월 3일 민중당을 창당하여 선거에 참여하였으나 제도 정치에 적응하지 못하고 해산하였으며, 그 일부는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에 입당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6) 당시 평민당에 입당한 재야입당파의 출신별 구성을 보면, 노동운동 김용석 등 3명, 농민운동 서경원 등 3명, 빈민운동 고명권 등 14명, 민권운동 임채정 등 23명, 학생운동 김한정 등 18명, 변호사 이상수 등 5명, 교수 문동

위한다고 선언하며 평민당에 입당하였으며, ‘평화민주통일연구회’(이하 평민연)을 결성하여 당내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집단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지역구 및 전국구에 23명이 출마하여 15명이 당선되어,⁷⁾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재야운동세력의 합법적 정치활동의 기반을 열었다. 이는 평민당 당내 의원 71명중 21.1%를 차지하는 상당한 것이었다. 그외 높은 지지율을 받고도 낙선하였거나 출마하지 않은 재야입당인사들도 당의 주요당직을 맡아 당의 일상업무를 담당하였고, 사회운동의 요구를 당내에 반영시키려고 하였으며, 당원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등 당내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다.⁸⁾ 또한 당 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전화시켜 집중화되어 있는 당내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당내민주화를 위한 당 조직과 운영의 개혁방안을 실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평민연은 입당과정에서 기존 평민당과 당 개혁방안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데 실질적인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2) 범민주통합수권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

두번째 민주화운동세력의 집단적 참여는 14대 총선을 앞두고 이부영과 유인태 등 이른바 ‘민주연합파’의 민주당 입당이였다. 당시 재야운동세력 중 전민련을 탈퇴한 합법 정당 건설을 위한 모임인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이하 민연추)는 야당과의 관계정립 순서를 둘러싸고 선통합론과 선창당론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민연추의 두가지 목표 즉,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당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과 당면

환 등 8명, 종교인 고영근 등 3명, 문인 양성우 등 4명, 유가족 및 구속자 가족 배은심 등 9명, 기타 박진화 등 7명 이었다. 성명서,〈〈평화민주당에 입당하는 우리의 입장〉〉(1988. 2. 3) 입당자 명단 참고.

- 7) 재야입당파는 평화민주통일연구회를 창립하여 조직적으로 4·26총선에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지역구로는 강금식(성동갑), 임채정(노원을), 김학민(서대문갑), 이상수(중랑갑), 이해찬(관악을), 고광진(동대문을), 이철용(도봉을), 양성우(양천갑), 김용석(인천북구갑), 이찬구(성남을), 권운상(구리), 송진섭(안산), 장순식(평택), 장동찬(예산), 서경원(영광·함평), 박석무(무안), 김영진(강진·완도), 유인학(영암), 박상천(고흥), 정상용(광주서갑), 오탄(전주갑) 등 21명이 출마하여 강금식, 이상수, 이해찬, 이철용, 양성우, 이찬구, 서경원, 박석무, 김영진, 유인학, 박상천, 정상용, 오탄 등 13명이 당선되고, 전국구로는 박영숙(전국구 1번), 문동환(전국구 12번)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 8) 평민당 초기에 평민연출신 재야입당파는 상임고문(문동환), 부총재(박영숙), 중앙정치연수원장(임채정), 대외협력위원장(이길재), 기획조정실장(이명준),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오대영), 사무차장(이경배), 부대변인(장영달), 중앙정치연수원 부원장(유시춘), 정책실 부실장(고광진), 당보부주간(김학민) 등 주요당직을 맡았으며, 각 실·국에 26명의 회원이 참여하였다. 특히 정치연수원을 맡은 평민연은 평민당 초기 2년 동안 체계적인 당원교육프로그램인 ‘평민대학’을 만들어 총 10기에 걸쳐 1,200여명을 교육시켰으며, 대외협력위원회를 줄곧 맡아 재야운동과의 연대의 폭을 넓히고 사회적 요구를 당의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새로운 지평을 열며: 제 3차 정기총회자료집』(1990), 73-9쪽.

한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위해 야당 및 모든 민주세력과 제휴·협력·연합을 모색한다는 것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전개된 두 세력간의 갈등은, 결국 1990년 5월 30일 선통합파가 민연추를 탈퇴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민연추를 탈퇴한 이부영, 제정구, 유인태 등의 선통합파는 야권통합을 주장하며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이하 통추회의)를 추진하였으나 실패로 끝나고, 1990년 12월 21일 통추회의를 공식적으로 해체했다. 이후 이부영과 유인태 등은 민주연합을 거쳐 (구)민주당과 통합하고, 제정구 등은 신민당과 (구)민주당이 통합한 이후의 민주당에 입당하였다. 이들은 14대 총선에서 18명을 출마시켜⁹⁾ 이부영, 유인태, 제정구, 박계동, 원혜영 등 5명을 당선시킴으로써 원내기반을 확보하였다. 이들은 민주당내에서 전당대회의 자유경선을 주장하는 등 당내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평민연 등 당내 개혁세력과 함께 자정결의와 당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1992년 7월 29일 평민연 그룹과 자정결의한 의원 등과 통합하여 ‘민주개혁정치모임’을 결성하여 민주당내 개혁그룹으로 자리잡았다.¹⁰⁾

3)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세번째 민주화운동세력의 기존 정당 참여는, 1995년 6·27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김근태 등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이하 통일시대국민회의)의 민주당 입당이였다.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야운동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반합법 전선체 중심론, 민주당 강화론 또는 범민주연합당론, 독자창당론 등의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통일시대국민회의는 민주당강화론 또는 범민주연합당론을 주장한 그룹이었으며 그 대표적인 인사가 김근태였다.¹¹⁾ 통일시대국민회의는 사회운동과 정치운동 분리의 필요성을 제기하

9) 민주연합 활동을 하다 14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이부영(서울 강동갑), 유인태(서울 도봉갑), 박계동(서울 강서갑), 고영하(서울 노원갑),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김재규(부산 금정), 황백현(부산 진구을), 이호웅(인천 남동구), 이강철(대구 중구), 김진태(대구 남구), 김동현(안산·옹진), 원혜영(부천 중구), 제정구(시흥·군포), 유남선(춘천시), 신연관(청원), 안희대(예천군), 홍순우(통영·충무), 이광희(김해) 등 18명이다.

10) 민주당내 민주개혁정치모임에 속한 의원은 19명으로 전체 의원 97명의 19.6%였으며, 지구당위원장도 63명이나 되어 민주당내 주요한 세력이 성장하였다. 1992년 5월 25일 전당대회 경선에서도 박영숙, 이부영, 노무현 등 3명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11) 반합법전선체 중심론은 전국연합 강화론과 부문 대중운동 강화론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지역연합과 전교조, 한청협, 한총련 등 대중조직의 상층과 중간활동가들이 이 입장을 취하였다. 독자창당론을 주장한 세력을 보면, 재야도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 적응력을 가지고 제도정치의 틀 안에서 기성정치권의 신보수주의와 대안경쟁을 해야 한다면서 제 3의 진보적 개혁신당을 주장한 그룹과, 이와 다른 맥락에서 독자적인 진보정당 창당을 준비한 그룹이 있다. 한편 이상의 세 그룹과 달리 정권에 진입한 이른바 ‘권력결합론’이 생겨났다. 이우재

였다. 여기서 사회운동이 기존의 전국연합 등 재야단체가 해오던 운동과 시민단체의 활동을 말한다면, 정치운동은 악법개폐, 환경, 핵, 통일운동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대중들에게 여론을 환기시키는 일상적 정치활동과 제도정치영역에 대한 개입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치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¹²⁾ 결국 통일시대국민회의를 대표하는 김근태, 방용석, 김희선 공동대표 등 20여명이 민주당에 입당하였다. 이들은 6·27지방선거를 대비해 조직책 선정과 공천과정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당내기반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지방선거 후 민주당 분당과정에서 대부분 국민회의에 참여해 15대 국회의원총선에서 지역구 11명¹³⁾이 출마해 김근태(도봉갑), 유선호(군포), 김영환(안산갑), 천정배(안산을) 등 4명이 당선되었고, 전국구 12번으로 방용석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제도정치권의 기반을 확보하였다. 또 당내의 개혁적인 의원들과 함께 '열린정치포럼'¹⁴⁾을 결성하여 당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응집력은 약한 편이다.

4) 개혁신당그룹

네 번째 민주화운동세력의 정당참여는 15대 총선을 앞두고 나타난 개혁신당그룹이다. 이들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시민운동을 한 일부세력과 '정치개혁시민연합(이하 정개련)'과 '젊은연대' 그룹이 합쳐 1995년 11월 27일 개혁신당을 결성하고, 며칠 후인 12월 4일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제도정치권에 참여하였다. 15대 총선에서 장을병, 홍성우, 장기표, 성유보, 서경석, 장신규 등 지역구 50여명¹⁵⁾과 이미

정태운, 김문수 등 (구)민중당 핵심인사들은 "진보는 상대적 개념이며 지금은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이 진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에 동참해서 개혁을 완성시켜야 한다"면서 민자당에 입당하였다.

- 12) 김근태 통일시대국민회의 공동대표는 1994년 3월 13일 기자회견에서 당면한 정치적 과제는 냉전적이고 수구적인 기득권 세력을 극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 재야 및 부문운동세력을 망라하는 민주개혁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하고 아울러 이러한 대통합의 과제는 근본적인 개혁과 정부의 통일정책 1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겨레>> 1994년 3월 14일자.
- 13) 통일시대국민회의 인사 중 새정치국민회의로 15대 총선에 참여한 인사는 다음과 같다. 김근태(서울 도봉갑), 김희선(동대문갑), 심재권(강동을), 김영환(안산갑), 천정배(안산을), 유선호(군포시), 최민화(수원시 권선구), 박우섭(인천 남구갑), 이광희(경북 영주), 선병렬(대전 동갑), 박선하(강원 원주) 등 11명이었으며, 김근태, 김영환, 천정배, 유선호 등 4명이 당선되었다.
- 14) 국민회의내 개혁적인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열린정치포럼은 민주당 때 민주개혁정치모임의 임채정, 김영진, 이상수, 이석현, 이해찬, 장영달, 조홍규, 조성준의원 등 7명과 통일시대국민회의의 김근태, 김영환, 방용석, 유선호, 천정배 등 5명이 주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국민회의에 참여한 신기남, 양성철, 류재건, 이기문, 정호선, 정한용, 정동영, 김성곤 의원과 기존 당직자 출신 설훈, 이협, 정균환 등 전체 25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당내 개혁적 인사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경, 김홍신, 하경근, 곽영훈 등이 전국구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지역구에서 장을병만 당선되었고 전국구에서 이미경, 김홍신, 하경근 등 3인이 당선되어 겨우 제도정치권의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개혁신당의 중심적 역할을 한 홍성우, 장기표, 성유보, 서경석 등 대부분이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사실상 중심을 상실하고 말았다. 특히 15대 총선 이후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의 총재 경선에서 홍성우 총재 후보가 패배하고, 그 이후 많은 인사들이 당을 떠나면서 제도정치권에서의 집단적 활동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5) 국민정치연구회와 ‘젊은 한국’

다섯 번째 민주화운동세력의 정당참여는 1997년 12월 대선에서 수평적 정권교체에 의해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개혁의 진행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의 개혁을 지원하며, 사회적 기풍의 형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혁의 중심을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민주화운동세력 중심의 정치조직은 1999년 3월 창립한 국민정치연구회(이하 국민정)와 5월 창립한 ‘젊은 한국’이다. 국민정과 ‘젊은 한국’은 기존의 평민연, 민주연합, 통일시대국민회의, 개혁신당 그룹과는 그 구성 및 참여형태에서 좀 달랐다. 평민연 등 기존의 제도권 진출방식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인사들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한 후 기존 정당에 입당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면 국민정과 ‘젊은 한국’은 조직구성단계에서부터 이미 제도 정치권에 진입한 세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정 창립의 기반은 97년 정권교체라는 정치지형의 변화와 94년 통일시대국민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94년 11월 민주화운동 인사 600여명이 모여 ‘국민운동’과 ‘정치운동’의 양대 운동방향을 천명하며 결성한 통일시대국민회의의 86명이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95년 2월에 당시 민주당에 입당했고,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뒤 96년 4·11총선에서 김근태 등 5명이 당선되어 의회에 진출하였다.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뒤

15) 당시 개혁신당그룹으로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에 출마한 인사는 다음과 같다. 서울: 임종인(성동갑), 김성식(동대문을), 신형식(중랑갑), 조명원(중랑을), 이기택(강북을), 이문옥(노원을), 장두환(은평갑), 박경산(서대문갑), 장신규(마포을), 서경석(양천갑), 한경남(영등포갑), 장기표(동작갑), 김기정(관악갑), 이상호(관악을), 곽일훈(서초갑), 홍성우(강남갑), 이재경(강남을), 박인제(송파갑), 인천:안영근(남구을), 서상섭(연수구), 정화영(부평구을), 대전: 김덕경(동구갑), 김홍철(중구), 윤석대(서구갑), 경기:김대권(수원 팔달구), 성유보(성남 분당구), 최병권(안양시 동안구갑), 송운학(안양시 동안구 을), 이홍중(부천시 소사구), 여익구(군포시), 강원:최윤(춘천시 갑), 박정원(원주시갑), 장을병(삼척시), 충남:문석호(서산·태안) 등이었다.

이 단체는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정부가 기득권세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세력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개혁의 토대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정을 창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정의 참여인사는 이들만이 아니었다. 새롭게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주화운동인사 뿐만 아니라, 평민연, 통일시대국민회의 등 기존에 이미 당에 들어가 당내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의원 및 당직자들도 상당수 참여하였던 것이다.

‘젊은 한국’의 구성방식도 국민정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차이라고 한다면, 국민정의 주요 구성원이 70년대부터 민주화운동 등에 참여했던 40~50대 장년층 인사가 주축을 이루었다면, ‘젊은 한국’은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른바 ‘386세대’라고 하는 30대 청년층이 주축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즉 ‘젊은 한국’의 뿌리는 80년대 학생운동의 중심축을 형성했던 ‘전국대학생총협의회(이하 전대협)’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창립 후 국민정과 ‘젊은 한국’은 국회 및 선거 개혁, 정당개혁 등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새천년민주당 창당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였다. 국민정의 이재정 이사장과 유시춘 정책실장, ‘젊은 한국’의 이인영과 임종석 등 몇 명은 새천년민주당 창당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여 창당 초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는가 하면, 양 조직의 회원 중 상당수는 창당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새천년민주당이 창당된 후 전개된 16대 총선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는 양 조직의 참여범위와 비중은 좀 달랐다. 국민정의 경우,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당내 기반을 확보한 회원을 제외한 새로운 회원 중 상당수는 공천에서 탈락하였으며, 지역구에서 출마한 새로운 회원도 대다수 낙선하였다. 다만 전국구에서 이재정 이사장만이 의회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반면에 ‘젊은 한국’의 경우 회원 중 상당수가 지역구에 공천 받아 지역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종석, 송영길 등이 당선되어 의회진출의 성과를 얻었다.

국민정과 ‘젊은 한국’을 배경으로 16대에 의회에 진출한 인사들은 기존에 정치에 참여하고 16대에서도 의회에 진출한 민주화운동세력과 함께 당내에 ‘열린정치포럼’을 구성하였으며, 정치개혁의 당면과제에 대해 공동 활동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민주화운동세력이 집단적으로 기존 정당을 통해 정당에 참여한 것은 다섯 번에 걸쳐 있었다. 여기서 거론된 경우 외에도 91년 신민주연합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한 후 신민당과 합당한 경우, 개혁노선을 중심으로 대중운동을 추진하다 개인자격으로 새천년민주당 창당과정에 참여한 민주개혁국민연합의 경우 등이 있다. 그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화운동세력의 기존정당 참여방식의 정치운동은 독자창당그릅

과는 달리 제도정치권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일정하게 성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내에서 독자적인 그룹을 형성하여 당내 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기존 야당 내 재야운동세력의 응집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져 기존 야당집단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졌고, 야당의 분열과 함께 분화되어 제도정치권 내의 영향력은 감소하였으며, 오히려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역량이 축소되어 기존 야당세력에 견인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계기가 있을 때마다 당내 개혁과 민주화를 위해 시도되는 노력과 의지는 당내 조직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2. 독자정당 창당

1) 민주화추진협의회(이하 민주협)과 신한민주당

민주협의 창립과 신한민주당의 창당은 다른 독자정당 창당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1987년 이후 민주화운동세력의 독자창당 그룹이 그동안 비제도영역에서의 민주화운동을 기반으로 추진된 정치참여의 한 유형이었다고 한다면, 민주협과 신한민주당의 창당은 기존 권위주의 시대에 정치를 하다가 정치규제를 받아 정치활동이 금지된 정치세력이 중심이 되어 정치적 개방기를 맞아 제도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재진입한 정치참여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1983년 2차 연금 당시 김영삼의 단식투쟁 이후 보수야당세력의 중심적 위치에 있던 이튼바 김영삼씨 중심의 상도동계, 그리고 김대중씨 중심의 동교동계가 각각 4인씩 8인회를 구성하여 민주투쟁기구를 결성하기로 하여 결성된 것이 민주협이다. 민주협은 공동의장에 김영삼, 고문에 김대중, 공동의장대행에 동교동계의 김상현을 선임하여 집행부를 구성하고 14인의 운영소위원회를 두었다. 운영소위는 양 계보 동수의 원칙에 따라 7:7로 구성되었다. 이후 민주협은 정치적 해빙과 함께 정치활동 규제로부터 풀려난 기존 정치인을 중심으로 신한민주당을 창당하여 1985년 12대 총선에 참여하였다. 신한민주당의 창당과정에는 민주협의 구성요소인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범 민주세력과의 연대원칙'을 내세워 제 3차 정치활동규제법에서 해금된 구 신민당 정치인들로 일컬어지는 비민주계의 50:50 구성 안배에 따라 12대 공천과 당직을 배분하였던 것이다.

신한민주당의 창당은 정당정치의 새로운 지형을 형성하였다. 유신체제가 10·26사건으로 몰락한 후 찾아온 '서울의 봄'을 쿠데타로 중단시킨 신군부가, 폭력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후, 물리력에 기반한 자신의 적나라한 폭력의 성격을 은폐하고 제도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권력의 최소한의 정당성이라는 외피를 갖추려고 창출한 것이 다당제라는 정당구조였다. 정치활동을 중지시키면서 제도정치권의 핵심적 정치인들을 정치의장에서 추방시킨¹⁶⁾ 신군부는, 민주정의당(이하 민정당)을 창당하고, 피규제자들 가운데 국민에 대한 영향력은 적으면서도 순응적인 자들을 해금시켜, 여당과 '친구당'의 관계를 맺게 될 야당을 창당토록 했던 것이다.¹⁷⁾ 1981년 2월 11일 대통령선거에 이어 치러진 3·25총선에서, 민정당은 전국구 포함 151석을 확보하고 민한당은 81석, 국민당은 25석을 확보하여, 여당 중심의 다당제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정당구조가 신군부의 의도대로 선거를 통해 관철된 것은, 집권초기의 막강한 물리력을 기반으로 하여 영향력있는 구정치인들을 거세하고,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를 마련한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는데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급조된 다당제 정당구조 속에서, 정당정치는 유신체제와 마찬가지로 집권세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 위한 지배수단의 한 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정당정치 구도는 정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신한민주당의 창당과 1985년 2월 12일 치러진 12대 총선을 계기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12총선은 집권세력에게는 선거절차를 거침으로써 취약한 정당성을 보완하는 한편, 쿠데타 주도세력을 정치일선에 배치하고 분열공작에 의해 야당을 무력화시키며, 80년 이후 성장해 온 사회운동세력을 국민대중과 분리시킴으로써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예상외였다. 여당인 민정당이 5개 선거구에서 낙선하고 도시지역에서 패배하여¹⁸⁾ 전국구 61석 포함 148석에 그친 반면, 총

16) 전두환정권은 비대의적 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1961년 당시 군부쿠데타 이후에 시행되었던 「정치활동정화법」과 동일한 「정치풍토쇄신법」을 제정하여 기존 정당을 해산하고 구정치인을 포함하여 811명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이광로 입법의원 외 7명의 이름으로 제출되어 입법회의의 최초 법률이 된 이 법은 "5공화국의 새 정치구도 구축을 위한 사전정치작업의 일환임은 물론이다. '과거의 책임'을 물어 정치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소급입법으로 수일 뒤 정치쇄신위원회의 형식적 심사와 재심판정을 거쳐 567명의 참정권이 박탈당하게" 된 것이다. 한국일보 정치부, 『빼앗긴 서울의 봄』(한국문원, 1994), 199쪽.

17) 문용직, 「한국의 정당정치: 민주화과정을 중심으로」(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36쪽.

18) 85%라는 국민의 높은 관심속에 치러진 2·12총선은 사실상 민정당의 패배였다. 국가관료기구의 동원과 아낌없는 선거자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체득표의 35.2%만을 얻었는데 반해, 신민당과 민한당으로 나뉘어 치룬 실질적인 야당의 전국득표율은 48.9%로 민정당에 비해 무려 13.7%나 더 높았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대도시에서 민정당이 27~29%에 불과한 지지를 얻었는데 반해 신민당은 서울

선 2개월 전에 급조된 자생적인 야당 신한민주당이 제 1야당으로 부상하고, 민한당과 국민당이 제 2, 제 3야당으로 몰락하였던 것이다. 더우기 총선 직후 민한당이 급속히 붕괴하여 신한민주당에 흡수·통합됨으로써, 신한민주당은 전체의석 276석의 1/3이 넘는 102석을 확보하여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는 거대야당으로 부상하게 되었다.¹⁹⁾ 이로써 신군부 지배구조의 일부분이었던 다당제 구조가 사실상 무너지고, 양당제 구조가 재출현하게 된 것이다. 양당제 구조하에서 정당정치는 이전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한민주당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정치범 석방, 김대중의 사면복권 등을 정치이슈화 시키면서, 신군부 정권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신한민주당은 2·12총선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권력재편 요구를 기반으로 하여,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락기구' (이하 민국련)를 결성하는 등 반독재도전연합을 형성하여 직선제 개헌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집권세력이 합의개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타협적인 입장을 취하자, 영수회담 등을 통해 정치체연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하였다. 1986년 5.3인천사태 후 진행된 전두환-이민우회담, 국회헌법특위 구성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반독재도전연합의 동요와 와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헌법개헌에 대한 신군부의 강경한 입장과 함께 이른바 '이민우 구상'이 등장하면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탈당하여 1987년 5월 1일 통일민주당을 새로 창당하였으며, 이는 결국 광범위한 국민의 정치적 진출을 끌어냄으로써 마침내 '6월항쟁'으로 연결되어 직선제개헌을 얻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6월항쟁은 집권세력의 6·29선언을 계기로 일단 종결되었으나, 그 열기는 7~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연결되었다.

지역의 전지역구에서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독득표율이 민정당에 비해 15.7%나 상회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20~30대 젊은 유권자층을 주축으로 하여 광범위한 중간계급으로 형성되어 있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군부권위주의체제에 대한 이른바 '중산층의 반란'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현우, 「1980년대 한국인의 선거행태」, 『한국의 선거 I』(나남, 1993), 213~4쪽; 최장집, 『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까치, 1989), 216~9쪽

19) 제 12대 총선결과를 보면, 민정당은 득표율 35.2%에 전국구 61석 포함 148석, 신민당은 득표율 29.3%에 전국구 17석 포함 67석, 민한당은 득표율 19.7%에 전국구 9석 포함 35석, 국민당은 득표율 9.2%에 전국구 5석 포함 20석이였다. 그리고 야권통합이 대체적으로 완결된 1985년 4월 초순경에는 민한당의 대다수 의원이 신민당으로 입당하여 신민당의 의석수는 102석으로 증가하였다.

2) 민중의 당

1987년 대통령선거과정의 주요한 민주화운동세력 세 분파 중 하나인 독자후보운동의 추진주체들은 소장파를 중심으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표방하고, 민중정당 결성추진위원회(이하 민추위)를 결성하였으며, 이후 '민중의 당'을 창당하여 13대 총선에 참여하였다.

6월항쟁의 성과와 함께 쟁취된 12대 대통령 선거에서 양김의 분열과 민주화운동의 내분으로 인해 이뤄진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재집권은 야당의 각 진영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전체에 커다란 실망과 좌절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1988년 총선정국은 야권 및 민주화운동진영 통합논의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13대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진행된 야권통합논의는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양김의 지도체제를 보다 강화시키는 데도 어느 정도 기여하면서 정당정치는 결국 지역균열에 의해 재정렬되었다. 반면 이러한 결과는 민주화운동세력에게는 정치적 선택의 폭이 그만큼 협소하게 되었고 동시에 보다 단순화되었다. 즉 지역균열에 기초하는 보수정당체제에 참여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와 왜소한 형태지만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경우이며, 그 후자의 경우의 하나가 민중의 당이라고 할 수 있다.

야권통합논의는 선거직전에 무산되었지만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흐름도 선거직 전까지 계속되었다. 12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중후보 백기완 선거운동 전국본부'가 재편된 민추위와 신당추진지역협의회, 그리고 새정치준비모임 간의 통합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민중'과 '국민대중' 중 어느 것을 중심에 둘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무산되자, 결국 민중적 대의에 입각한 광범한 선전과 선동, 그리고 지역대중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상대적으로 민중적 이념의 확고성에 기반한 민추위와 신당추진지역협의회에 다수파를 중심으로 1988년 3월 7일 창당한 것이 민중의 당이다.

노동자, 농어민, 도시빈민 등 민중에 기반하여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는 진보적 대중정당을 표방한 민중의 당은 224개 지역구 중 그 7.1%에 불과한 16개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켰으며, 선거결과는 당선자 전무, 전체 유효투표득표율 0.33%, 후보당 평균득표율 4.5%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처럼 민중의 당의 정치참여는 그 성과가 미약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 4월 혁명과 함께 등장한 진보정당이 1961년 5.16쿠데타와 함께 사라진 이후 22년 만에 새롭게 등장한 진보정당의 또 다른

실험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13대 총선이 끝난 후 정당 성립의 법적 조건을 갖추진 못한 민중의 당은 즉시 새로운 조직통합작업에 나섰으며, 1988년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 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민중의 당을 '민중정당재건추진위원회' (이하 재건위)로 재편할 것을 결의하면서 해산하였다.

3) 한겨레민주당(이하 한겨레당)

13대 대선과정에서 후보단일화운동에 동참한 일부 세력인 새정치추진모임은 야권통합논의와 통합신당 논의가 무산되자 경북과 충남을 중심으로 한 신당추진지역협의회와 결합하여 1988년 3월 29일 한겨레당을 창당하였다. 재야정치인과 학생운동 출신 중심으로 창당된 한겨레당은 '양심적인 각계층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드는 애국적 국민정당'을 당의 기본성격으로 설정하고, '범야권통합과 그를 통한 국민의 민주화 투쟁전선에의 재결집을 위한 정치세력화'를 기본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성격과 목표를 설정한 한겨레당은 총선목표를 ①기존의 보수적 정치질서와 구별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 ②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성실히 대변하고 과학적으로 정식화, ③당내 유력 후보의 당선을 통해 의회 내 교두보 마련, ④민주화운동권의 대중성 강화 등으로 설정하고, 전체지역구의 28.1 %에 해당하는 63명의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면서 13대 총선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와 같이 한겨레당의 기본 출발점은 기존야당의 분열과 부패, 그리고 이에 따른 13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패배였다. 반독재투쟁전선을 새롭게 정비하고 애국적 대의에 충실한 새로운 정치인이 제도권 정치에 광범하게 진출할 것을 국민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즉 이들은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세력의 구축을 지향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총선결과는 당선 1명, 전체 유효득표율 1.28 %, 후보별 평균득표율 4.55 %였다. 한겨레당은 후보별 평균득표율 면에서 민중의 당과 비슷할 정도로 그 성과는 미약한 것이었으나, 1명을 당선시킴으로써 법률상 정당 존립근거는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당으로 당선된 1인이 당과 자신의 역량으로 당선되었다기보다는 평민당후보가 후보등록 무효가 된 상태에서 평민당 입당을 조건으로 당선되었고 당선 직후 평민당에 입당함으로써, 사실상 한겨레당의 원내 교두보는 없어진 상태에서 한겨레당은 정당으로서 별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명목상으로만 남게 되었다.

4) 민중당

1988년 5월 민중의 당을 재편한 민중정당재건추진위원회(이하 재건위)는 그동안 통합논의 및 공청회를 통해 접근한 내용을 기초로 9월 14일 한겨레민주당과 통합을 결의하고 진보정당결성을 위한 정치연합(이하 진보련)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그 동안의 분열과 대립을 반성하고 진보련을 기초로 해서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단체, 모든 민주인사들을 결집시켜 진정으로 민중의 이해를 대변할 진보적 대중정당을 창당할 것을 밝혔다.²⁰⁾ 창당작업을 추진했던 진보련은, 1년여가 지난 후 영등포을구 재선거 이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에서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다 좌절되자 탈퇴하고 별도로 새정당창당을 위한 임시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세력과 함께, 1989년 11월 10일 진보적 대중정당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이하 진보정당 준비모임)으로 전환하면서²¹⁾ 진보정당 건설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1990년 초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간의 3당합당으로 태어난 민주자유당(이하 민자당)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연합의 필요성이 제기됨과 함께 진보정당건설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진보정당 준비모임과 이부영 등 새롭게 전민련을 탈퇴한 인사들은 4월 13일 447명의 추진위원으로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이하 민연추)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반민자당 대중투쟁의 일환으로 1990년 5월 12일 열린 비상시국대강연회를 계기로 '선주체형성 후연합'을 주장하는 세력과 '전면적인 야권연합'을 주장하는 세력간의 의견대립이 증폭되면서, 전면적 야권연합을 주장한 민연추 집행부 일부가 이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에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독자적 진보정당 건설에 주력했던 민중정당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전노추)도 민연추에 합류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6월 21일 1021명의 발기인으로 민중당(가칭) 창당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여 합법정당으로서 법적 조건을 갖추었

20) 진보련은 한겨레민주당 대표위원 출신의 최병욱, 제정구, 유인태 그리고 재건위의 정태운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사무처장에 유인태, 사무차장에 염만숙, 정책기획실장에 이경재, 대변인에 김부겸 등을 선임하면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진보정당결성을 위한 정치연합, 〈진보정치〉 창간호, 1988년 10월 19일.

21) 진보정당 준비모임은 대표간사 이우재, 기획반 책임간사 장기표, 정책반 책임간사 정태운, 언론대책반 책임간사 박계동, 선전반 책임간사 이석원, 조직1반 지역담당 이호웅, 조직2반 부문담당 안희대, 조직3반 노동부문 담당 조춘구, 연대사업반 책임간사 정문화, 총무반 책임간사 원혜영 등 9개 실무반을 두었다.

다.²²⁾ ①민주중추의 원칙, ②민주쟁취의 원칙, ③민권수호의 원칙, ④민주세력 연합주의의 원칙, ⑤민주재정확립의 원칙, ⑥진취적 당풍확립의 원칙 등 창당 6대 원칙을 확정한 창당준비위원회는 7월 26일 49개 지역 조직책 결정, 9월 3일 6개 조직책 결정 등 55개의 조직책과 지구당을 창당하여 법적 지구당 수를 확보한 후 11월 10일 중앙당을 창당하여 14대 총선을 준비하였다.

1992년 3월에 실시된 14대 총선에서 민중당은 전체 지역구 237개의 27.8%인 66개 지역에 공천하였으나, 실제 출마한 지역구 후보는 전체의 21.5%인 51명이었다. 그 결과는 참패였다. 단 하나의 의석도 차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 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득표율인 단 2%도 얻지 못하였던 것이다. 민중당 후보는 최하 0.88%에서부터 최고 27.1%의 지지까지 다양하게 득표하였으며, 후보 평균 득표율은 6.25%였다. 그러나 전체 유효득표율은 정당존립조건인 2%에도 못 미치는 1.5%였으며, 결국 3월 30일 법적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5) 국민승리 21

1996-97년 노동법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은 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발판으로 진보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선거에 민주진보진영의 독자후보를 내기로 결의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전국연합, 진보정치연합, 정치연대, 기타 경제민주모임 등 소그룹 및 개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1997년 9월 7일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면서 국민승리21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어 같은 해 10월 26일 국민승리21을 결성, 12월 18일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승리21은 조직활동가들의 반발로 이어진 “일어나라 코리아” 구호 파문, 대기업 노동자들의 반발로 이어진 “재벌해체” 구호 파문 등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인정받기에는 턱없이 낮은 득표율(1.2%, 약 30만표)을 마주하면서 청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즉, 주요 참여조직이었던 전국연합은 “대선 시점”에서 ‘대선 종결과 더불어 조직탈퇴 결의’를 하고 선거 종료와 더불어 관계를 청산했으며, 선거국면에 한시적으로 결합했던 정치연대도 선거종료와 더불어 관

22) 민중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의 주요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창당준비위원장: 이우재, 김상기(공동), 상임고문: 백기완, 권처홍, 조직책 심사소위원장: 이우재, 정당정책기초위원장: 장기표, 조직위원장: 조춘구, 기획조정실장: 정태윤, 사무처장: 이재오 등

제를 청산했고, 심지어 국민승리21을 가능하게 했던 조직적 결의의 주체인 민주노총에 서조차 해산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승리21은 98년 2월 21일 2차중앙위원회를 통해 15대 대통령 선거를 평가하고 진보정당결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조직으로 활동을 전환하기로 결정한다. 뒤이어 국민승리21은 98년 4월 24일 실업대책본부를 결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98년 6월 3일 4대 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된다. 국민승리21은 선거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민주노총과의 협력 하에 공동후보 50명을 선정, 기초단체장 3명을 비롯한 23명의 당선자를 내는 성과를 거두게 되고, 이로써 국민승리21은 선거종료 후에도 선거운동의 성과를 딛고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국민승리21은 1998년 9월 17일 3차중앙위원회를 열어 진보정당 창당에 동의하는 모든 민주진보세력과 함께 늦어도 99년 5월까지 진보정당을 창당하기로 결의하고 창당방법과 창당까지의 사업방향을 결정한다. 이러한 끝에 국민승리21은 1999년 7월 10일 진보정당준비위원회 출범에 앞서 진보정당결성을 결의하고 해산되었다.

6)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97년 대선 때 조직된 국민승리21을 계승, 1999년 4월 18일 결성되어 진 진보정당추진위원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그 해 1월 30일 창당대회를 열면서 출범하였다. 민주노동당은 민중의 당, 민중당 등의 과거진보정당이 소수 상층인사의 주도로 건설된 반면, 민주노총, 전국빈민연합 등의 대중조직과 국민승리21을 비롯한 여러 정치세력이 참여하여 만든 정당이었다.

이러한 대중적 기반 위에서 건설된 민주노동당은 2000년 4.13 총선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당선이 유력시되던 울산 북구에서 후보자선출을 둘러싸고 민주진보세력의 고질병이던 당내 '정파'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당선에 실패하고²³⁾, 결국 21개 지역에 출마하여 전국에서 223,261표(1.2%)를 득표하는 데 그치고 만다.

23) 당선실패가 단지 정파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객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즉 민주노동당의 후보선출 절차와 방식 등 제도적 요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울산지역이 현대라는 대기업 노조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전개되어 왔음으로 인해 형성되었을 대기업 노조세력과 중소기업 노조세력들 간의 이해관계 상의 갈등이 정파 간 갈등이라는 요인에 중첩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마지역 평균득표율은 13.1%를 거두었으며, 4개 선거구에서는 10%~19.9% 득표를, 다른 4개 선거구에서는 20% 이상의 득표를 올려 가능성을 인정받게 된다.

이후 민주노동당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8.1%의 득표를 올리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곧이어 치러진 2002년 12월 19일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출마하여 95만표(3.9%)가 넘는 득표를 함으로써 제도정당으로서의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3. 기타 참여

1) 백기완후보 추대위원회와 백선본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대통령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지게 된 상황에서 대통령선거에 대한 재야 및 민족민주운동권의 참여방식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된다. 당시 운동진영에서는 민주후보단일화가 결렬되자, 김대중 후보 비판적 지지론, 후보단일화 고수론 및 민중독자후보추대론 등으로 입장이 갈려 있었다.

이 중 민중독자후보론에 섰던 진영에서는 80년대를 경과하면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민중운동권의 성장을 토대로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존의 보수 야당후보와 차별적인 선거구호를 가지고 선거에 참여했다. 바로 이때 구성된 것이 백기완후보 추대위원회이다.

백기완후보 추대위원회측은 민주후보단일화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백기완 후보와 김영삼 후보 그리고 김대중 후보 간의 막판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제안, 종용하는데, 이때 백기완 후보진영은 양김 후보들에게 후보단일화를 위한 5대 연립정부안을 제시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학살범 처벌, 둘째, 국가보안법 폐지, 셋째, 악덕채벌 해체, 넷째, 통일지향적 민주정부 수립, 다섯째, 노동자·농민의 정치투쟁의 자유보장. 그러나 결국 단일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백기완 후보는 선거국면의 마지막에 민주진영의 분열을 막는다는 이유로 사퇴하고 말았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백기완 후보를 지지하였던 진영은 이어서 실시된 13대 총선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정당의 성격은 합법적 대중정당으로서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양심적 지식인 등 민중을 기반으로 한다고 천명하였다. 그 결과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민중의 당'이 창당된다.

이후 백기완 후보는 1992년에 실시된 14대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데, 이때 구성된 것이 백기완후보선거운동본부(일명 백선본)이다. 민중의 당이 88년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실패로 귀결되면서 해산한 가운데,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움직임들은 민중당, 한국노동당 등의 창당과 양당 통합으로 이어졌으나 이는 91년 광역의회선거와 92년 총선에서 역시 실패, 다시금 해산되고 만다. 이후 진보정치연합, 민중회의, 사회당추진위(이하 사추위) 등으로 나뉘어진 채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운동이 전개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다시 민중운동진영을 결집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위하여 대선을 계기로 하여 구성된 것이 백선본이었다.

14대 대선에서 백선본은 이미 김영삼 후보가 여당의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으므로, 김대중 후보 역시 출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7년 13대 대통령선거와 달리 후보단일화를 위한 시도를 추구하지 않고,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독자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한다. 다만 당시 기층대중조직들의 전선체였던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등은 87년 13대 대통령 선거 때와 같이 민주대연합론을 주장하면서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수행하는데, 백선본으로 결집한 세력들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일관되게 주창하면서, 13대 대선과 달리 끝까지 대통령 선거에 임하게 된다.

하지만 결국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백기완 후보진영은 100만표 득표를 목표로 내세웠으나 30만표도 얻지 못하는 초라한 결과를 내고,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모색하던 세력들은 부분통합과 분화(민중회의와 사추위는 통합하여 민중정치연합을 구성하였으나, 이후 민중정치연합은 다시 진보정치연합과 노진추와 노정연 등으로 분화되기에 이른다)의 길을 다시금 겪게 된다.

2) 영등포 을구 재선거 범민주대책위

1989년 8월 18일 벌어진 영등포을구의 국회의원선거는 형식상 일개 지역구의 재선거에 불과했으나, 여기에 집중된 각 당과 민주화운동세력, 그리고 언론과 국민대중의 높은 관심은 재선거라는 형식적 의미를 뛰어넘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가까이로는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을 기폭제로 하여 시작된 이른바 ‘공안정국’의 향후 향배를 결정짓는는 것이며, 멀게는 1988년 총선이후 노태우정권의 전반적

인 정치를 중간점검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선거였던 것이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 통일운동과 5공청산투쟁 등을 주요한 축으로 전개해 온 민주화운동 세력을 기반으로 1989년 초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하는 공안정국이 시작되면서 민주화운동 진영은 내부분열과 조직적 운동중심의 부재, 이로 인한 국민대중과의 결합력 약화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등포을구 재선거가 도래하자 민주화운동 진영은 그 참여문제를 둘러싼 논의의 결과 우여곡절 끝에 전민련이 참여하는 범민주세력의 단일후보를 내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조직적 결의의 수준은 높지 않았다. 영등포을구 재선거가 실시되기로 결정된 후 진보정치연합은 적극적 탐색을, 전민련은 신중한 논의를 하던 시점에 각계각층의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우선 실질적인 세력을 구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진보정치연합의 가세와 전민련의 참여결정으로 7월 '영등포을구 재선거 범민주대책위'를²⁴⁾ 발족시켜 후보선정 등 재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전민련의 참여결정이 애매한 까닭에 기존의 모임이 대책위의 핵심으로 남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고영구변호사를 후보로 선정한 민주화운동진영은 대책위를 '범민주단일후보 고영구 선거대책본부'²⁵⁾로 확대하여 대책위원장 홍성우(변호사), 공동본부장 이우재(전민련 대표), 황인철(변호사), 박찬중(서명파 의원), 사무총장 이철(서명파 의원), 대변인 장기욱(서명파 정치인) 등으로 조직을 구성한 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범민주후보 진영은 '독재복귀와 야합정치에 대한 단호한 심

24) 대책위 준비위원은 다음과 같다.

학계: 김찬국(연세대), 김진균(서울대), 백낙청(서울대), 임진창(서강대), 이수인(영남대)

법조계: 조준희, 고영구, 홍성우, 황인철, 정성철, 조영래

문인: 김규동, 고은, 이호철, 신경림, 김지하

재야: 계훈제, 백기완, 이우재, 김정남

종교계: 지학순, 박형규, 오충일, 이정학, 명진

여성: 김한림

정계: 양순직, 조순형, 박찬중, 장기욱, 홍사덕, 제정구, 이철

25) 선거대책본부 대책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학계: 김찬국(연세대부총장)외 89명

법조계: 홍성우(변호사)외 138명

문화예술: 고은(시인)외 39명

전민련: 계훈제(고문)외 95명

종교계: 박형규(목사)외 51명

여성: 김한림(민가협 초대회장)외 60명

정계: 조순형외 50명 등

관'이라는 청산의 내용과 '억압·분열의 정치구조 청산과 새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선거논리를 전개하였으나, 그 역량의 부족으로 7.1%의 득표에 머물고 말았다. 이는 13대 총선시 민중의 당, 한겨레당 득표에 비하면 상당한 신장이며, 4당구조의 일각인 공화당 득표율 4.9 %를 압도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나, 3위인 민주당 득표율 18.8 %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건설될 정당의 한계 또한 내포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것은 당시 범민주후보 진영의 현실정치력 부족과, 상대적 측면인 기존 4당구조의 강고함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평가되며,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민주화운동 진영 전반의 해결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을구 재선거의 참여를 계기로 민주화운동 진영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그 방도로서 정당건설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촉발되었다는 점, 민주화운동세력에게 기존의 합법정당에 관한 논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 그리고 정당건설의 본격적인 실현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는 점 등은 중요한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3) 기타

그 외에 정당이나 선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민주화운동세력의 조직적 활동으로서 1992년 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후보'를 선정해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한 '전국연합'의 선거참여활동, 2000년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천후보', '낙선후보'를 선정하여 조직적으로 낙천 및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활동을 전개한 '총선연대' 활동 등도 정치운동의 한 유형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전국연합은 '민주대연합론'을 바탕으로 민주당과의 제휴를 도모하였는데, 후보공천 또는 선거강령 합의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만 독자적으로 6명의 후보를 추천, 총선에 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전교조 출신의 후보(박순보)가 29.0%를 득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득표로 전원 낙선하였다. 이 밖에도 일부 노동자들이 노동자정치세력화 추진세력과는 별도로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총선에 출마한 사례들도 있었다.

이에 반해 2000년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시민운동단체들의 결집체인 총선연대에 의해 전개된 '낙천·낙선운동'은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시민사회운동으로서 꼽히고 있다.

총선연대의 직접적인 계기는 시민운동단체들의 국감연대활동에서 비롯되었는데, 이의 후속작업으로 낙천·낙선운동이 기획되었고, 전국의 480여 단체가 결집한 것이었다. 총선연대는 정당으로 하여금 무능부패, 부적격, 반인권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천반대운동을 시작하였다. 총선연대는 총 115명의 공천반대자를 발표하고 공천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다양한 캠페인 전개와 집회를 통해 공천철회운동을 벌여 정치사회를 압박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이후 낙천자 명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된 후보들을 중심으로 병역, 납세, 재산형성 등에 비리가 있는 후보 86명에 대한 낙선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또 그중 22명을 집중낙선대상자로 선정, 명단을 발표하고 낙선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개된 낙천·낙선운동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시민들과 시민운동단체들이 정치개혁의 주체라는 당위성과 가능성을 입증했고, 둘째, 900여 시민단체들이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해 조직적 활동을 한 점 역시 시민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셋째, 다양한 퍼포먼스와 행사, 젊은 유권자를 겨냥한 페스티벌 개최, 버스투어 등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 전개와 특히 인터넷을 통한 발빠른 대응과 광범위한 소통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적 수단과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총선연대의 활동은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혁파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정치문화적인 차원에서 '네거티브적' 전략에 머무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낙선대상을 대신할 인사를 발굴하지 못함으로써 낙선이 정치권 개혁과 연결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게 되며, 네거티브 운동에 치중하다보니 대안정치세력인 진보정치세력과 연대를 이루지 못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Ⅲ. 민주화운동세력 정치운동 연구현황

1. 연구현황

민주화운동세력의 정치운동에 대한 연구 경향을 형태와 내용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자. 우선 형태별 경향을 보면 석·박사 학위논문, 단행본, 일반논문, 저널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각 형태별 연구경향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정치운동 연구경향

구분	학위논문	단행본	일반논문	저널	계
수량	110	72	148	147	477

1. 형태별 구분에 따른 분류 : 총 문헌 477건²⁶⁾

※종합 : 정치참여 일반과 한국민주화와 정당정치관련 포함

※기타 : 여성 · 시민 · 민중운동진영의 정치운동(선거시기 투쟁 등) 포함

1) 학위논문(110건)

내용 참여방식	총괄	참여동기 / 논쟁	활동사항	결과 및 평가	계
종합	52	1	1	3	57
기존정당 참여	2				2
독자정당활동	20	1		3	24
개별참여					
기타	26		1		27
계	100	2	2	6	110

2) 단행본(72건)

내용 참여방식	총괄	참여동기 / 논쟁	활동사항	결과 및 평가	계
종합	40	3	12	6	61
기존정당 참여			2		2
독자정당활동	2		1		3
개별참여					
기타	6				6
계	48	3	15	6	72

26) 해제문헌을 포함, 뒤에 참고로 수록한 문헌목록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다.

3) 일반논문(148건)

내용 참여방식	총괄	참여동기 / 논쟁	활동사항	결과 및 평가	계
종합	77	2	1	23	103
기존정당 참여					
독자정당활동	10	5		9	24
개별참여					
기타	11			10	21
계	98	7		42	148

4) 저널(148건)

내용 참여방식	총괄	참여동기 / 논쟁	활동사항	결과 및 평가	계
종합	25	9	17	15	66
기존정당 참여	3	2	7	8	20
독자정당활동	7	11	11	6	35
개별참여	2	5	3	3	13
기타	6	3	1	3	13
계	43	30	39	35	147

2. 범주별 분류

내용 참여방식	총괄	참여동기 / 논쟁	활동사항	결과 및 평가	계
종합	○40 ●52 ▲77 ▼25	○3 ●1 ▲2 ▼9	○12 ●1 ▲1 ▼17	○6 ●3 ▲23 ▼15	287
기존정당 참여	●2 ▼3	▼2	2 ▼7	▼8	24
독자정당활동	○2 ●20 ▲10 ▼7	○1 ● ▲5 ▼11	○1 ● ▼11	○3 ● ▲9 ▼6	86
개별참여	▼2	▼5	▼3	▼3	13
기타	○6 ●26 ▲11 ▼6	▼3	●1 ▼1	▲10 ▼3	67
계	289	42	57	89	477

○ : 학위논문 ● : 단행본 ▲ : 일반논문 ▼ : 저널

2. 문헌해제 현황

문헌해제는 정치운동 참여방식과 내용별 분류에 입각, 종합(기존정당참여/독자정당 활동 모두 포함, 한국 민주화/정당정치 관련), 기존정당참여, 독자정당활동, 기타와 총괄(참여동기/논쟁, 활동사항, 결과 및 평가를 모두 포함)과 참여동기/논쟁, 활동사항, 결과 및 평가 등으로 나누어 대상논문을 선정,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연구의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²⁷⁾

우선 문헌해제는 전체 45개 논문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내용별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종합이 15개, 기존정당참여가 1개, 독자정당활동이 18개, 기타가 11개이다.²⁸⁾ 해제 대상 문헌선정은 우선 학위논문과 학술관련 계간지 등에 게재된 연구논문 등 연구물 형태로 된 것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와 구체적인 사례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연구들을 기준으로 하였다.

범주별 해제문헌 현황을 보면, 주로 종합과 독자정당, 그리고 기타 등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때 특히 독자정당활동에 대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범주별 연구현황(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수집문헌 중 대부분이 이들 분야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때 특히 기존 정당참여에 대한 연구가 매우 희귀함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저널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⁹⁾

전체 해제문헌 45편 중 학위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이 종합에서 3편, 기존정당참여는 0편, 독자정당활동 3편, 기타 0편이고, 석사학위 논문은 종합 3편, 기존정당참여 1편, 독자정당활동 9편, 기타 4편이다. 석박사를 모두 포함, 학위논문이 전체 해제문헌 중 23개로 약 5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박사학위 논문(총 6편)이 석사학위 논문(총 17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치참여 관련 주제가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그리 선호되고 있지 못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해제대상이 되지 않은 논문들까지 포함한 전체 수집 문헌(참고문헌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수집문헌 477편 중 학위논문은 110편이고, 그 중 박사학위 논문은 20편 남짓에 불과하다.

이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종합에 포함되는 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한 논의들이고, 또

27) 이때문에 참고문헌을 포함, 전체 수집문헌에서는 저널류를 포함하였지만, 해제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28) 해제문헌의 구체적 목록은 '해제문헌 차례' 참조.

29)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는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다루는 맺음말에서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참고문헌 분류상 여러 범주에 중복하여 목록을 작성하였음을 고려할 때, 박사학위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도로 작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위논문 중에서도 박사학위논문은 물론, 석사학위 논문들 역시 해제대상 문헌들은 대부분이 종합이나 독자정당활동에 치중되어 있음도 알 수 있는데, 이는 애초 수집문헌들 자체를 비롯, 정치참여운동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한국 민주화에 대한 연구선상에서 독자정당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상기 두 분야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제대상 문헌 중 단행본은 전체수집문헌이 72권임에도 불구하고, 2권에 불과한데, 이는 수집한 단행본 자체가 정치참여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사정은 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단행본 형태로 정치참여운동이 조망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 해제대상 문헌 중 일반논문은 매우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수집문헌 477개 중 일반논문은 148개로 제일 많을 뿐만 아니라, 해제문헌 45편 중에서도 21편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해제 대상 자체를 연구물 형태 중심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체 수집문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참여운동에 대한 연구가 (학위논문 중 석사학위 논문을 제외하고는) 주로 일반논문의 형태로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반논문 역시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일반적 대주제 하에서 선거 등 ‘특수정치국면’에 있어서의 민주화 운동세력들의 활동에 대한 분석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정세분석류’의 글로, 범주별 분류에 있어 종합 및 독자정당 운동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총괄이 역시 주종을 이루고 있다.³⁰⁾

Ⅳ. 맺음말: 정치운동 연구 성과와 과제

이상과 같은 문헌해제 현황을 중심으로 정치참여운동의 연구성과와 향후 과제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30) 사실 정치참여운동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참여동기와 결과, 평가 등이 분리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때, 이러한 내용상 분류는 다소 분류를 위한 편의적 측면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각 연구물들이 주로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그 연구가 어떤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기준으로서는 유용하다고 할 것이다.

우선 성과적 측면을 볼 때, 정치참여운동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단지 제도외적 존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도내로 진입하여 제도개혁을 시도해왔다는 중요한 움직임들에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실천적 측면에 있어서 제도개혁은 지속적인 민주주의적 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점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들은 그것이 갖는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그것들을 규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성과적 측면을 최대화하고 한계적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대부분의 해체대상이 된 연구들이 정치참여운동을 한국 민주화 운동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여, 그것이 이룬 성과와 한계 및 그 요인분석에 집중되어왔다는 점에서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성과와 한계를 규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구조적 수준에서부터 행위수준에서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까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정치참여운동에 대한 연구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정을 통해 상생발전해온 정치-사회(학) 분야의 이론적 논의도 충실하게 수용해왔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민주화 운동의 맥락에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는 그간 한국 제도정치 영역에서 '배제' 되어온 노동세력들을 비롯한 진보세력들의 정치참여운동에 집중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바, 이는 정치참여운동에 대한 연구가 주로 한국의 지속적인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하지만 정치참여운동에 대한 연구는 명확한 한계 또한 갖고 있으며, 이로부터 향후 도출되는 과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문헌해제 현황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형태분류에 있어서 박사학위 논문과 단행본 형태의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왔음을 의미한다.

또 정치참여운동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연장에서 주로 독자정당운동에 대해 집중되어왔다는 점은 그것이 갖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한계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즉 그간의 정치참여운동에 대한 연구들은 기존 정당에의 참여상황에 대해 별다르게 주목하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데, 이 때문에 한국정치의 핵심적 문제인 정당민주주의와 이것의 발전에 있어서 민주화 운동세력이 끼친 영향들이 포착되고 있지 못하다.³¹⁾ 물론 본 글에서 앞서 언급한

31) 이때문에 본 글에서는 다소 '의도적'인 차원에서 기존 정당에 대한 참여운동에 대해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 하였음을 밝혀둔다.

기존 정당참여운동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그것이 얼마나 정당민주주의의 함양에 기여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떠나 그 자체가 독자정당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규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찰은 향후 과제로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정치에 있어서도 민주화 이후 제도정당정치가 갖는 중요성이 증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정당들의 자기변신 노력이 그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정당정치의 '정상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요구되는 연구과제라고 할 것이다. 특히 민주화 이후 민주화 운동세력들의 기존 정당참여는 현실적으로도 독자정당참여의 경우보다 더욱 광범위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하겠다.

끝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주제별이나 내용별 범주화에 있어서 종합과 총괄 등에 주로 치중되어 있다는 점 역시 정치참여운동에 대한 연구가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는 박사학위 논문과 단행본 형태의 연구부족에서 거론하였듯이 연구의 심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가령 기존 정당참여에 대한 연구부족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민주주의의 문제를 비롯, 정당정치의 제도적 측면의 문제와 정치참여운동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결합되어지지 못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결국 향후 정치참여운동에 대한 연구는 이에 대한 조사작업이 한정하고 있거나 분류하고 있는 기준들을 재조정할 수 있는 질적으로 보다 심화된 연구, 그리고 주제와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그 폭을 보다 확장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Ⅱ . 해제 문헌 차례

II. 해제 문헌 차례

1. 종합(기존정당 참여/ 독자정당활동 모두 포함, 한국 민주화/ 정당정치관련)

- 신동환, 1994, 「한국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 분석 : 1985-1987.6.29까지의 경험적 연구」, 서강대, 석사
- 신성규, 1993, 「한국 민주화과정에서의 진보정치세력에 관한 연구 : 1987-1992년까지의 진보세력을 중심으로」, 충남대, 석사
- 공덕수, 2000, 「한국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 연구 : 시기별 실태와 유형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
- 이기호, 1997, 「한국의 민주화과정과 사회운동 네트워크 : 1987-1996」, 연세대, 박사
- 하태호, 1996, 「한국 민주화과정에 있어서 정당체계의 형성과정 및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
- 정연정, 1993, 「현대 한국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
- 고성국, 1989, 「한국의 민족민주대중운동사」, 한국사회연구소 편 『대중정당 - 민족민주대중정당의 이론과 현실』, 백산
- 손학규, 1993, 「한국정치의 진보세력」,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집
- 정영태, 1999, 「인천시민의 생활여건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치참여양태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인하대학교
- 조현연, 1995, 「재야운동과 정당정치의 상호연관성」, 안희수 외 『한국정당정치론』 나남
- 임현진, 2002,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는 가능한가?」, 『5회 비판사회학대회 자료집』, 한국산업사회학회
- 손호철, 1999, 「97년 대선으로 본 민중운동 그리고 선거공간」,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 손호철, 1993, 「14대 대통령선거와 민중운동: 평가와 전망」, 『전환기의 한국정치』, 창작과 비평사
- 정관용, 1989, 「정당운동의 관점에서 본 영등포을구 재선거」, 한국사회연구소 편, 『대

중정당 - 민족민주대중정당의 이론과 현실』, 백산
최장집, 1993, 「1992년 대선과 한국의 민주적 이행」,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2. 기존정당참여

김진옥, 1994, 「민주화추진협의회에 관한 연구 : 지역당구조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

3. 독자정당활동

박상병, 1997, 「한국의 진보정당에 관한 연구 -민중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하대,
박사
유효상, 1993,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진보정당의 형성 -한국과 브라질의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 고려대, 석사
김진향, 1996, 「한국 혁신정당 정착화의 제약요인 : 87년6월 민주화운동 이후를 중심
으로」, 경북대, 석사
현재호, 1996, 「진보정당운동의 실패원인에 관한 연구 : 정당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
김정진, 1999, 「한국 진보정당의 연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중심으로」, 국민대 정
치대학원, 석사
전영돈, 1988, 「한국 혁신정당의 전개과정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박진서, 1991, 「1980년대 한국혁신정당 연구 : 한겨레민주당과 민중의 당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
최석만, 1996, 「민주화와 진보정당의 성립에 관한 연구 : 한국의 민중당과 브라질의
PT(노동자당)를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
황인원, 1991, 「1950년대 한국정치와 진보당 - 진보당의 사회운동사적 위상을 중심
으로」, 서강대, 석사

- 전성환, 1987, 「진보당 연구 : 그 불법화에 이르는 과정과 성격」, 서울대, 석사
- 노찬백, 1995, 「한국의 진보적 군소정당의 실패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
- 손호철, 1999, 「차이와 반복 '4.19 혁명' 과 '6월항쟁' 이후의 진보정당 비교」,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 장상환, 1999,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현실성」, 『동향과 전망』, 가을
- 최문성, 1991, 「합법 비합법 정당의 변혁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 장상환, 2000, 「진보정당 운동을 둘러싼 쟁점과 반론」, 『동향과 전망』 통권 44호, 봄
- 고성국, 1989, 「정계개편의 전망과 정당운동의 위상」, 한국사회연구소 편, 『대중정당 - 민족민주대중정당의 이론과 현실』, 백산
- 정영태, 1992, 「진보정당의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한국과 국제정치』 제8권 제2호, 가을-겨울
- 조현연, 2002, 「2002년 6·13 지방선거 평가와 16대 대선 전망 :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제5회 비판사회학대회 자료집』, 한국산업사회학회

4. 기타(시민·노동운동의 정치참여,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0, 『한국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윤모린, 2000, 「한국 민주화과정에서 운동조직의 역할에 관한 연구 : 1987년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
- 은수미, 2001, 「한국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경쟁 그리고 헤게모니 : 이념과 쟁점형성을 통해서 본 사회운동의 동시성장과 정치세력화」, 서울대, 석사
- 권재홍, 2001, 「한국의 시민사회와 낙천·낙선운동에 관한 연구 :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
- 배덕신, 2001,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에서의 민주노동당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
- 이갑윤·이현우, 2000, 「16대 총선에서의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한국정치학회 2000년도 연례학술회의 자료집』, 한국정치학회
- 이광일, 2002, 「6.13 지자체 선거와 시민운동의 정치참여 그 변화와 한계」,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하반기.

- 정대화, 2000,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시민운동단체의 정치개입 -투표율 지역감정 세대 교체와 총선연대 낙선 운동의 상관성」, 『동향과 전망』 (통권 45호), 여름
- 조현연, 1995, 「사회운동단체의 선거참여 결과와 함의」, 『동향과 전망』, 가을
- 차명제, 2001, 「한국에서의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모색」, 『2001년도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한국정치학회
- 김호기, 2000, 「총선연대와 시민운동의 정치적 과제」,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참여연대 · 한국노총, 『노동운동 · 시민운동 · 진보정당 발전전략을 위한 공동워크숍자료』

Ⅲ. 문헌 해제

Ⅲ. 문헌 해제

1. 종 합(기존정당참여/ 독자정당활동 모두 포함, 한국 민주화와 정당정치관련)

가. 총괄(참여동기/ 논쟁, 활동사항, 결과 및 평가를 모두 포함)

1. 제목 :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의 진보정치세력에 관한 연구 - 1987~1992년까지의 진보세력을 중심으로³²⁾-

2. 저자 : 신성규

3. 발행년도 : 1993

4. 쪽수 : 85쪽

5. 형식 :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 충남대

7. 목차

1. 서론 :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한국사회의 정치구도와 진보정치세력

가. 한국사회의 정치구도 : 진보정당의 객관적 조건

나. 87년 이후 정치구도의 변화 : 민주화 과도기 정권의 등장

다. 이데올로기 구도의 변화

(1) 합법정당 이전의 논쟁

(2) 합법정당 논쟁

3. 민주화 과정에서 출현한 진보정당

가. 87년 대선과 88년 총선 시기 민족민주운동

나. 88년 국회의원선거와 진보정당 : 세 분파

(1) 평화민주통일연구회

(2) 한겨레 민주당

32) 기존정당 참여 및 독자정당활동의 논쟁/ 활동 범주와 중복

(3) 민중의 당

다. 88년 총선 시기 진보정당에 대한 평가

라. 88년 이후 진보정당 통일 운동 : 민중당

4. 진보세력의 진로모색

가. 민주화 과정에 있어 통치양식의 변화

(1) 변화의 본질

(2) 변화의 내용

나. 92년 총선과 진보정치세력

(1)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2) 통합 민중당

(3) 민중진영 단일정당 추진위원회

(4) 민중회의 준비위원회

다. 진보정당의 한계와 가능성

5. 결론

8. 연구목적

본 논문은 1987년 이후 한국의 정치를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단계로 보면서 이러한 정치구도의 변화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즉, 1987년 이후의 정치구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면서 87년 이후 등장한 진보정치세력 또는 진보정당의 이념적 지향과 실제 정치역량의 수준을 고찰하고 있다.

9. 연구내용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사회운동은 정치적 영역 또는 제도적인 정치구도가 심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등장하며 민주적인 정치제도의 복원과 정치공간의 확장을 추구하는 기능적인 배경을 갖는다. 시민사회의 정치화는 바로 권위주의 정권의 배타적 정치구도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회운동세력이 제도권 내의 정당으로 전화·정착될 수 있을 때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화된 정권으로 성공적 이행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6.29선언을 통하여 민주화의 시작을 알렸지만, 보수야당의 분열(87년 대선)과 진보세력의 분열로 인하여 강력한 반대세력이 형성되지 못하여 정치구도의 변

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또한 사당화 된 한국의 정당행태 역시 민주화 이행을 더디게 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 이행과 정당정치의 제도화 그리고 정치영역에서 소외된 세력의 제도권 진입에 있어 진보정치세력의 존재의미는 여전히 심대하다. 그러므로 진보세력이 정치제도권으로 진입하여 진정한 정당정치가 가능할 때 한국의 민주화는 더욱 앞당겨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진보세력은 기존의 정치구도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고, 정당정치 제도화의 모범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중앙 명망가 중심의 활동양식에서 지구당 중심의 활동양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지구당 수준에서 중앙당까지 경선제도를 도입하고 정당의 강령과 정책을 일반당원의 의사를 결집하여 시행할 때 진보세력이 갖는 이념의 분열과 조직의 미비는 보완될 수 있다.

둘째, 진보세력은 물리적인 직접적 대결이 아니라 정치력을 통한 대안세력으로서의 대중의 지지를 획득해야하는 바, 이념의 모호성과 추상성을 과감히 현실적 정치역량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10. 연구의의

이 논문은 비교적 포괄적으로 87년 이후 진보정치세력의 움직임을 다루고 있다. 80년대 학생운동 논쟁을 비롯하여, 87년 대선을 거치면서 88년의 총선과 92년 총선 시기를 중심으로 각 진보정치세력의 입장과 논쟁을 소개하면서 각 세력들의 분열과 통합을 정리하고 이들이 실제 제도권에서 벌인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이 논문은 당시 진보정치세력의 움직임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1. 제목 : 한국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 분석 -1985~1987.6.29 까지의 경험적 연구

2. 저자 : 신동환

3. 발행년도 : 1993

4. 쪽수 : 89쪽

5. 형식 :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 서강대

7. 목차

1. 서론 : 문제제기, 기존연구 검토,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2. 민주(반대)세력
 - 가. 야당
 - 나. 학생
 - 다. 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
 - 라. 종교세력
 - 마. 노동세력
 - 바. 6월 민주화운동의 성격
3. 집권세력
 - 가. 정부
 - 나. 민주정의당
 - 다. 군부
 - 라. 6.29선언의 성격
4. 상황적 요인
 - 가. 국제적인 영향
 - 나. 경제
 - 다. 분단
5. 결론

8. 연구목적

이 논문은 행위자를 집권세력(정부, 민정당, 군부)과 반대세력(야당, 학생, 민통련, 노동, 종교)으로 구분하고 이 행위자들의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민주화과정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9. 연구내용

6월 민주화 운동 자체는 국민운동본부의 목표인 직선제를 쟁취한 완결된 운동으로 보면서 기존의 이론적 검토들에 대한 보완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논의들, 첫째 경제를 독립변수로 보는 것으로 경제적인 불만 또는 자본주의 모순에 연관시켜 설명하는 시각, 둘째 대치상황에서 온건파의 주도에 의한 타

협으로 보는 시각, 셋째 6월 민주화운동이 제한적이었다는 시각들에 대한 재검토를 하면서 경험적 사실에 입각하여 6월 민주화운동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전략적 선택이론에서 간과한 구조적인 측면을 보완하면서, 반대세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집권층의 분열 여부, 6월 민주화운동이 타협인가의 여부, 군이 자유스러운 선택의 대상이었는가, 온건세력이 자율적 기반을 가지고 급진세력을 통제하여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였는가를 밝혀 전략적 선택이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이런 논의를 밝히기 위해 85년부터 87년 6월29일까지의 제정치집단 - 정당, 재야, 학생, 군부 - 등의 활동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집권세력은 분열되지 않았고, 따라서 집권세력의 분열에 의해 반대세력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다음으로, 온건세력의 급진세력 통제여부에 대해서는 급진세력의 온건화에 의해 가능했다고 결론짓는다. 즉, 국민운동본부의 결성은 야당과 재야의 관계에서 야당이 통제하고 주도한 것이 아니라 급진세력의 온건화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10. 연구의의

이 논문은 6월 항쟁의 성격을 이론적 논의에서 내려와 구체적인 사실의 검토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들을 반박하고 6월 항쟁이 갖는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논의의 수준을 매우 구체적이고 협소하게 설정하여 6월 항쟁은 직선제 쟁취로서 완성되었다는 결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85년부터 87년까지 주요 재야정치세력을 야당, 학생, 종교, 노동, 정치조직 등 비교적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각 세력들이 직선제 쟁취라는 최소 공약수를 목표로 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그리고 전략적 선택이론이 갖는 자의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제목 : 한국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 연구 - 시기별 실태와 유형 비교를 중심으로³³⁾ -

2. 저자 : 공덕수

3. 발행년도 : 1999

33) 기타의 총괄과 중복

4. 쪽수 : 223쪽
5. 형식 : 학위논문(박사)
6. 발행처 : 동국대
7. 목차
 1. 서론 :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가. 노동조합과 정치활동
 - 나. 노동조합운동의 이념과 유형
 - 다.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의 조건과 유형
 3. 선진국의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
 - 가. 선진국의 일반적 사례
 - 나. 영국의 노조와 정당의 관계(상호의존형)
 - (1) 노동조합회의(TUC)와 노동당의 창당
 - (2) 노동조합과 노동당의 전통적 협력관계
 - (3) 노동조합과 노동당의 새로운 관계 모색
 - 다. 미국의 노조와 정당의 관계(노조독립형)
 - (1) 미국 노동조합 산업총연맹(AFL-CIO)의 정치활동
 - (2) 과격 노동조합운동과 사회주의 정당
 - (3) 미국 노동조합 산업총연맹과 정당의 관계
 4. 한국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의 실태
 - 가. 노동조합의 초기 정치활동 시기
 - (1) 미군정기
 - (2) 자유당정권 시기
 - (3) 민주당 정권 시기
 - 나. 권위주의적 노동통제 시기
 - (1) 제 3공화국 시기
 - (2) 유신체제 시기
 - (3) 제 5공화국 시기
 - 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쟁취를 위한 투쟁 시기
 - (1) 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

(2) 제 6공화국 시기

(3) 문민정부 시기

5. 한국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에 대한 평가와 방향

가. 시기별 노조와 정당의 관계의 유형

(1) 노동조합의 초기 정치활동 시기

(2) 권위주의적 노동통제 시기

(3)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쟁취를 위한 투쟁 시기

나. 노조와 정당의 관계의 특성

(1) 구조·상황적 요인

(2) 법적·제도적 특성

(3) 시기별 내용별 특성

다. 진보(혁신)계열의 정치세력화

(1) 노동조합의 자주적 정치세력화

2) 진보(혁신)정당의 정치세력화

라. 한국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의 방향

(1) 영·미 사례와 한국

(2) 바람직한 방향

6. 결론

8. 연구목적

첫째, 한국의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활동(특히 정당과의 관계)을 전개해 왔는지를 고찰하고,

둘째, 한국 노동조합과 정당과의 관계발전에 대한 시기별 유형과 구조·상황적 요인 및 법적 제도적 요인을 분석하여 시기별 특성을 고찰하고, 노동조합이 추진한 자주적인 정치세력화의 시도와 한국 진보(혁신)정당의 생멸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방향을 살펴보고,

셋째, 노동조합과 정당과의 관계의 대표적인 유형인 영국의 TUC와 노동당의 관계(상호의존형), 미국의 AFL-CIO와 정당의 관계(노조 독립형)를 고찰하고 한국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비교, 분석하여 한국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주는 교훈을 파악하고,

넷째로, 한국의 노동조합과 정당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할 것인가를 제

시하여 한국 노동조합의 미래지향적인 정치활동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9. 연구내용

영국과 같이 노동조합회의(TUC)이 직접 정당을 설립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집권 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지만, 반대정당 집권 시 노동조합 약화정책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미국의 AFL-CIO는 무당파정책을 고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각 후보자에 대해 그의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다.

한국에서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의 유형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인정되었던 노조의 초기 정치활동시기에는 정당의존형(전평과 조선공산당)과 정당주도형(대한노총과 자유당)이었고, 권위주의적 노동통제시기는 국가코포라티즘적 형태였으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쟁취를 위한 투쟁시기에는 한국노총은 친노동자정당과 정책연합 그리고 민주노총은 기존정당의 관계를 지양하고 진보정당 결성을 통한 노조와 정당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남북분단과 반공이데올로기, 이념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기존 보수정당의 정치독점, 정치 하부구조로서의 노동조합의 미발달, 정치영역에서의 지역주의 균열구조와 탈계급적인 투표행태, 소수정당에 불리한 선거제도와 정치자금의 부족, 보수주의적 성향의 유교적 문화유산, 노동조합의 낮은 재정자립도(재정, 예산문제)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역량 약화 등이 진보(혁신)정당의 출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본 논문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정당과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다.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과 정당간의 관계는 아직 진보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낮고, 진보정당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사회에서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군소정당이므로 노동조합은 미국처럼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당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결론짓고 있다. 이 논문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노동조합이 정당, 특히 진보정당과의 관계에서 취해야할 입장을 역사적, 구조적 분석과 함께 노동조합의 주체적 조건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이 그것이 궁극적인 노조와 정당간의 관계가 아닌 현시점에서 고려해야할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하겠다.

1. 제목 :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사회운동 네트워크 : 1987-1996

2. 저자 : 이기호

3. 발행년도 : 1996

4. 쪽수 : 245쪽

5. 형식 : 학위논문(박사)

6. 발행처 : 연세대학교

7. 목차

1장 서론

1절 연구목적과 문제제기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장 사회운동네트워크에 관한 이론과 분석틀

1절 기존 연구검토와 이론적 자원

2절 사회구성모델과 운동네트워크

3장 민주화과정에 나타난 운동네트워크와 구조변화

1절 운동네트워크의 분화: 1987년의 정치변동

2절 운동네트워크의 중층화: 민주화국면 I (1988-1992)

3절 운동네트워크의 다원화: 민주화국면 II (1993-1996)

4장 운동네트워크의 전략과 정치적 성격

1절 사회운동의 환경변수와 운동네트워크 구조변화의 상관성

2절 다조직적 장의 형성과 운동네트워크 구조변화의 특징

3절 운동네트워크의 정치적 성격

5장 결론

8. 연구목적

이 논문은 1987년 6월항쟁을 전후하여 1996년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구조변화를 설명함으로써 민주화 이행기에 나타난 사회운동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9. 연구내용

이 논문은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운동네트워크의 구조변화를 정치적 기회구조와 시민 사회적 맥락의 구성변수들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로부터 이 논문은 운동네트워크

를 통해서 사회운동의 정치적 성격을 평가할 때, '사회운동의 성공은 상호간에 비판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소집단이 많이 발생하고 이들 간에 긴밀한 유대가 구축될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운동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조직 간의 자원이 공유될 수 있고 공동의 이슈를 구성할 수 있을 때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해왔다'라는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

또 운동네트워크는 운동단체들 간의 협력차원(간사들 간의 협력)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넘어서 대중들의 조직화와 집합적 상징으로 확산해나갈 수 있는 시민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전할 때, 운동네트워크는 화폐와 권력이라는 체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결국 사회운동의 에너지는 노동자, 농민, 여성 등 변혁지향적 민(民)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조직의 틀과 이들의 도덕적 자원이 설득력(사회적 정당성을 갖춘)있는 집합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이것이 하나의 공론으로 형성되어 갈 때 체계 및 정치사회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이니셔티브를 행사하고(해방의 정치) 일상적 정치공간에서 참여의 정치(생활의 정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정치참여운동과 관련 이 논문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민주화 이행 이후 운동네트워크의 다원화 과정을 추적하면서(3장 3절) 재야세력들의 제도정치권으로 진입양상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국이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면서 그것이 사회운동가 및 조직들을 제도권 정치영역으로 어떻게 참여시켰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국의 시기 사회운동조직을 구성하는 인적자원의 경우, 제도권정치로의 흡입력이 크게 발동하였고 정치세력화의 필요에 따라 전선운동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등 운동지도세력의 공동화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파악한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에 참여하는 재야출신의 활동가와 지식인들이 늘어나면서 반체제운동의 위상은 더 이상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다. 심지어 여당과 청와대가 재야인사를 적극적으로 유입하게 되자 여당에 대하여 개혁성향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선점해 왔던 야당(94년 민주당)조차도 개혁적 수준에서 더 이상 차별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당과 청와대로의 재야인사의 진입은 이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영입된 것으로, 여권의 정치논리를 이들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 때문에 개혁의

이니셔티브가 김영삼정권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분석한다.

10. 연구의의

이 논문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이론적인 틀을 갖고 분석적 관점을 견지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이 논문이 시도하고 있는 사회구성적 모델은 사회운동 혹은 정치참여운동이 각각 분리된 영역에서 별도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을 넘나들며 형성되는 운동네트워크를 통해 전개되는 것임에 주목하면서 역사적 전개과정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간의 정치참여운동이, 특히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사회운동의 제도권 정치참여가 왜 개혁을 주도하는 제도내적 세력으로 형성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 논문은 스스로 지적하고 있듯이 향후 사회운동의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정치참여의 주요한 부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여성운동, 환경운동, 지역운동, 노동운동 등을 세밀하게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논문은 그러한 한계가 사회운동진영의 커다란 흐름에 초점을 둔 데다가 연구의 대상이 전선운동과 이슈운동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1. 제목 : 한국 민주화과정에 있어서 정당체계의 형성과정 및 요인에 관한 연구

2. 저자 : 하태호

3. 발행년도 : 1996

4. 쪽수 : 253쪽

5. 형식 : 학위논문(박사)

6. 발행처 : 중앙대학교

7. 목차

1. 서론: 연구의 목적 및 대상/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분석의 틀 및 논문구성

2. 정치·사회세력의 형성과 균열구조

가. 정치체제의 변화와 권위주의 정권의 성격

(1) 국가형성기의 시민사회와 정치세력

- (2) 권위주의 정권의 성격
- 나. 권위주의하의 정당과 사회운동세력
 - (1) 정당과 정치균열구조
 - (2) 사회운동세력
- 3. 탈권위주의의 전개과정 및 민주화이행 과정의 특성
 - 가. 탈권위주의의 전개과정
 - 나. 민주화이행과정의 특성
- 4. 정당체계의 형성과정과 그 요인
 - 가. 제 13대 대통령선거와 정치엘리트의 재편성
 - 나. 제 13대 국회의원 선거와 정당체계
 - 다. 제 14대 국회의원 선거와 정당체계
- 5. 결론

8. 연구목적

이 글은 87년 6.29선언 이후 실시된 87년 대선과 88년 및 92년의 총선이라는 이행 선거 속에서 4당체계의 형성과 3당체계의 형성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차례의 이행 선거에서 다당체계가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세력은 정당체계에 왜 편입되지 못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9. 연구내용

개별정당과 정당단위 사이의 경쟁적인 상호작용 양태, 혹은 정당들 간의 공존의 형태 및 양식이라고 부르는 정당체계가 한국의 민주화 이행기 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러한 정당체계의 생성이 한국 민주화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정당체계가 형성되는데 미치는 영향을 제도적 요인, 사회·정치적 균열구조, 정치행위자의 편성 및 전략과 선택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역사적으로 국가 형성기 이후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정치·사회균열구조와 정치세력 및 정치엘리트의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한국에서는 보수세력의 압도적 우세로 정치지형이 구조화되면서 시민사회의 성장이 억제되었고, 특히 한국전쟁으로 인한 반공이데올로기의 내면화는 보수일변도의 정치지형을 고착화하게 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주의는 군-관료-재벌 간의 지배연합을 이루게 되었고 노동세력

의 억압정책은 계급형성을 제약하였으며, 엘리트 충원과 지역발전에 있어 불균형한 편중은 지역간 대립을 내재화 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정당정치는 왜곡되고 굴절되었는데, 한국정당은 이른바 '전동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부속기구로 전락하였다. 즉 한국정당은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사회제반 욕구와 이익의 집약과 표출, 사회적 갈등의 조정과 여과 같은 정당고유의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여당은 자율성과 독자성을 갖지 못하고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를 형성·전파하는 역할과 집권세력의 제반정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부속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하였다. 야당 또한 집권세력의 야당의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과 방해, 그리고 집권가능성의 봉쇄, 인맥에 의한 봉당적 성격, 야당내 타협파와 강경파간의 갈등과 반목 등으로 인해 정당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주로 선거에서의 이슈형성과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반대운동을 통하여 권위주의 정권의 정통성을 공격하고 정치체제의 민주화를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권위주의하 정치세력은 집권세력, 제도 내 야당세력, 제도권 밖의 재야로 나뉘어졌고 사회운동세력과 노동세력은 정치세력화하지 못하고, 보수-혁신의 대립축이나 계급균열은 매우 허약하였다.

민주화 이행기에는 권위주의 집권세력은 응집력을 보이면서 야당세력이 지역주의에 기초하여 양분되었고, 사회운동세력 또한 야당세력의 분열에 편승하여 사분오열 되었다. 87년 대선은 지역주의 및 연고의식에 호소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동원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약화되고 보-혁 대립구도는 설정조차 되지 못했으며 지역균열구조가 강하게 현재화 되었다. 이러한 정당구조의 성격, 유권자 동원전략은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특히 소선거구제로 선거가 치러지면서 이러한 성격은 더욱 고착화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4당체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사회운동세력은 다시금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1992년의 국회의원선거는 여전히 지역주의가 중심이었지만, 호남-비호남의 지역구도를 전략으로 한 민주자유당, 호남과 비호남권에 대한 이중적인 지지동원전략을 택한 민주당과 신생정당으로 경계이슈를 중심으로 한 통일국민당 등 이전의 지역구도가 다소 약화되는 선거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민주화 이행기 이후 한국의 정당체계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존재여부 및 정치전략의 변화, 그리고 선거제도의 변화에 의해 변화된다고 보고 있다.

민중당의 실패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분열과 분파주의로 인해 노동세력을 비롯한 기

층민중으로부터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지원과 지지를 거의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즉, 혁신세력은 민중당, 전국연합, 무소속, 민주당내의 민주연합 등으로 나누어진 채로 선거에 참여하였으며 혁신세력끼리 경쟁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막상 선거전에 있어서는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지 못했고, 유권자 지지동원 전략도 선전, 선동에만 의존하였다고 평가한다.

10. 연구의의

이 논문은 민주화 이행기에 있어 각 정치세력의 전략적 선택과 유권자 동원전략이 어떻게 지역균열을 강화하고, 민주-반민주, 또는 보-혁의 균열을 배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특히 선거구제가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어 정치균열의 형성에 따른 정당체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보-혁구도의 형성 실패를 혁신세력의 분열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1. 제목 : 현대 한국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연구-19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노협과 한노당의 정치세력화 실패 원인을 중심으로³⁴⁾ -

2. 저자 : 정연정

3. 발행년도 : 1992

4. 쪽수 : 146쪽

5. 형식 :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 서강대학교

7. 목차

1. 서론 : 문제제기/ 기존연구 검토

2. 예비논의

가. 노동자계급 개념정의

나. 정치세력화 개념정의

3. 현대 한국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전개과정

34) 기타 결과 및 평가와 중복

- 가. 정치세력화 배경
- 나.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다. 한노당
- 라. 소결
- 4. 현대 한국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실패원인
 - 가.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정치세력화
 - 나. 노동자계급의 생활조건 차이와 정치세력화
 - 다. 국가의 노동통제와 정치세력화
 - 라. 지도력과 정치세력화
- 5. 결론

8. 연구목적

본 논문은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 1990년대 초까지 진행되어 온 한국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의 전개과정을 전노협과 한노당을 중심으로 왜 장기적 활동을 할 수 없었는지, 즉 한국 노동자계급은 시민사회 내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조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에서 정치적 대표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9. 연구내용

전노협과 한노당은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 상이했다. 전노협의 경우 노동자계급의 일상적인 경제투쟁을 정치적 수준으로 전화시키려는 것이었고, 방법적인 측면에도 노조의 정치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노동법 개정과 같은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축으로 총선과 대선 시기에 전국연합의 방침에 협조하여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한노당은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고양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합법적 정치지형에 노동자계급의 정당을 통하여 참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건설되었다. 물론, 한노당은 소수 노동운동 지도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지기반은 애초부터 취약하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노당측은 전노협이 안고 있는 문제들, 산별노조체계로의 이행, 정치적 활동, 정책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려 했다.

한노당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으로 중요한 것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권 내부의 민중당과 정당연합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두 조직의 정치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한다. 전노협이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은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노동법 개정의 내용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므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리고 연대활동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보면, 총선과 대선시기에 전국연합의 방침에 따라 후보 지지를 하였는데, 민중당 후보 등 사회운동세력의 후보가 중복되어 전국연합의 방침을 고수하지 않고 지역적 차원의 판단에 맡겨버려 연대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대선시기 전국연합이 민주당과 정치협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정치적 연대활동에서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이해를 적극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다.

한노당 역시 민중당과의 통합 후 치러진 선거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저조한 지지율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한노당이 추구했던 '민중당의 한노당화'도 총선 패배로 인하여 이를 추진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활동을 전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실패의 이유를 네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국가의 각종 통제는 언제나 노동자계급이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였다. 둘째, 한국 자본주의가 개량의 토대를 마련함으로 인하여 노동자계급 내부에 발생하는 생활조건상의 차이다. 셋째, 사회주의권의 위기와 몰락으로 인한 이념상의 혼란이다. 여기서 정치세력화의 실패에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는 것은 이 세 가지보다도 주체적인 원인이다. 주체적인 원인이란 이들 조직의 지도력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지도력이란, 각 조직들이 얼마만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올바른 전략, 전술을 구사했는가의 문제이다.

한노당과 전노협은 이러한 측면에서는 거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세 인식과 활동상의 불철저함이라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에 치명적인 지도력만을 행사해 왔다고 비판한다. 즉 한노당의 경우 민중당과의 통합과정에서나 실제 선거과정에서 거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중당의 전체 기조에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는 현상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전노협 역시 변화된 정치정세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선동적, 관념적 운동전술에 의존하여 노동대중의 현실적 고민이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이들의 정치적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여 대중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0. 연구의의

이 연구는 정치세력화에 있어 해당 주체의 조건과 역량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에 치우쳐 있는 반면에, 전노협과 한노당의 구체적인 조직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활동을 통해 주체의 지도력이 끼치는 영향을 보여주었다.

1. 제목 : 한국의 민족민주대중운동사, 『대중정당 - 민족민주대중정당의 이론과 현실』

2. 저자 : 고성국

3. 발행년도 : 1989

4. 쪽수 : 27쪽

5. 형식 : 일반논문

6. 발행처 : 백산

7. 목차

1. 한국의 정치지형: 정당운동의 객관적 조건
2. 1945~48년의 정당운동
 - 1) 이 시기 정치지형의 특징과 정당운동
 - 2) 근로인민당의 정당활동
3. 1950년대의 정당운동
 - 1) 이 시기 정치지형의 특징과 정당운동
 - 2) 진보당의 성과와 한계
4. 4.19시기의 정당운동
 - 1) 이 시기 정치지형의 특징과 정당운동
 - 2) 소위 4대 혁신정당운동에 대하여
5. 5.16 이후의 정당운동
6. 잠정적 결론

8. 연구목적

이 글은 정치참여운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정

치 및 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있다.

9. 연구내용

1945년~48년의 시기의 정당운동에 대해서는 여운형이 주축이 되었던 조선인민당으로 시작되어 사회노동당을 거쳐 근로인민당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첫째, 강령과 정강정책 및 정치노선을 중심으로 하여 볼 때 근로인민당은 대중정당이다. 둘째, 대중정당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들의 정치적 입장과 지향은 민주주의적 개혁을 직접적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근로인민당이 대중정당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중적 조직기반이나 대중적 정치실천, 그 어느 것도 내용 있는 것으로 채우지 못하였다. 넷째, 여운형 개인의 정치활동에 종속되어 있었다. 다섯째, 조선공산당과의 관계를 통일전선적 차원에서 사고하였지만, 여타 정당이나 대중조직과의 관계설정에서 한계를 보였다.

1950년대의 정당운동에 대해서는 진보당을 살펴보고 있는데, 진보당의 와해는 보수세력연합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이에 대해 진보당이 이 시기 당면과제였던 민주연합은 물론, 선거에서 반자유당, 반이승만 연합마저도 구축해내지 못한 전술적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4.19 시기의 정당운동에 대해서는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사회혁신당, 통일사회당 등 이른바 4대 혁신정당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이때 이 글은 이들 4대 정당은 4.19혁명 이후 치러진 7.29선거가 보여주듯이 여전히 구래의 상층 정치활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통일문제를 제외한 여타의 사회·정치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정강정책 수준에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천력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5.16 이후의 정당운동에 있어서는 올바른 의미의 진보적 대중정당은 전무했다고 총괄적인 평가를 내리는 가운데, 단지 ‘혁신’과 ‘진보’를 내세운 제정치세력들이 명목적 존재로 전락되거나 그 자신의 대의를 심각하게 손상당하였다고 평가한다. 한편 이러한 사정은 정당운동을 민족민주세력의 본래적 활용영역의 하나로 확장하는 데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한다.

10. 연구의의

정치참여운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구체적인 정

당들의 운동양상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로부터 정치참여운동의 평가의 역사적 준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 각 시기의 정치 및 이데올로기 지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당운동의 객관적 조건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데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정당운동의 외연이 단지 민족민주운동세력으로 한정되어있다는 데에서 이 글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하겠는데, 그것은 이 글이 쓰인 89년 시기가 정당운동이 민족민주운동세력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 이 글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민족민주대중정당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일정한 견해에 근거한 선택적 비판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보다 총체적 관점에서의 평가를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고 하겠다.

1. 제목 : 한국정치의 진보세력, 『사회과학연구』, 제2집

2. 저자 : 손학규

3. 발행년도 : 1993

4. 쪽수 : 35쪽

5. 형식 : 일반논문

6. 발행처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7. 목차

1. 서론
2. 진보의 개념
3. 세계체제와 진보세력의 정치적 배제
4. 권위주의 체제와 진보주의의 반사적 친화력
5. 시민사회의 성장과 진보주의의 변질
6. 결론

8. 연구목적

이 논문은 한국정치에 나타나는 진보세력의 전개양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정치변동에서 차지하는 진보세력의 역할과 위치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9. 연구내용

이 논문은 진보세력 정치참여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져 왔다고 파악한다. 첫째, 해방 후 주도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가 미군정과 한국전쟁을 통해 궤멸된 좌익 민족주의 세력; 둘째, 한국전쟁으로 정착된 반공지배이데올로기 하에서 생존을 위해서 온건 개혁주의를 표방한 혁신세력; 셋째, 군부권위주의 하에서 민주화 운동의 동력을 제공했던 재야세력; 넷째, 6.29이후 6공화국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사회변혁을 지향하며 정치세력화를 도모했다가 좌절을 경험한 민족민주운동세력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진보세력의 정치참여 유형을 기존의 제도권 정당으로의 편입, 독자적인 진보정당 건설 추진, 그리고 제도권 밖에서의 변혁운동 세력 등으로 나누어 보면서, 각각의 유형적 특성과 성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제도권 정당에 편입한 세력은 실질적으로 변혁적 진보주의를 포기했고, 진보정당 건설을 통한 제도권 진입을 시도한 세력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급진적 변혁론을 포기하고 온건한 개혁노선을 채택했으나 이 또한 일련의 선거에서 패배를 기록하여 이 운동은 실패하였다. 그리고 재야변혁운동세력으로 남아있기를 고집하는 세력도 일부는 야당과의 연합전선을 통한 민주정부수립을 표방했으나 실패했고, 다른 일부는 독자적인 민중후보 추대를 통해 민중운동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기반형성을 꾀했으나 이 또한 기대 이하의 성과를 얻는데 그쳤다.

결국 이러한 관찰들을 통해 이 논문이 내리고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한국정치에서 진보세력은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왔고 표면적으로는 해방 후 초기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는 중요정치세력으로 존재하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전 기간을 통해서 한국정치변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둘째, 진보세력의 역할과 진보의 개념은 정치변동의 과제와 객관적 여건에 따라 변한다. 셋째, 진보세력의 존재양태와 이념적 지향이 시민사회의 성장, 특히 국가와 시민사회 및 정치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10. 연구의의

이 논문의 의의는 진보정치세력의 정치참여를 역사적 과정을 통해 고찰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또 민주화 과정 이후의 정치참여에 대한 유형분류와 그것에 대한 평가작업도 수행하고 있는 바, 이는 정치참여운동의 범주화를 위해 참조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진보세력의 존재양태와 이념적 지향이 시민사회의 성장, 특히 국가와 시민사회 및 정치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진보세력의 정치참여운동의 분석틀로 차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논문은 진보세력의 정치참여 형태가 어떠한 구체적 과정을 통해 분화(열)되었는지에 대한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부재하다는 점, 다소 성급하게 진보세력의 정치참여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하겠다.

1. 제목 : 인천시민의 생활여건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치참여양태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2. 저자 : 정영태

3. 발행년도 : 1999년 12월

4. 쪽수 : 23쪽

5. 형식 : 일반논문

6. 발행처 :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7.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인천의 생활여건에 대한 시민의 인식
3. 시민의 문제해결방식과 정치참여
 - (1) 문제해결방식-일반적 특징
 - (2) 선거참여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식
5. 요약과 시사점

8. 연구목적

이 글의 목적은 인천시민들이 인천의 생활여건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특히 정치과정에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1997년 9월과 1998년 5월에 걸치는 시기 동안 약 4천명의 일반시민과 인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 14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9. 연구내용

먼저 이 글은 인천의 생활여건에 대한 인천시민의 인식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선 인천시민들은 인천지역 경제사정과 집안경제사정에 대해 비관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생활여건에 대해서도 대단히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이러한 객관적인 여건만이 아니라 사회질서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다음으로는 인천시민들이 이러한 불만이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때 이 글은 문제해결방식의 일반적 특징과 정치참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우선 이 글이 추출해낸 문제해결방식의 일반적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이익을 감수하고 시정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았다. 둘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시민들의 경우, 35%내외가 민원이나 법적인 해결방식과 같은 상례적이고 공식적인 절차에 의존하고 있지만, 15%내외는 유력자나 친인척에게 부탁하거나 집단으로 항의하거나 언론에 호소하거나 또는 시민단체에 부탁하는 등 비상례적이고 비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 셋째, 비공식적이고 비상례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시민 가운데에는 정당보다는 시민단체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를 통해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 적법한 절차와 방법보다는 비공식적이고 비상례적인 방법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 시민들이 많은 제도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공식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밟는 방법, 즉 제도권에 호소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도 주로 찾는 기관은 다르다. 예를 들면 입법기구보다는 집행기구에 호소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행위자 가운데 누가 또는 어느 집단(조직)을 공공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보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정치참여, 특히 선거참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와 지방정부를 연결시켜 주는 선거에 대해서 그 효능성에 대해 회의를 품는 시민들이 점차로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투표율의 고저 여부를 각급 선거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 선거가 하위 선거보다, 행정부의 장이

의원보다 투표참여율이 높다. 둘째, 타 대도시에 비해 인천의 투표율이 낮다.

이러한 특징에 대하여 이 글은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이 기존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의회보다는 행정부의 장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지방정부 보다는 중앙정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천시민의 투표율이 타 대도시에 비해 낮은 것은 인천의 독특한 정치사회적 특성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전후 시기에는 이북으로부터, 6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호남은 물론 영남지역으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지역의 인구구성이 실로 복잡하다. 즉, 인천의 토착세력이 이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 세울만한 정치적, 정신적 구심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인천은 부산이나 광주 또는 대구 또는 대전과는 달리 지리적으로 서울에 인접해 있는데다가 생활여건조차 열악하여 인천으로 이주해온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천을 최종정착지로 생각하기보다는 일시적인 환승역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즉 인천에 대한 애착이 적은 만큼 인천의 지방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이상과 같은 시민들의 인식과 정치참여양태는 일반시민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활상의 문제나 국가기관의 부당한 처우 및 결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천의 정치과정이 보다 활성화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글을 맺고 있다.

10. 연구의의

결국 정치참여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성을 담지한 시민들 자신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정치참여운동에 대한 연구는 그 주체의 측면에서 주로 사회운동세력들이나 정치지향적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정치참여 양태를 구체적인 실증작업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보적인 연구라는 의의를 갖는다. 특히 그간의 정치참여운동에 대한 연구가 주로 중앙정치 수준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 글은 지방정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1. 제목 : 재야운동과 정당정치의 상호연관성, 안희수 외, 『한국정당 정치론』

2. 저자 : 조현연

3. 발행년도 : 1995

4. 쪽수 : 29쪽

5. 형식 : 일반논문

6. 발행처 : 나남

7. 목차

1. 머리말
2. 재야운동의 역사
3. 1980~90년대 정당정치사 개괄
4. 재야운동의 세 가지 정치적 실험
5. 김영삼 정권의 정치개혁
6. 재야운동의 현황
7. 재야운동의 '위기' 극복방안과 전망
8. 맺는 글

8. 연구목적

이 글은 1987년 이후 개시된 '탈권위주의화'라는 한국 정치사의 큰 흐름 속에서 재야운동이 정치적으로 무력화되고 사회적으로 고립화되면서 운동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그 위기의 원인은 국가의 탄압과 주체의 분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9. 연구내용

이 글은 특히 주체의 분열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의 핵심에 합법공간 특히 정당정치 영역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자리 잡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즉 정치참여활동의 방식 등을 둘러싸고 재야운동이 분열되었으며, 그로 인해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 글은 1987~88년 이후 합법정치공간의 확장과 정당정치의 활성화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세가 되면서, 재야운동은 대중성 획득을 통한 운동의 성장과 양심적 비판세력을 넘어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합법정치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 하에 이 글은 87~88년을 경과하며 이루어져 온 합법정치공간의 확장추세에 대해 재야운동은 어떻게 인식했으며 어떠한 활동을 전개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때 이 글은 재야운동이 1) 반합법전선체운동, 2) 재야입당파, 3) 독자창당운동 등 세 가지 정치실험을 전개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때 이 글은 그 세 가지 실험 모두가 실패하였으며, 실패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운동주체의 분열이라고 판단한다.

한편 그러한 세 가지 실험 양상은 95년 시기에 가서는 1) 반합법전선체 중심론, 2) 민주당 강화론 또는 범민주연합론, 3) 독자창당론 등으로 대동소이한 경향을 띠고 있다고 보는데, 이 역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이 글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1) '차이 속의 연대'와 '연대 속의 차이'를 상호 인식하면서 운동주체의 분열을 극복하고 힘의 규합을 이루어내는 것, 2) 중기적으로 정당-전선체-현장 대중조직 간에 분업을 전제한 협조체제의 구축과 진보적 민주정당을 건설할 것, 3)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야운동의 제도정치권 진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이 글은 무엇보다도 재야세력의 정치참여운동이 갖는 한계를 '주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정세상황을 추적하면서 파악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즉 최근 주목받고 있는 '미시연구'의 자료로 참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야운동의 정치참여가 어떠한 궤적을 그리면서 전개되어 왔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 글은 왜 국가탄압이라는 객관적(혹은 외부적) 요인이 아닌 주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양자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체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 및 분석적 틀과 도구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규명하거나 모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1. 제목 :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는 가능한가?, 『5회 비판사회학대회 자료집』³⁵⁾

2. 저자 : 임현진

3. 발행년도 : 2002

4. 쪽수 : 18쪽

5. 형식 : 일반논문

6. 발행처 : 한국산업사회학회

7. 목차

1. 머리말

2.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병존

가. 사회운동의 발전 추이와 맥락: 제3세계적 특수성

나. 사회운동의 현주소

3.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

가. 국가, 시민사회 및 정치사회

나. 정치세력화의 요인 분석: 정치적 기회구조, 사회단체의 역학, 대중적 기반

4. 사회운동과 정치참여: 한국의 사례

가. 민중당

나. 개혁민주당

5. 소결 : 정치세력화의 가능성과 한계

8. 연구 목적

이 글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의 성패에 관련된 국내외적 요인들을 다루는 것이다. 특히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에 작용하는 사회, 정치, 문화, 경제 환경 등의 변수들을 설정하기 위해 외국의 경험과의 비교 속에서 이를 찾고 있다.

9. 연구내용

한국에서 사회운동의 발전과 맥락이 갖는 제 3세계적 특수성을 먼저 살핌으로서, 구 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이 병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을 후기-

35) 기존정당참여와 독자정당활동의 결과 및 평가와 중복

후발형 종속적 자본주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화의 모순과 민주화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집합행동으로 이해하는데,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에 기초한 구노동운동의 전개가 환경, 여성, 인권 등 신사회운동의 출현과 발생적으로 시기를 거의 같이 하였으며, 또한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이 국민의 기본권 쟁취 내지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녀 왔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본다. 즉, 자본주의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심화와 함께 사회운동의 성장을 가져온 구미의 경험과는 달리, 우리는 권위주의 체제아래에서 나타난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양하기 위해 사회운동이 분출되어 왔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한국의 사회운동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치유한다는 점에서 체제변혁적 성격을 지니는 제3세계 사회운동의 맥락에 위치 지워질 수 있다. 이는 사회운동의 초점이 시민적 주체성과 다양성에 따른 자율성의 보장이라는 개인적 가치에 맞추어져 있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르지만, 우리의 경우 사회운동의 주체로 기본권을 향유하는 시민과 그렇지 못한 민중이 공존하면서, 민중중심의 사회운동과 시민중심의 사회운동이 양립하면서도 이러한 신규 사회운동은 민주주의, 민중생존, 민족통일이라는 기본 방향에서 분리되기보다 수렴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고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로 ‘백화점식 운동방식’ 아래 여론몰이를 위해 ‘이슈파이팅’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면서 대중적 기반의 취약은 중앙집중적 구조와 언론의존적 담론운동의 성격을 만들어 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하나의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존재하는데, 기존의 정당정치에 의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대의성의 대행’을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정치개입이 법·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서구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존 정당과 정책연합도 추진할 수 있다. 노동운동과 같은 구사회운동세력이 노동당의 형태로 피지배계층의 이해 대변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면, 환경운동과 같은 신사회운동세력은 녹색당의 형태로 다계급적 공동이익의 증진에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사회운동세력의 정치참여에 대하여 한국은 1987년 6월 시민항쟁을 계기로 사회운동의 활동 공간이 늘어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치권 로비와 압력단체의 역할에 더 나아가 일부 활동가의 정치권 진출과 사회운동세력에 의한 새로운 정당 결성이 시도되었던 것으로 보면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의 주요 변수를 유럽과 미국 사회의 경험을 토대로 정치적 기회구조(체제성격, 정치연합, 정당구조, 선거제도), 사회단체의 구조와 능력(전략목표, 동원맥락, 인지과정, 하부구조) 및 사회적 대중 기반(사회성격, 균열구

조, 동맹관계, 정치문화)으로 들고 있다.

민중당에 대하여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의 기본 조건이라 할 정치기회의 구조, 사회운동의 구조와 능력, 사회적 대중기반의 측면에서 당시 기존 여야 정당에 대항적인 독자적 아젠다를 설정한 것을 빼놓고, 민중당은 그것을 주도한 사회운동권이 대중적 지지기반을 갖기에 조직과 재정 역량이 극히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폐쇄되어 있는 정치체제아래에서 현실정치의 기득권을 뛰어넘는 것은 무리였다고 평가한다. 특히 민주화 이전 정치적 기회구조 자체가 봉쇄된 상황에서 이념과 열정만으로는 사회운동의 정치참여 자체가 무리라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주역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정치개혁시민연합'을 모체로 하여 출발한 개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의 당대당 통합에 의해 개혁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중당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치세력화의 기본 조건이 훨씬 나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사회단체의 구조와 능력과 사회적 대중 기반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좋은 여건에 있었던 개혁민주당의 좌절은 정치적 기회구조가 제아무리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정당구조와 선거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한, 체제개방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대선 후보를 갖지 못하는 한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한국 정치문화의 대권향배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민중당과 개혁민주당의 실험은 민주화를 전후로 한 매우 다른 정치지형에서 시도된 이념과 노선을 달리하는 독자 세력화의 움직임으로서 우리 현실에서 사회운동의 정치참여가 성공하기에는 정치적 기회구조, 사회단체의 구조와 능력, 사회적 대중 기반 등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라는 과제는 그것이 맞다 혹은 틀리다는 규범적 판단 보다, 왜 한국사회에서 정치세력화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러한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구조적·행위적 요인들은 무엇이며, 정치세력화가 가능하지 않다면 사회운동이 지향해야 될 목표와 가치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 것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0. 연구의의

여기서 한국의 사회운동이 두 차례에 걸친 민간권력의 등장 속에서 점차 체제내화 되어가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특히 김대중정권에 들어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해게모니 장악력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단체들 중 일부 직능, 이익집단의 대표자들은 정계진출을 위하여 그것들을 중간역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실정치의 대리인이 되고 있는

실정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시기상조론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전근대적 유제가 후근대적 모순과 근대적 과제라 할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건설과 중첩되어 있는 우리의 경우 사회운동단체들은 정치세력화에 앞서 각기 자신의 전문성에 맞춰 정체성을 강화하는 길만이 사회적 기반과 조직적 역량을 키우는 관건이므로, 한국의 사회운동은 현단계에서 '공동체적 체험(communitas)'을 높일 수 있도록 오히려 '탈정당정치'의 틀에서 정치세력화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나. 결과 및 평가

1. 제목 : 97년 대선으로 본 민중운동, 그리고 선거공간,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³⁶⁾

2. 저자 : 손호철

3. 발행년도 : 1999

4. 쪽수 : 12쪽

5. 형식 : 일반논문

6. 발행처 : 푸른숲

7. 목차

1. 97년 대선과 한국사회

2. 97년 대선과 민중운동

1) 민중운동의 대응

2) 독자노선의 내용과 경로: 최적 연합론

보론: 민주노동당, 새로운 전위당을 우려한다

8. 연구목적

이 글은 민중운동이 15대 대선에서 취해야 할 올바른 대응전략을 시론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6) 독자정당활동 결과 및 평가와 중복

9. 연구내용

이 글은 15대 대선에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과제를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경유착 구조의 혁파, 둘째,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 즉 형식적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할 때도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개혁을 가속화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 셋째, 봉건적 사당정치의 극복, 넷째, 지역할거주의, 지역 정당체제의 극복, 다섯째, 보수·수구 일변도의 왜곡된 정치지형으로 일관되어온 한국정치를 진보 대 보수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파악으로부터 이 글은 민중운동의 대응이 주체형성이라는 목표, 나아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주체형성에 따른 세력관계의 변화를 통한 정치지형의 민주화라는 목표를 위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이 글은 독자노선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로를 논하는데, 우선 경로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선거를 위해 급조되고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선거용 조직'이 아니라, 일상적인 투쟁과 운동이 정치투쟁으로 승화발전 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연대를 위한 강령의 수준과 연대의 외연, 폭에 대해 논한다. 이때 이 글은 두 가지 편향, 즉 '최대강령주의' 적 입장과 '최소강령주의' 적 선거주의 노선 양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이 글이 제안하는 것이 바로 '최적연합(optimal coalition)' 전략이다. 이때 최적연합의 상은 그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외연을 먼저 정하고, 그 외연 내에서 가능한 강령수준의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때 외연의 폭은 민노총, 전국연합, 민교협, 학단협, 여성단체, 환경단체, 나아가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의 현실적 연대 가능성을 판단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이 글은 독자노선의 표명에 있어서 독자후보의 '상'과 '명칭'에 대해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즉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의 중심적인 입장인 '국민후보' 운동을 통한 '국민후보' 상의 제시, 그리고 '개혁적 국민정당'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문제가 서구와 같은 집권의 벽인 1/3의 벽이 아니라 민중세력의 주체형성, 특히 노동자계급의 계급형성과 사회세력화이기 때문인데, 이를 감안했을 때, 지지와 득표의 극대화라는 면에서 국민후보가 결코 올바른 전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문제는 민노총, 나아가 민중세력, 그 중에서도 전국연합 회원들의 지지와 표를 얻어내는 것이 문제이지 전체 국민의 지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15대

대선에서 독자후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독자후보를 통해 노동자계급과 민중세력의 자기의식을 깨우치고 계급형성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은 보론에서 99년 9월 28일 발기인대회를 통해 진보정당 창당을 본격화한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비판적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이 글은 공식적인 당으로 민중당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실험이 민중당과 달리 민주노총 등 기층민중의 대중조직의 조직적인 결의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 IMF와 김대중 정부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따라 노동자들과 민중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으면서 기존의 보수정치에 대한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점이 기존의 진보정당운동과 갖는 차이점이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글은 민주노동당의 실험에 대해 현장대중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것과 직접 민주주의적인 새로운 정치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 등을 들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사업추진방식 등에 있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99년 시점에서 '87년의 DJ'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그 추진주체들이 대중들의 냉담함을 정치의식의 저급성 탓으로 돌리는 등 '전위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다며, '사민주의적 전위주의'로의 편향을 우려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이 글의 의의는 민중운동의 정치참여에 있어 명시적으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라는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그것을 위해 '최적연합'이라는 개념으로 연대형성의 현실적 안들을 구상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이 글은 비록 그것이 15대 대선이라는 한정된 시기에서의 문제이긴 하였지만, 민중운동의 정치참여와 관련, 그 지향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체형성'임을 강조하고 있고, 이로부터 국민후보, 국민정당 지향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논쟁적인 글이라는 의의도 갖고 있다 하겠다.

특히 보론에서 현 시기 대표적인 진보정당세력인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논쟁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는 최근 2002년까지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문제를 둘러싼 논쟁구도에 있어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1. 제목 : 14대 대통령선거와 민중운동 : 평가와 전망, 『전환기의 한국정치』³⁷⁾

2. 저자 : 손호철

3. 발행년도 : 1993

4. 쪽수 : 30쪽

5. 형식 : 일반논문

6. 발행처 : 창작과 비평사

7. 목차

1. 14대 대선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2. 14대 대선의 의미와 특징
3. 민중민주운동의 대응: 비판적 평가
 - 1) '범민주단일후보' 전술
 - 2) 독자적 민중후보 전술
4. 향후 정치와 민중민주운동의 진로

8. 연구목적

이 글은 14대 대선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고 대선에 대한 민중운동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평가해본 뒤 향후 정치의 전망과 민중운동의 장래를 진단해보고 있다.

9. 연구내용

이 글은 먼저 14대 대선의 의미를 한국정치에서 최초로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구도가 사라져버린 선거라고 규정짓는다. 하지만 그 의미의 중요성은 민주-반민주 대립구조의 소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반민주악법 존재 등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가 현실 속에서 계속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정점 속에서는 사라져버렸다는 '기이성', 즉 정치현실과 정치구도 간의 불일치에 있다고 본다.

이때 이 글은 이같이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민주-반민주 구도가 소멸해버린 이유는 ① 6공의 효과, ② 이와 밀접히 관련된 민주당과 전국연합의 선거전략의 결과에서 찾고 있다. 6공의 정책은 '선별적 억압'인데, 이로부터 중관계층에게 6공의 민주화는 허상이

37) 독자정당활동의 결과 및 평가와 중복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었고, 이것이 동구몰락 등에 따른 보수화와 맞물려 이들에게는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상당히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층민중에게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여전히 절실하고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소멸을 이 글은 이 같은 이중화효과 속에서 민주당이 선거의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판단한 중간계층의 지지획득을 위해 ‘뉴DJ플랜’이라는 이름 하에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포기와 민민운동의 대표적인 연합체인 전국연합이 민주당과의 정치연합을 통해 이 같은 구도의 쟁점화를 간접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완결되었다고 본다.

이때 이 글은 민중민주운동의 대응이 13대 대선의 ‘비판적 지지’ 대 ‘독자적 민중후보’라는 대치구도로 나타났듯이, 14대 대선에서도 ‘범민주단일후보’ 대 ‘독자적 민중후보’의 대치구도로 반복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가운데, 이 글은 ‘범민주단일후보’ 전술과 ‘독자적 민중후보’ 전술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우선 ‘범민주단일후보’ 전술에 대해서 이 글은 ① 결정절차 ② 전략적 선택 ③ 선거법 등 제도적 측면과 전술선택 간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먼저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그 동안 성장한 다양한 대중조직들이 다양한 입장 차이에 도 불구하고 민주적 토론과 절차를 통해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전략적 선택의 측면에 있어서 이 글은 범민주단일화후보 전술이 전국연합의 역관계(세칭 NL 진영의 우세)의 결과라고 하면서, ‘당선가능성’이라는 함정에 빠진 것으로서 비판하고 있다. 즉 이 글은 지역갈등의 구도 하에서 김대중 후보는 “당선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끝으로 당원 이외의 선거운동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금지조항’에 의해 민민운동과 민주당의 정치연합은 ‘양손이 다 묶인’ 의미 없는 무력한 연합이었다고 비판한다. 즉 포괄적 금지조항을 기조로 한 선거법에 의해 전국연합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후보에게 범민주단일후보라는 상징성을 부여해준 정책연합의 발표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 독자적 민중후보 전술에 대해서는 ① 그 동안 분열되어 있던 좌파진영을 선거투쟁을 통해 하나로 묶어내어 단일한 진보정당 결성을 위한 기초작업을 벌이며, ② 보수·진보의 대립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대선 후에 예상되는 정계개편에 대비한다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지만, 획득한 표의 미미함 등을 고려할 때 진보진영이 독자적인 진보정당을 출범시킬 만한 주·객관적인 조건이 갖추어졌는가라는 문제의 대두 가능성을 논한다. 특히 이 글은 백선본이 이번 선거에서 전노협 등 기층대중조직의 적극적인 지지

를 획득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진보정당움직임이 과거처럼 민주노조 등의 조직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하지 못하고 상층부 위주의 ‘가분수형’ 정치조직에 그칠 때는 그 한계가 자명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글은 민민운동이 대선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와 함께 운동방식을 놓고 치열한 내부분쟁과 분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산별노조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대중운동강화론, 두 번째,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진보정당결성움직임, 세 번째는 민중운동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민주당으로 통합해 들어가야 한다는 ‘투항론’, 네 번째는 민주당 전체 내지 당내 진보블록과 연합의 형식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민주연합당론, 다섯 번째는 대중운동-정치운동 병행론. 마지막으로 지역단위를 기초로 한 전국수준의 새로운 ‘민중주도의 시민운동론’이 있다.

10. 연구의의

이 글은 매우 구체적인 정치현장 수준에서 민민운동의 정치참여에 대한 논의와 활동이 가장 정점을 이루게 되는 대통령 선거를 분석하고 있다. 이때 이 글의 의의는 그러한 정치현장 수준에서의 분석을 한국정치에 대한 매우 정교한 인식 하에 수행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반민주 - 민주 구도의 소멸이 갖는 정치구도와 정치현실 간의 괴리, 한국 선거정치의 ‘형식’에서의 질적 변화에 대한 인지, 호남 대 비호남 구도화에 대한 ‘2개의 국민 헤게모니 프로젝트’ 측면에서의 설명 등이 그것이다. 또한 민중민중운동의 대응에 대해서도 매우 치밀한 논리에 기초한 추적을 통해 비판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크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때 이 글은 특히 정치참여와 관련, 이 시기 이후 전개된 민중민주운동의 분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와 같은 지형으로 이어졌는지, 그 분기점을 이룬 14대 대통령 선거 시기 이후의 연구에 있어서 유용하게 참조할 수 있다 하겠다.

1. 제목 : 정당운동의 관점에서 본 영등포을구 재선거, 한국사회연구소 편, 『대중정당 - 민족민주대중정당의 이론과 현실』

2. 저자 : 정관용

3. 발행년도 : 1989

4. 쪽수 : 30쪽

5. 형식 : 일반논문

6. 발행처 : 백산

7. 목차

1. 머리말
2. 참여의 배경과 기본논리
3. 참여과정과 선거운동과정
4. 선거결과의 평가와 향후 정당운동의 전망
5. 맺음말

8. 연구목적

이 글은 89년 8월 18일에 치러진 영등포을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참여를 중심으로 그 전개과정과 결과를 정당운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9. 연구내용

먼저 이 글은 1장 머리말에서 우선 영등포을구 재선거가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첫째는 88년 이후 국가권력 주도의 보수연합이 진전되어 온 단계성의 의미. 즉 영등포을구 재선거는 87년 6월항쟁 이후 진행되어온 정치공간의 확대를 최소화하고,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배제를 최대화하는 보수연이 제도화되고 지배구조의 안정화단계로 이전해 가는 계기점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89년 봄 문익환 목사 방북과 동의대 사건, 서경원 의원 사건, 임수경 양과 문규현 신부의 평양축전 참가를 계기로 하여 조성된 공안정국의 지속과 강화에 따른 보수연합 내부균열을 방지하고, 내부세력간 관계의 재정비를 도모하려는 기점이라고 말한다.

셋째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시험의 계기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특히 이때 이 글은 영등포을구 선거는 민족민주운동세력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① 88년 이후 국가권력의 통치형태가 5공과

같은 폭력에의 의존도보다는 정치력에의 의존도를 높여 가는 방향이므로, 그에 대한 민족민주운동의 정치력 강화가 요구된다. ② 89년 3월 이후의 집중적인 타격으로 별다른 정치실천의 장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민족민주운동으로서는 영등포을구 재선거에의 참여를 통한 정치폭로와 6공화국의 본질에 대한 대립구도의 설정이 긴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③ 이상의 두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는 민족민주운동의 기본과제, 즉 영등포을구 선거를 독자적·대안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중요한 한 요소인 정당건설의 시험대로 삼을 수 있다.

결국 이 글은 실제로 영등포을구 재선거는 장기적으로는 6공의 정치 전개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으로서, 단기적으로는 공안정국의 마무리와 정치재개를 위한 사전정비작업으로서 그리고 민족민주운동에게는 다각적 의미에서의 시험대라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며, 이 때문에 4당과 전민련을 비롯한 모든 정치세력들이 영등포을구 선거에 총력을 투여하였고, 국민대중의 관심도 일개 지역구 재선거의 수준의 뛰어넘는 집중도를 보여주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때 이 글에서 흥미로운 것은 영등포을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영등포을구가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를 포함하는 상징적 지역이며, 연령별·학력별·직업별 분포에서 전국적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88년 총선에서 민정·평민·민주가 각기 몇 백 표의 근소한 차이를 나타낸 접전지역이었다며 그 정치적 중요성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 이 글은 87년 대통령 선거와 88년 총선과는 다른 89년의 선거참여가 갖는 기본논리를 도출하고 있다. 즉 87년 대선기 민족민주운동의 당면과제는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군정종식의 과제를 결합한 것이었으며, 반면에 88년 총선기에는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과제가 보다 전면에 부각되었던 시기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 글은 89년 영등포을구 재선거에의 참여논리는 민족민주운동 진영이 독자적으로 정치세력화 하면서 그간의 투쟁의 성과로 전취 된 모든 정치공간에서 대중에 대한 실질적 정치력을 높여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가시화 되고 있는 보수와 진보, 예측과 자주(반통일과 통일), 반민주와 민주, 대립 속에서 국가권력의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와 정치력 발휘를 압도할 수 있는 대항이데올로기의 창출, 대안적 정책비전의 제시, 보다 힘 있는 정치력의 확보를 중심에 둔 목적의식적 실천이 긴요하게 요구된다고 말한다.

한편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력 확보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며 현실 속에서 평가받게 되므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즉 공안정국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현 국가권력의 반동적 본질에 대한 다각적 폭로를 중심전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반동적 국가권력에 대한 올바른 대립 축으로써 자신을 부각시키고, 타협적 보수야당을 비판하면서, 향후 비타협적 야당세력과 민족민주운동진영이 중심이 되는 대안적 정당의 창건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논리적 수준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3장에서는 참여과정과 선거운동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우선 영등포을구 재선거에 민족민주운동 진영이 참여하는 과정을 세 시기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논의의 시발에서 후보확정에 이르는 세력형성기, 둘째는 실무적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방향정립기, 셋째는 후보추천인 확보운동부터 시작되어 선거당일까지를 총괄하는 관성적 진행기가 그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시기구분과 함께 각각의 시기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기인 세력형성기를 살펴볼 때, 영등포을구 재선거 참여는 민족민주운동이 기본목표와 조직적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독자적인 조직적 힘을 갖고 진출한 것이기보다는 극히 다양한 각계각층 인사의 총결집 속에 한 부분으로 민족민주운동 진영이 가담한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즉 이른바 ‘범민주’ 진영의 결속이라는 형식상의 긍정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적 다양성은 조직적 구심의 부재라는 내용상의 한계를 전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향정립기에 대해서는 ‘1노 3김 구조 청산’이라는 추상적 구호가 선거슬로건으로 선정되면서 소위 ‘서명파 정치인’ (박찬중, 이철, 장기욱 등)과 민족민주운동진영 간의 갈등이 현재화할 소지를 남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전민련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판적 지지론자’들의 동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결국 이 글은 ‘1노 3김 구조 청산’이라는 추상적 슬로건은 독자적 정치세력으로의 자기정립이라는 선거참가의 기본목표를 현 국가권력의 반동적 본질에 대한 폭로와 타협적 보수야당에의 비판을 통해 가시화 시키고, 그 정치적 비전으로서 대안적 정당창설을 제시한다는 일관된 논리구도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이 시기 평민당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평민당 탄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평민당에게 비타협적 투쟁을 촉구하며 그간의 타협적 자세가 작금의

탄압을 자초한 것이라는 공세적 평가 —> 범민주진영의 당선 이후 평민당 탄압에 대한 연대투쟁의 제의 —> 비타협적인 평민당의 투쟁이 지속될 경우 향후 정당건설에서 범민주진영과의 연합의 가능성 시사'와 같은 범민주진영의 주도적 관계설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평민당과의 관계에 있어 범민주진영의 주도적 관계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평민당은 자체 조직기반, 지역기반에 근거한 표다지기에만 주력하였고, 범민주진영은 다분히 추상적이기만 한 '새정치', '참민주'라는 구호에만 집중하게 되었으며, 둘 사이의 내분이 선거구민의 범민주진영에 대한 지지실추를 가져오고, 향후 정당건설에 걸림돌이 될 비판적 지지론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세 번째 관성적 진행기에 들어서는 일단 가동된 선거운동이 별다른 논쟁이나 중간점검의 계기를 갖지 못하고 자체의 관성에 의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매우 실무적 차원에서 선거운동이 전개되었을 뿐이라고 평가한다.

4장에서는 선거결과를 87, 88년 양대 선거와 비교분석을 통해 평가하면서, 향후 정당운동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다음은 선거결과에 대한 평가인데, 첫째는 민정당의 대폭적 성장이 국가권력주도의 보수연합실현이라는 그간 정국변화의 핵심내용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나웅배 후보의 지명도와 함께, 공안정국 속에서 보수성향중산층과 비호남계의 표가 민정당으로 몰렸다고 분석한다.

둘째는 평민당의 소폭신장과 민주·공화당의 대폭하락이라는 현실적 대립구도의 집중현상이 일었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연합의 순조로운 진행에 우려를 만들어내면서 국민대중의 타협정치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긍정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셋째 투표행태에 있어서의 발전양상인데, 지역주의라는 변수에 의해서만 좌우되었던 88년총선과 달리 정치적 쟁점의 성격에 따른 투표행태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정당의 득표증가와 같이 장기적인 진보성을 담지하지는 못한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범민주후보 고영구 변호사가 획득한 7.1%의 의미인데, 88년 총선시 민중의 당과 한겨레당의 득표에 비해 상당한 신장을 이루었으며, 4당구도의 일각인 공화당을 압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3위인 민주당의 절

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건설될 정당이 군소정당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선거결과는 향후 정당운동에 있어 범민주진영의 수세적 대응을 극복하는 주도적, 공세적 정국 대응력을 구사하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의 정치적 효과가 한층 증대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어떤 과정을 겪든 향후 건설될 당의 구심은 당시 선거대책본부와 같은 수준은 훨씬 뛰어넘는 운동성과 대중적 명망성의 동시구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 연구의의

이 글은 무엇보다도 정당운동을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을 규정짓는데 중요한 계기였던 89년 공안정국 전후 시기의 정치지형상에서, 선거정치과정을 구체적이고도 실증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영등포을구 재선거의 경우 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보수야당과의 관계와 범민주운동진영의 분화의 계기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고찰은 정당운동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사례연구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수야당과의 관계문제를 단지 일반론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선거과정을 통해 당시의 정치지형 상에서의 평민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추적하면서, 이후 정당운동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쟁점이 되고 있는 비판적 지지론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하지만 왜 보수야당, 특히 평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범민주운동진영의 주도성이 관찰될 수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보다 정치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이 글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공화당을 앞질러 4당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평가 부분은 다소 주관적인 평가로 보이는 것도 흠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범민주진영의 주도성이 관찰되지 못하면서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고 할 것이다.

1. 제목 : 「1992년 대선과 한국의 민주적 이행」,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2. 저자 : 최장집

3. 발행년도 : 1993

4. 쪽수 : 16쪽

5. 형식 : 일반논문

6. 발행처 : 한길사

7. 목차

1. 14대 대통령선거의 의미

2. 김영삼체제의 성격 : '지역분할 지배체제'에 의한 '제한적 민주주의'

3. '지역분할 지배체제'에 대응하는 정치적 제도 및 대안세력의 형성문제

8. 연구목적

이 글은 14대 대통령 선거를 민주화 이행의 과정 하에서 고찰하면서, 선거의 특징과 그 동학을 선거 국면에서의 변수와 한국정치의 구조적 요인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영삼 정부의 성격을 '지역분할 지배체제'의 '제한적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이후의 전망을 진단하면서 이에 대한 운동세력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9. 연구내용

14대 대통령 선거는 국제적 수준, 한반도 수준, 국내적 수준의 변화가 중첩된, 역사적 전환국면에서, 87년 이후 민주화요구를 어떤 수준에서 제도화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또한 지배블록의 교체가 실현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그 중심이슈인 선거라고 규정한다.

민주화 이행의 과정에서 볼 때, 이 선거에서 지적될 것은 무엇보다도 지배블록의 교체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민주화 이행 하에서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의 변화에 따라 시민사회의 성격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민주화 이행 이전의 시기에는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로서 시민사회가 민주화의 보루였지만, 이행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지배블록의 이해가 관철되는 곳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이것은 이전의 국가가 억압적, 물리적 통치에 기반 했지만,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선택적 억압과 동의와 해계모니를 통해 지배라는 통치방식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변화는 선거 국면에서 지역주의와 반공이데올로기에 중산층이 압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14

대 대선에서 지역감정은 지배권력블록을 유지시키는 이데올로기이며, 그 물질적 사회적 기반(403)이기에 강력한 중층결정적 요인으로 기능하였다(401). 선거 국면에서 중산층의 보수화에 작용한 또 하나의 변수는 반공이데올로기이다. 이른바 “색깔론”이 그것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지역감정의 동원, 색깔론에 의한 공격, 현대 재벌에의 차별적 공격)들이 극복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됨으로써 깊숙이 구조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화의 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민주화의 문제도 포괄하게 된다. 선거의 결과에 대해 14대 대선을 한국사회의 도덕적 황폐화의 정치적 표현으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지적한다.

- 3당 통합의 부도덕성(지역배제에 의한 분할통치를 통한 권력의 유지).
- 선거운동과정에서의 말의 타락과 부도덕성(색깔론과 부산기관장대책회의).
- 시민사회의 도덕의식의 마비(한국자본주의발전의 천민성과 부르주아율리의 부재의 산물).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담은 민주주의는 중우적 성격을 크게 내포한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시민사회에서의 민주화가 뒷받침되지 못할 때 정치사회에서의 민주주의는 쉽게 중우주의로 떨어질 수 있다.

김영삼 정부를 논하기에 앞서 추상수준의 구분에 따른 국가성격의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지배블록 수준에서는 김영삼 정부의 등장은 87년 이후 지배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계기였다. 하지만 정치체제, 정부의 수준에서 김영삼 정부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김영삼 정부는 선거가 비교적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점과 군부에서 민간으로의 주체변화에 따라 나름대로의 개혁적 조치를 취할 것이기에 민주주의체제에 접근하지만, 그것은 제한적인 데, 그 이유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정치사회의 특성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사회는 그 기원자체가 위로부터 조직화되었으며, 정당 자체도 시민사회와의 연계가 허약하다(406). 또한 그 지지세력인 시민사회내의 부르주아와 언론의 기득이익에 반하는 개혁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기에 김영삼 정부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김영삼 정부의 전망은 어떠한가.

김영삼 정부 하에서도 구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방대한 국가기구가 시민사회의 확장, 분화된 그물망에 대하여 위계적 분획 및 지연, 학연과 같은 연줄관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역분할을 활용함으로써 지배적 사회구조를 유지할 것이다. 지역감정은 현상적 완화, 내면적 구조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신한국’의 청사진은 민주화를 효율성과 등치시키고, 전쟁메타포를 활용하여 국가간의 경제경쟁을 체제의 중심의제로 삼고 여기에서의 승리를 위한 ‘생산의 정치’를 강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김영삼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발전주의의 철학과 민주주의적 가치가 “신한국”의 틀 내에서 상호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병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효율지상주의’ ‘생산지상주의’ 정치는 아마도 격화되는 국제적 경제경쟁과,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북한의 경제적 파산상태에 의해 훨씬 더 강력한 언술적, 현실적 기반을 가질 것이다(409).

따라서 다음과 같은 언술이 확산되면서 신보수주의적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

① 경제적 민족주의강조 ② 자본주의생산질서 및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의 개혁에 대한 강조 ③ 자본-노동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생산자 집단과 이를 저해하는 불로소득적 비생산자집단으로의 구분, 그리고 생산에 기여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집단과 쟁의 등을 통하여 생산을 교란하거나 생산에 반하는 집단으로의 구분을 강조함으로써 계급적 언술체계를 대체 ④ 노동윤리와 생산성의 강조 ⑤ 계급적 언술에 입각한 사회운동이 아닌 체제 내에서의 ‘건전한’ 사회운동의 역할 강조.

대응세력의 전망은 어떠한가. 앞으로의 정치적 갈등이 민주 대 반민주라는 대립 축 위에서 전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것은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민주-반민주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말은 더 이상 언술적 힘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은 민주주의는 동일한 언술적 지평 위에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통하여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412). 이는 고전적 계급중심언술과 운동을 넘어서는 기획이 필요하며, 시민사회의 성격변화에 따라 최소강령적 수준으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지적한다. 더욱이 후자와 관련하여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의 체제를 수정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민주화의 보루이자 동시에 보수적 지배체제유지의 보루일 때, 민주화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에서의 민주적 반대세력의 광범한 연대 없이는 불가능하다(413). 따라서 운동중심에서 제도중심으로의 변화를 강요하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운동과 함께, 강력한 정당을 통한 민주화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 연구의의

물리력에 의존한 억압적 통치가 핵심이었던 시기의 대치선은 국가 대 사회였지만, 민주화 이행과 함께 시민사회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이중

적으로 민주화할 수 있는 전략이 요청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결절점이 14대 대선이다. 즉 기존의 지배블럭을 교체해야하는 규범적인 요청이 14대 대선에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와 반공이데올로기의 작용으로 인하여 중산층이 보수화됨에 따라,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실패하였고, 따라서 민주주의의 공고화란 다만 언술적, 헤게모니적 수준에서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평가이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의 쇠퇴에 관한 설명요인에 있어 너무 국가와 지배블럭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다. 즉, 시민사회의 보수화는 모두 지배블럭의 공세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선거 국면에서의 역동성이 한국정치의 구조적 제약에 대한 설명으로 환원되는 데, 이러한 설명뿐만 아니라 선거 국면에서의 역동성이 밝혀질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서술도 필요하다(예컨대 대항세력 또는 야당의 헤게모니접합이 어떻게,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평가).

2. 기존정당참여

1. 제목 : 민주화추진협의회에 관한 연구 - 지역당 구조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2. 저자 : 김진옥

3. 발행년도 : 1993

4. 쪽수 : 91쪽

5. 형식 :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 경남대

7. 목차

1. 서론 : 문제의 제기,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민주협의 결성 · 조직과 주요활동

가. 결성배경 및 과정

(1) 결성배경

(2) 결성과정

나. 조직과 구성요소 및 지도부의 인맥

- (1) 조직
- (2) 구성요소
- (3) 지도부의 인맥

다. 민주협의 주요활동

- (1) 민정당사 농성사건의 무료변론활동
- (2) 미문화원 점거농성에 따른 활동
- (3) 박종철 고문살인사건대책위 활동과 민주항쟁의 전개

3. 민주협의 정당창설 과정과 지역당구조의 형성 양상

가. 신한민주당의 창당과 조직 및 구성

- (1) 신한민주당의 창당과정
- (2) 신한민주당의 조직과 구성요소
 - 1) 조직
 - 2) 구성요소

나. 신한민주당의 분열과 통일민주당의 창립

- (1) 신한민주당의 내분
- (2) 통일민주당의 창립과 조직 및 구성
 - 1) 통일민주당의 창립
 - 2) 통일민주당의 조직 및 구성

다. 지역당구조의 형성 양상

- (1) 평화민주당의 창당과 조직 및 구성
 - 1) 평화민주당의 창당과정
 - 2) 평화민주당의 조직 및 구성
- (2) 통일 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의 정강 · 정책의 비교
 - 1) 정강
 - 2) 기본정책
- (3) 지역당 구조의 형성 양상

4. 결론

8. 연구목적

민주화추진협의회가 평화민주당으로 분당할 때까지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1980년

대에 나타난 한국정당의 지역당 구조의 성립과 기원, 정당내부의 구조적인 파벌양상 및 분열 등 지역당구조의 형성요인을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9. 연구내용

민주화추진협의회는 5공화국 출범이후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구 신민당의 양계파인 김대중과 김영삼의 연합으로 구성되어진 정치집단이다. 1983년 2차 연금 당시 김영삼의 단식투쟁이후 1984년 2차 연금이후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는 각각 4인씩의 8인회를 구성하여 민주투쟁기구를 결성하기로 하여 결성된 것이 민주화추진협의회(이하 민주협)이다. 민주협은 공동의장에 김영삼, 고문에 김대중, 공동의장대행에 김상현을 선임하여 집행부를 구성하고 14인의 운영소위원회를 두었다. 운영소위는 양 계보 동수의 원칙에 따라 7:7로 구성되었다.

이후 민주협이 신한민주당을 창당할 때 민주협의 구성요소인 김대중계와 김영삼계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범 민주세력과의 연대원칙'을 내세워 제 3차 정치활동규제법에서 해금된 구 신민당 정치인들로 일컬어지는 비민주계의 50:50 구성 안배에 따라 12대 공천과 당직을 배분하였으므로, 신한민주당은 특정 지역의 성향이라 할 수 없었고, 12대 총선에서도 지역 편중적인 투표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한국당의 정치인들을 영입하면서 당대당 통합이 아닌 개별 입당을 추진함으로써 신한민주당 내 동교동-상도동계의 지역연고를 중심으로 계파를 확장하자 비민주계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러한 불만은 지도체계를 둘러싼 당내 내분으로 이어졌고, 이른바 '이민우 구상'이라는 내각제 개헌 움직임에 반발하면서 동교동-상도동계가 집단으로 탈당하여 통일민주당이 창립하게 되었다. 통일민주당은 민주협의 구성과 유사하게 되면서 지역성과 개인형 파벌이 합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대선후보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평화민주당의 창당으로 지역연고를 기반으로 한 정당형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10. 연구의의

지역주의적 인사정책, 경제의 지역적 구조화, 지역별 편견의식 등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지역갈등은 비록 그것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당차원에서 동원되지 않는다면 정치공간에서 표면화되지 못한다. 87년 대선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던 지역갈등의 문제를 정당형성, 특히 민주협의 결성과 분열의 과정 속에서 배태되고 있음이 논문은 보여준다. 즉, 민주협의 결성과 이후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으로의 분열은

민주협 의 조직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연고를 바탕으로 한 양 계파의 통합과 분열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87년 이후 지역당 구조의 형성의 기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3. 독자정당활동

가. 총괄(참여동기/ 논쟁, 활동사항, 결과 및 평가를 모두 포함)

1. 제목 : 한국의 진보정당에 관한 연구 - 민중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

2. 저자 : 박상병

3. 발행년도 : 1997

4. 쪽수 : 232쪽

5. 형식 : 학위논문(박사)

6. 발행처 : 인하대학교

7. 목차

1. 서론 : 문제의 제기, 이론적 자원과 개념규정, 분석방법과 분석대상

2. 한국의 정당체제와 진보정당

가. 한국정당체제의 균열구조 변화와 계급균열

(1) 해방정국과 이데올로기적 균열구조

(2)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3) 지역간 균열구조

나. 민중당의 정치적 위상과 정치전략

(1) 계급균열의 표출 : 노동운동과 정치운동 그리고 민중당과의 관계

(2) 민중당의 정치전략 :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민중당 지도부의 위상

3. 진보정당형성의 이론과 과정

가. 1980년대 진보정당운동의 배경

(1) 민주화운동과 진보세력의 정치조직화

(2)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 : 진보정당의 총선 참여

나. 합법정당론과 진보정당의 건설 : 민중당 창당

- (1) 1990년 전후의 진보정당운동 흐름
- (2) 보수정당체제의 재편과 재야 민주화운동세력의 대응
4. 민중당의 위상과 조직통합
 - 가. 민중당 강령과 조직
 - (1) 민중당 강령과 진보정당으로서 성격
 - (2) 민중당의 조직적 성격 : 정파적 성격과 구조적 성격
 - 나. 권력재편기를 향한 각 부문 정치조직체의 재편과 민중당의 조직통합
 - (1) 민중당의 외적 정치관계 : 야권통합과 민중당, 비합법 정치조직체와의 상호관계
 - (2) 한노당 창준위와 민중당과의 통합 : 통합 민중당의 출범
5. 제 14대 국회의원 선거와 민중당의 의회진출 실패
 - 가. 민중당의 선거참여와 원내 진출 실패
 - (1) 민중당의 선거참여 : 민주당 및 재야 민주화세력과의 선거연합 실패
 - (2) 선거결과와 민중당의 원내진출 실패
 - 나. 민중당 실패의 원인과 평가 : 운동주체의 문제-선거제도의 문제-정치 전략의 문제
 - (1) 사회구조적 문제와 민중진영의 분열
 - (2) 선거제도의 문제와 비례대표제
 - (3) 민중당의 해체 : 민사협과 진정추의 분열과 민중당 평가
6. 맺는 말

8. 연구목적

이 논문은 민중당의 창당, 선거참여, 해체 등 세 시기를 거치는 동안 지도부의 객관적 조건이나 정세에 대한 인식과 대응전략, 그리고 이를 둘러싼 내부갈등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민중당에 대한 연구는 거시적으로는 1987년 이후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구했던 정치세력에 대한 연구이므로, 민중의 당 창당 이후 전개된 이른바 재야세력의 정치참여 논의 중에서 독자정당운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9. 연구내용

이 글에서 의도하는 첫 번째 내용은 재야 민주화운동을 민주연합론의 관점에서 이해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진보적 독자정당론을 주장했던 정치세력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정세에 대한 인식과 한국 사회변혁에 대한 전망을 밝히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3대 총선에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지향했던 민중의 당이 이 글에서의 논의의 뿌리이며 민중당 창당은 그 결실로 제시되고 있다.

두 번째로 민중당 내부의 긴장관계, 즉 주체세력간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민중당을 평가하는 것이다. 민중당 내부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민중당 평가를 시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주체세력간의 인식차이가 민중당의 실패를 초래한 커다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민중당 내 두 정파간에 일어나는 내적 긴장관계에 주목해서 민중당을 볼 때 상호대립적인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고 평가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정당체제의 균열 구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중당 창당과정과 선거참여과정 그리고 선거실패 후의 민중당 해체과정에서 보여준 당지도부의 일관적이지 못한 정치행태가 민중당 실패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 이를 당 지도부의 정치전략부재로 접근한다. 민중당의 정치전략은 시기에 따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로, 정당건설 방법의 문제(민주대연합론과 독자적 진보정당론), 두 번째로 선거참여에 있어 선거전술의 문제(지지자 대변의 논리, 선거경쟁의 논리), 마지막으로 선거패배의 원인분석을 통해 제기되었던 민중당조직의 재조직화 방향에 관한 문제이다.

민중당 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은 역사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1987년 중반부터 민중당 창당까지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지향했던 정치세력이 분화와 결합 그리고 재분화되는 과정에서 전개되었던 이념과 조직투쟁의 내용과 방법이 바로 민중당의 창당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려는 것은 이론적으로 범민주연합론을 비판하면서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논의의 중심에 세우고, 민중당이 계급균열을 정치균열로 전화시키려는 정치적 목표를 지니고 출발한 것에 주목하여 진보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이유이다.

민중당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단계별로 구분해서 각각의 구체적 대립관계를 분석하는 데, 민중당은 창당과정과 선거참여 그리고 선거 직후의 변화과정으로 3분하여 그 구체적 과정에서 진행된 내적 논리를 상호대립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민중당이 하나의 진보정당으로서 차지하는 위상과 민중당 창당의 논리를 적실성 있게 규명하기 위해 균열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즉 민중당 창당의 의미를 지역균열에 기초한 보수정당체제에 대항하여 계급균열을 정치균열로 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분출 속에서 민중당이 가져야 할 정치전략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즉 강령수준에서 정치전략은 계급균열을 정치균열화 하면서 정당체제를 재편하고, 독자정당중심으로 새로운 권력을 창출한다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민중당 지도부의 현실정치적 수준에서의 정치전략은 강령적 수준에서 제시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설정과는 무관하게 당면한 선거에 초점이 맞춰졌고, 자신의 목표인 진보와 선거에서의 대중성 확보 양자를 표류하는 당 지도부의 정치전략이나 리더십의 부재가 민중당 실패의 중심에 있음을 주장한다.

1980년대 초부터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까지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라는 균열구조 속에서 민주화 운동의 등장과 민주주의 영역의 강화를 위한 투쟁을 살펴보면, 6월 민주화운동 이후 13대 대선시기에 나타난 지역균열의 등장으로 진보정당운동은 이전처럼 민주주의 영역을 중심으로 정치균열이 재구성될 수 없기에, 제도야당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즉, 지역균열로 구성된 정당체제 속에서는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계급균열을 정치균열화 하려는 주체를 형성할 수 없기에 독자적인 정당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중당 창당과 통합민중당까지의 시기에서는 비합법 운동조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기존 민중당 지도부와 새로 결합된 한노당 창준위는 이후 민중당 내부의 주요한 갈등구조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후 민중당 실패의 원인과 평가를 두고 재분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민중당의 의미를 두 가지로 찾는데, 하나는 계급균열을 정치균열로 전화시키기 위해 진보정당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기에는 계급기반이 허약했으며, 극소수의 운동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중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민중당은 창당 당시의 원칙인 '민중의 정치세력화', '독자성의 원칙', '진보성의 원칙'이 창당논리로 끝나고 선거 시기 폐기되는 현상 속에서 민중당의 실패 원인을 찾고 있다. 즉 민중당은 선거를 위해 급조된 정당이 아니었으므로, 선거실패 이후 조직적 재편을 모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 연구의의

1980년대 초부터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까지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라는 균열구조 속에서 민주화 운동의 등장과 민주주의 영역의 강화를 위한 투쟁을 살펴보면, 6월 민주화운동 이후 13대 대선시기에 나타난 지역균열의 등장으로 진보정당운동은 이전처럼 민주

주의 영역을 중심으로 정치균열이 재구성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제도야당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한다. 즉, 지역균열로 구성된 정당체제 속에서는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계급균열을 정치균열화 하려는 주체를 형성할 수 없기에 독자적인 정당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진보정당운동의 내부 논리를 충실히 추적하면서 민중당의 실패의 내적 원인을 규명하고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1. 제목 :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진보정당의 형성 - 한국과 브라질의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 -

2. 저자 : 유효상

3. 발행년도 : 1994

4. 쪽수 : 86쪽

5. 형식 :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 고려대학교

7. 목차

1. 서론 : 문제제기, 연구범위(분석대상, 분석시기), 분석가설 설정

2. 정치적 개방과 민주화운동의 성격

가. 브라질(1974-1985)

(1) 탈권위주의화의 시작 : 위로부터의 자유화

(2) 시민사회의 활성화 : 신노조운동의 등장과 노동자당

(3) 직선제 투쟁의 주체로서의 노동자당 : 전국적인 토대 마련

나. 한국(1984-1987.6)

(1) 유화국면과 급진적 재야운동의 등장

(2) 2.12총선과 신민당의 등장

(3) 대통령직선제 쟁취운동 : 6월항쟁

3. 민주화 협약과 정치사회의 재편

가. 브라질(1985-1988)

(1) 민주화 협약과 민간정부로의 이행 : 정치적 기회구조의 형성

(2) 사니정부의 실패와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장

(3) 주요 정초선거와 노동자당

나. 한국(1987.6.29-1991)

- (1) 민주화협약과 노동운동의 '뒤늦은' 등장
- (2) 군부의 재집권 : 87, 88 양대 정초선거와 진보세력
- (3) 3당합당과 정치적 기회구조의 붕괴

4. 진보정당의 성공과 실패

가. 브라질(1989-)

- (1) 대통령선거와 노동자당
- (2) 노동자당의 이념과 조직구성
- (3) 노동자당의 미래

나. 한국(1990-)

- (1) 진보세력의 고립 : 관념적 급진성과 조직기반의 취약성
- (2) 민중당의 등장과 정치세력화의 실패
- (3) 진보정당의 전망

5. 결론

8. 연구목적

이 논문은 한국사회가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사회 내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부분의 이해를 대변하는 많은 조직들이 출현하였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진보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대개 6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민중부분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조직의 건설은 왜 실패하였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9. 연구내용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브라질의 경우 민주화과정에서 출발한 노동자당이 처음의 선거에서는 법적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정초선거를 거치면서 브라질의 정치사회내의 주요한 행위자로 자리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양 국가의 이행의 맥락을 대조하여 이러한 결과를 규명하고 있다.

브라질과 한국의 민주화 이행을 비교하기 위하여 진보세력의 민주화 투쟁 참여여부, 정초선거에 대한 태도, 지배연합의 재편양상(특히 여당과 야당의 재편양상), 진보정당과 기존 정치권과의 관계, 이행이전 시기에 역사적·사회적 구조, 노동통제 및 선거제

계의 차이가 진보정당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정초선거의 초기에서부터 진보세력들이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보수야당과는 분리되어 민주화 과정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형성된 정치공간에 노동운동이 나중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여 민주화 투쟁과정에서의 정당성과 지도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체계모니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정초선거에서 보수세력에 기대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 정치사회에서의 조직화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한국의 노동운동은 시민사회가 확장된 이후에 등장하였으나 브라질 노동운동은 시민사회를 확장시키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점, 민주화를 향한 브라질의 투쟁에서 노동자당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었던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 협약이후 지배연합의 재편양상의 차이도 브라질과 한국의 서로 다른 결과를 낳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 즉 브라질은 민간정부로의 이행하면서 권위주의 시대의 주요야당이 지배연합으로 재편되어 정치사회 내에서 진보정당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지만, 한국은 87년 대선에서 군부가 재집권을 하였고, 이후 지배연합재편과정으로서 3당 통합은 야당의 일부분만이 포섭되어 진보정당의 활동공간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0. 연구의의

이 논문의 의의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군부라는 행위자를 제거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이행과정 이후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추진해나갈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민주화 투쟁 참여여부에 따라 브라질의 노동운동은 정치사회로의 진입이 성공하였지만, 한국은 노동운동이 중요한 추진세력으로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고, 지배연합의 재편과정에 따른 정치적 기회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의 진보세력은 정치사회로의 진입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참여운동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민주화 이행기의 정치참여운동이 좌절되는 구조적 요인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1. 제목 : 한국 혁신정당 정착화의 제약요인 -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를 중심으로 -

2. 저자 : 김진향

3. 발행년도 : 1995

4. 쪽수 : 137쪽

5. 형식 :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 경북대

7. 목차

1. 서론 : 문제의 제기, 연구의 방법

2. 이론적 고찰

가. 혁신정당의 개념 및 이념적 특성

나. 제약요인에 대한 기존 이론들의 논의

다. 연구의 분석틀

3. 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혁신진영의 정치세력화 논의

가. 87년을 전후로 한 정치적 상황

나. 혁신진영의 정치세력화 논의

4. 혁신정당 정착화의 제약요인

가. 국가 핵심통치기구의 성격 및 역할 요인

나. 법·제도 및 정책적 요인

다. 이데올로기적 요인

라. 정치문화적 요인

마. 혁신세력 내부적 요인

바. 국제정치적 요인

5. 결론

8. 연구목적

이 논문은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상대적으로 개방화된 정치적 국면 속에서 왜 혁신진영은 정치세력화 하는데 실패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9. 연구내용

87년 이후 각종 선거에서의 결과들을 직시하면서 민주화 과정에서 혁신적 정치세력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분단은 남한 정치체제를 더욱 경직시킴으로서 반공을 국시로 한 획일주의적인 이데올로기적 편협성과 함께 정치체제의 성격을 극단적인 보수주의적 성격을 가지게 함으로써 이후 한국정치사의 왜곡과 기형적 정치체제를 낳게 된 원인이었다. 즉 반공, 반복 이데올로기의 위력과 이를 구조적으로 공고화시키려는 정치권력의 부단한 노력 그리고 국민대중에 대한 이데올로기 정책의 결과로서 혁신정당 혹은 이념정당의 정착화는 힘든 상황이다. 또한 혁신적 정치세력 혹은 혁신정당들은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억압적 국가기구들에 의해 정통성과 정당성이 허약한 기존의 정치권력들의 정당성을 보충해 주는 희생양이었다.

법·제도의 제약 요인으로서 국가보안법과 시위관련법, 노동조합법과 노동통제정책 등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혁신정치세력의 조직화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졌다. 선거제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역시 혁신정당의 제도권 진입에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정치문화적 제약요인으로서 정치권력이 주도가 되어 정치적 여론을 조장, 확대한 국민대중들의 극단적인 반공, 반복이데올로기와 사상적 편협성 그리고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권위주의 정치문화, 파벌주의, 소외성, 정실주의 등 부정적인 정치문화도 혁신정당의 활동제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구소련과 동구권의 변화, 독일 통일 등 국제정치적 조건의 변화들도 혁신세력들이 체제대안세력으로서의 자리매김 하는데 있어 사상적인 혼란을 드러내, 기존의 보수주의적 정치세력으로 하여금 공세적인 정치국면을 창출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또한 혁신세력 내부의 고질적 분파주의·분열주의로 인하여 스스로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혁신세력들의 급진주의와 이념적 경직성으로 인한 대중과의 분리, 혁신정당의 재정문제 등도 혁신 정당의 정착화에 제약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혁신정당 정착화의 제약 요인으로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치체제에서 드러나는 폭압적인 독재정치적 성격과 동·서 냉전의 산물로서 분단 이데올로기의 국민정치 의식상의 보편화를 제시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이 논문은 혁신정당의 정착화가 실패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즉, 분단이후 형성된 억압적 국가기구와 권위주의 정치권력, 강력한 반공이데올로기, 비민주적인 정치문화, 노동통제 정책과 각종 법적·제도적 제약들, 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정치의 변화 등 혁신정당을 둘러싼 제반 상황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혁신정당이 87년 이후 정치공간이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된 정치공간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1. 제목 : 진보정당 운동의 실패 원인에 관한 연구 - 정당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

2. 저자 : 현재호

3. 발행년도 : 1996

4. 쪽수 : 90쪽

5. 형식 :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 고려대

7. 목차

1. 서론 : 문제의 제기, 연구의 범위 및 논문의 구성

2. 이론적 자원과 분석틀의 설정

가. 정당성립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정치사회의 개방성/폐쇄성의 정도

(2) 지지 동원시장의 크기

(3) 기존 정당의 대응전략

3. 해방 이후 한국 정당체계의 발생론적 특징

가. 분단국가 형성

나.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성격

4. 민주적 개방과 진보정당 운동 : 1987-1995

가. 87년 민주적 개방의 성격과 의미

(1) 6.29 선언의 성격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복원

(2) 진보진영의 대선 논쟁 그리고 분열

나.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시도, 1987-1995

(1) 제 1기 : 87년 13대 대선에서 88년 13대 총선까지

(2) 제 2기 : 89년 영등포 을구(8.18) 선거에서 92년 14대 총선 및 대선까지

(3) 제 3기 : 문민정부 출범에서 95년 6.27 지방자치단체 선거까지

5. 보수야당의 대응과 지역균열

가. 지역균열의 동원배경

(1) 지역균열의 정치적 동원

(2) 보수야당의 후보단일화 공방과 지역균열의 등장

나. 보수야당 내 파벌 경쟁과 지역주의

(1) 지역균열의 파벌적 기원

(2) 선거제도의 개편과 지역균열의 고착화

6. 결론

8. 연구목적

이 논문은 87년 이후 시도된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특히 정당건설에 왜 실패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9. 연구내용

87년 6월 항쟁과 7, 8월 노동자 대투쟁을 기점으로 시작된 한국의 민주화 이행은 한국 정당정치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먼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억압되었던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계급·계층들의 이해와 요구들이 정당정치를 통해 활성화됨으로써 이에 조응하는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 동안 정치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던 진보세력이 합법적인 공간에서의 정당운동을 통해 이념과 정책에 기반 한 정당정치의 본원적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행기 속에서 진보세력은 민주화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거의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입에 있어 좌절을 경험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87년 이후 시도된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살펴보면서 “왜 한국의 진보진영은 그간의 경험 속에서 정당건설에 실패했는가”를 다음

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있다.

첫째, 해방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진보진영은 왜 서구에서와 같은 계급정당의 건설에 실패했는가? 둘째, 특히 분단 이후 진보진영의 힘이 최대로 고양된 시점에서 형성된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따라서 어떻게 87년 이후 사회내의 지배적인 잠재적 균열로 존재해온 자본-노동 간의 계급균열이 어떻게 배제되고 지역균열이 압도적인 정치균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가? 이를 위해 정당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정치사회의 개방성/폐쇄성의 정도, 지지 동원시장의 크기, 기존정당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밝히고 있다.

정치사회의 개방성/ 폐쇄성의 정도라는 거시적 변수는 신생정당이 정당체계에 진입하는 데 있어 그 운동의 성격과 방식을 규정하게 되는 요인이다. 해방이후 형성된 정치사회의 폐쇄성을 규정한 요인인 소위 '미국의 범위(반공국가여야 하되 자유민주주의체제여야 한다는 원칙)', 산업화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노동자 억압정책 등은 87년 민주적 개방 이후에도 여전히 진보정당 운동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치사회의 폐쇄성 속에서 87년 이후 진보진영의 다수는 야권통합이라는 계급적 타협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이는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에서 지속적인 걸림돌로 나타났다.

지지, 동원시장의 크기는 해당 사회의 계급구조와 더불어 기존의 정당체계가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초래된 정치적 공백에 의해 드러난 새로운 균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즉 신생정당들은 기존의 정당체계가 반영하지 못하는 새로운 정치적 의제를 제기하거나 기존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현저히 감소하는 공백을 활용하여 정치사회 내에 새로운 대치선을 형성하고 지지세력을 동원함으로써 정치사회 내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87년 민주적 개방을 통해 기존의 비제도권 정치와 보수야당의 연계가 경쟁관계로 변화하였고, 따라서 바람직한 진보진영의 전략은 당시 광범위하게 성장한 계급균열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통한 계급투쟁 전략이었다. 그러나 진보진영내의 지배적인 전략은 보수야당과의 타협과 제휴에 치중하는 계급타협 전략에 경도됨으로써, 당시 광범위한 동원시장 내에서 계급적 동원이 가능했던 다수의 유권자들로 하여금 보수야당의 지역균열 동원전략에 흡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기존 정당의 대응전략을 보면, 보수정당들은 지배권력의 지역분할 구도와 함께 당시 보수야당이 이미 파벌에 입각한 지역에 기반 해 있었기 때문에 지역균열을 통하여 적극적인 동원 전략을 구사하였다. 지역균열의 등장과 심화과정은 당시 사회내의 지배적인

잠재적 균열로 존재해 있던 계급균열에 맞서 이를 배제하고 지역균열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보수정당들의 동원전략의 결과였다.

10. 연구의의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균열들 중 어떤 균열이 지배적인 정치균열로 자리 잡거나 배제되는가는 정당전략의 결과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87년 민주적 개방 이후 민주-반민주의 균열이 해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사회로 진입하고자 했던 진보진영과 보수정당들의 동원전략들 속에서 진보정당은 계급 타협적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계급균열이 배제되고, 보수정당들의 지역균열이 정치균열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이 진보정당운동의 실패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분단국가의 형성과 정치사회의 ‘보수 독점’ 구조, 자본주의적 산업화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파편화와 운동의 정치가 발생하게 되는 거시적인 조건들이 있다.

1. 제목 : 한국 진보정당의 연구 -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중심으로 -

2. 저자 : 김정진

3. 발행년도 : 1998

4. 쪽수 : 152쪽

5. 형식 :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 국민대 정치대학원

7. 목차

1. 서론 : 문제의 제기, 기존의 연구 성과와 검토, 연구의 범위

2. 진보정당의 이론적 기초

가. 진보정당의 개념

나. 진보정당의 주체로서의 민중의 개념

다. 진보정당의 유형

(1) 대중정당 건설

(2) 계급정당(노동자의 정치세력화)

(3) 개혁적 국민정당

(4) 혁신정당

라. 한국의 보수야당

마. 보수야당과 민족민주운동의 관계

바. 재야세력에서의 진보정당의 견해

사. 진보정당의 찬반 논리성

아. 진보정당 발전의 장애요인(법적 측면)

(1) 정치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1) 국가보안법

2) 사회안전법과 전향제도

(2) 진보정치의 성장활동을 방해하는 법률

1) 정당법

2) 정치자금법

3) 국회의원 선거법

3. 우리나라의 진보정당의 고찰

가. 진보당

(1) 조봉암과 진보당

1) 50년대의 정치적 배경

2) 혁신세력의 등장과 진보당 창당

3) 진보당의 정치이념과 노선

4) 진보당의 정책성격으로서 통일정책과 경제정책

5) 진보당의 붕괴 요인

(가) 외재적 요인

(나) 내부적 요인

나. 민중당

(1) 80년대의 정치적 배경

(2) 민중당 창당배경

1) 1987년 6월 항쟁과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2)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진보정당 창당)

3) 민중당의 정치이념과 노선

(3) 민중당의 실패 요인

다. 국민승리 21

- (1) 90년대 정치상황
- (2) 97년 대선 전후의 정세
 - 1) 87년 6월 항쟁 이후의 정치 판도와 97년 대선
- (3) 국민승리 21과 민주노총
- (4)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추진과정
 - 1) 민주노총 창립에서 노동법 개정 총파업 투쟁시기
 - 2) 총파업 투쟁이후부터 대선방침 시기까지
 - 3) 국민승리 21의 운동의 성격과 특징
 - 4) 대선 이후 현재까지
- 4. 진보정당의 한계와 향후 과제
 - 가. 진보정당의 한계
 - (1) 진보정당의 한계와 실패
 - 나. 진보정당의 향후과제
- 5. 결론

8. 연구목적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진보정당으로 조봉암의 진보당, 민중당, 국민승리21까지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보수야당과 관계, 진보정당의 찬반논쟁, 제도적·법적 제약요인 등을 분석하여 향후 진보정당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9. 연구내용

50년대 조봉암의 진보당 실패는 유럽 좌파와 비슷한 사회민주주의적 내용의 주장과 무엇보다도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에 반대하는 평화통일론이 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보안법 등 억압적 국가기구를 통한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에 의한 것이었으며, 87년 이후 출현한 민중당의 경우 소수 재야그룹의 주도로 인하여 폭넓은 재야세력이 결집이 못되었고, 선거 시기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속에서 득표를 의식한 활동이 결국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노동운동의 성장에 따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사회단체가 조직적 논의를 통해 참가한 국민승리21은 민중후보의 개념보다는 ‘국민후보’의 개념으로 선거에 임했지만, 일관된 후보상을 정립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생성과 발전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분단구조에 따른 ‘분단모순’과 ‘계

급모순', 지역감정, 선거법과 제도, 노동정책, 노동자 정치의식 등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진보정당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당법과 선거법 등 정치개혁과 부정부패·정경 유착의 근절, 그리고 정책정당과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의 모델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제시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진보정당의 역사적 흐름과 진보정당의 실패원인, 그리고 각 시기별 진보정당의 형성배경, 시기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진보정당의 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 제목 : 한국 혁신정당의 전개과정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 저자 : 전영돈

3. 발행년도 : 1987

4. 쪽수 : 179쪽

5. 형식 :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 연세대 행정대학원

7. 목차

1. 서론 : 문제의 제기,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혁신정당의 사상적 기원과 이념
 - 가. 혁신정당의 개념
 - 나. 혁신정당의 사상적 기원과 발달
 - 다. 혁신정당의 이념과 정책
3. 한국혁신정당의 전개과정
 - 가. 민족해방운동으로서의 혁신주의 운동
 - 나. 자주독립국가의 완성을 위한 혁신정당운동
 - 다. 평화통일을 위한 혁신정당 운동
 - 라. 민주화 투쟁으로서의 혁신정당운동
 - 마. 노동의 민주화와 복지사회지향의 혁신정당운동
4. 한국 혁신정당의 문제점

- 가. 정당조직의 불건전성
- 나. 정강정책의 일반성과 모호성
- 다. 대표성과 계급성의 부재
- 라. 정치적 경험의 결여
- 5. 혁신정당의 발전을 위한 방안
 - 가. 정치문화의 개선
 - 나. 제도적 개선
 - 다. 혁신정당에 대한 집권층의 인식 제고
 - 라. 혁신정당의 주체적 역량 강화
- 6. 결론

8. 연구목적

이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혁신정당의 문제점과 혁신정당의 토착화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9. 연구내용

한국의 혁신정당은 일반적으로 한국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당적 취약점과 혁신정당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내·외적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혁신정당의 문제점으로 정당조직의 불건전성, 정강정책의 일반성과 모호성, 대표성과 계급성의 부재, 정치적 경험의 결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한국의 혁신정당은 개별주의적 유대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형식적으로는 대중정당을 표방하고 있으나 인물분위의 정당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적이다. 그 원인으로서는 정당지도자의 권위주의적 성격, 정치자금의 문제, 유권자의 인물분위 투표성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혁신정당들은 정강정책에 있어 비현실적이며, 모호하다는 것이다. 분단이라는 이념적 제한 속에서 정강정책이 보수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허한 정책들이 많다는 것이다.

혁신정당은 자본주의에 소외된 계급과 노동계급의 정치적 대표집단이며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권익 보호와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혁신정당은 이러한 계층이나 계급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의회진출에 실패했고, 의회진출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도 부족하며, 의회정치의 경험이 부족하다

는 것이 혁신정당의 특징이다.

혁신정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문화의 개선, 제도적 개선, 주체적 역량 강화를 강조한다. 먼저 분단의식과 이데올로기적 한계에 따른 이념적 발전의 제약, 양당제의 운영으로 인한 제3정당의 출현 제한, 인물, 지역, 파벌 중심의 정치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체제의 문제인 선거법, 정치자금법, 선거제도 등 자유로운 정당 설립을 가로막는 조항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소선거구제도와 비례대표제의 개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집권층이나 보수정당들의 혁신주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관용, 혁신세력의 주체역량강화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10. 연구의의

이 논문은 한국의 혁신정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혁신정당이 실패한 점을 검토하고 있다. 혁신정당의 제약요소로 제도, 문화 등 거시적인 문제들과 주체역량의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면에 대한 지적을 통해 민주화과정에 있는 한국에서 혁신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 제목 : 1980년대 한국 혁신정당 연구 - 한겨레민주당과 민중의당을 중심으로 -

2. 저자 : 박진서

3. 발행년도 : 1991

4. 쪽수 : 60쪽

5. 형식 :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7. 목차

1. 서론 : 문제의 제기,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한국 혁신정당의 전개과정

가. 해방에서 정부수립까지

(1) 사회민주당, 고려사회민주당

(2) 조선인민당, 사회민주당, 사회노동당

나. 제 1공화국

(1) 사회당

(2) 노동당

(3) 진보당

다. 제 2~5공화국

(1) 제 2공화국

(2) 제 3~5공화국

3. 1980년대 한국 혁신정당

가. 1980년대 혁신정당의 성장배경

(1) 민중운동의 성장

(2) 혁신정당활동의 필요성

나. 한겨레 민주당

(1) 강령과 정책

(2) 조직과 구성

다. 민중의 당

(1) 강령과 정책

(2) 조직과 구성

라. 4.26 총선시의 활동

(1) 활동내역

(2) 활동평가

4. 결론

8. 연구목적

한겨레민주당과 민중의 당이 4.26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창당이 되고 총선을 맞아 어떤 방식으로 득표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내역과, 실패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9. 연구내용

이를 위하여 한국의 혁신정당의 전개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이후, 한겨레민주당과 민중의 당의 강령과 정책을 분석하는 이념분석과 정당조직 및 구조분석을 하고 있다.

한겨레 민주당과 민중의 당은 한국의 자본주의체제가 발전하면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의 불평등, 분배문제, 지역간 차별적 발전과 지역문제, 노동자 농민의 정치참여요구의 점진적 확산이라는 시대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겨레민주당의 근거인 애국적 국민정당론은 87년 대통령선거의 패배이후 민주화운동진영은 분열을 극복하고 반독재연합전선을 재구축하는 것이며, 총선에서는 이를 중심을 민정당을 패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 평민 등 보수야당의 통합운동과 함께 창당을 시도하였다.

민중의 당은 총선참여를 통해 보수야당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선전-선동과 선거유세 형태, 생존권 투쟁 등을 통하여 진보적 이념을 확산시키려 했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합법정당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한겨레민주당과 민중의 당이 실패한 원인은 첫째, 대중의식의 한계, 즉 주체역량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 둘째, 민중운동진영의 단결을 위한 정치노선상의 문제, 셋째, 현실정치감각의 미성숙을 꼽고 있다.

10. 연구의의

반독재연합전선의 재구축을 중요시했던 한겨레 민주당과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중요시했던 민중의 당을 분석하여 개별 정당 사례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1. 제목 : 민주화와 진보정당의 성립에 관한 연구 - 한국의 민중당과 브라질의 PT(노동자당)를 중심으로 -

2. 저자 : 최석만

3. 발행년도 : 1996

4. 쪽수 : 105쪽

5. 형식 :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 경남대

7. 목차

1. 서론 :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대상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과 연구 가설

가. 민주화 이행과정과 진보정당의 형성배경

- 나. 분석틀과 연구가설
- 3. 한국의 민주화와 민중당의 창당과정
 - 가. 한국의 민주화 과정
 - (1) 민주화의 전개과정
 - 1) 자유화의 시작(1983년-1986년)
 - 2) 시민사회의 부활과 절차적 민주주의로의 이행
 - (2) 야당의 분열과 시민사회의 분열/ 고립화
 - 나. 민중당의 창당배경과 쟁점
 - (1) 정당건설논쟁
 - (2) 창당과정에 대한 평가
- 4. 브라질의 민주화와 PT(노동자당)의 창당과정
 - 가. 브라질의 민주화 과정
 - 나. 시민사회의 부활과 정당건설 논쟁
 - (1) 시민사회의 부활
 - (2) PT건설과정과 논쟁구도
 - 1) 새로운 정당에 대한 논쟁
 - 2) 노동자당의 건설
- 5. 민중당과 PT(노동자당)의 성격과 정치적 실험
 - 가. 민중당의 성격과 선거
 - (1) 민중당의 이념
 - (2) 민중당의 조직 및 구성
 - (3) 민중당과 선거
 - 1) 광역의회 선거
 - 2) 1992년 총선
 - 나. PT의 성격과 선거
 - (1) PT의 이념
 - (2) PT의 조직 및 구성
 - (3) PT와 선거
 - 1) 선거의 전개과정(1982년-1989년)
 - 2) PT의 성장에 기여한 요인 - 선거와 관련해서

다. 소결 - 연구결과의 요약

6. 결론

8. 연구목적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민중당과 브라질의 노동자당이 정당정치와 시민사회의 각 영역에서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한 상이한 경험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9. 연구내용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그 발전의 여부는 시민사회의 동원 및 활성화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시민사회의 성장 및 민주화가 진보정당이 형성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였지만, 이행과정에서 중간계급과 지배블럭, 시민사회와의 관계에가 진보정당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지배블럭이 우위인가, 노동계급 혹은 전체 시민사회의 동맹이 우위인가에 따라 진보정당의 전망이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연구과제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첫째, 노동자당과 민중당은 민주화의 이행 국면에서 어떠한 정치적 논쟁과 형성경로를 거쳤나? 둘째,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동일한 목적이 이념과 조직 면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나? 셋째, 궁극적으로 정당(노동자당과 민중당)과 시민사회와의 관계패턴은 어떠했고 선거에서 나타난 상이한 경험의 요인은 무엇인가?

브라질 노동자당과 한국의 민중당이 창당되기까지의 논쟁구도는 브라질의 경우 크게 광범위한 민중건설을 강조하는 입장-기존야당강화-독자정당론의 세 가지 구도였고, 한국의 경우 87년 후보단일화-비판적 지지-독자후보론의 구도 이후에도 반합법전선을 강조하는 입장-재야입당파-독자정당론의 구도였다. 이러한 논쟁구도 속에서 이루어진 창당은 브라질의 경우 '시민사회의 부활'로 부를 수 있었던 다양한 부문들의 조직적인 가세가 이루어졌다. 또한 엘리트와 노동조합의 참여 속에서 창당하였다. 하지만 민중당의 경우 극심한 분열이라는 조건 속에서 창당되어 협소한 대중기반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념과 조직 면에서 노동자당과 민중당 양자 모두 중간계급까지 포괄하려는 입장이었다. 노동자당의 경우 창당과정에서부터 다양한 계층·계급의 결합이 있었고, 선거국면에서 중간계급에 대한 전략적 흡수를 통하여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민중당의 경우 보수야당의 차별성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국면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드러내지 못했고, 진보진영의 분열 구도 속에 매몰되어 대중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노동자당은 군부와 야당의 타협으로 인해 군부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시 시민사회는 보수적 공고화과정에 제한을 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민주화과정에서 노동자당이 보여준 지속적인 대안의 제공과 중간계급에 대한 견인 능력에 기인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87년 이후 시민사회는 노동계급, 중간계급, 민족민주운동진영간에 분산, 고립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민중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서 중간계급은 물론 여타 민중부분들로부터도 조직적 기반이 단절된 채 남아 있었다.

10. 연구의의

이 논문의 의의는 비교연구를 통하여 민주화 이행기의 정치참여운동이 한국에서 좌절되는 요인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브라질 공히 '타협에 의한 민주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면서 이렇듯 보수적인 민주화 이행 속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서 진보진영이 제도권정치로의 진입을 할 수 있는 여부는 시민사회에서 광범위한 동맹을 형성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제목 : 1950년 한국정치와 진보당 - 진보당의 사회변혁 운동사적 위상을 중심으로 -

2. 저자 : 황인원

3. 발행년도 : 1990

4. 쪽수 : 84쪽

5. 형식 :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 서강대학교

7. 목차

1. 서론 : 문제의 제기/ 기존연구의 검토/ 분석방법과 논문의 구성
2. 진보당의 전개과정과 한국정치체제의 구조적 제약
 - 가. 1950년대 한국사회와 진보당의 출현
 - 나. 결성과정과 활동사항

- 다. 불법화 과정
- 라. 타정치세력과의 관계
- 3. 진보당의 사회변혁운동사적 성격과 한계
 - 가. 진보당의 현실인식
 - 나. 이념적 성격분석
 - (1) 민주사회주의 정치이념
 - (2) 주요정책
 - 다. 조직체계와 인적 구성
 - 라. 진보당의 지지기반과 변혁적 전통
 - 마. 대중정당으로서의 한계
- 4. 결론

8. 연구목적

전후 1950년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제약요건 하에서 진보당을 둘러싼 제반 정치세력간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 진보당의 현실인식, 정강정책, 인적 구성 및 주요 활동 등을 기반으로 진보당이 갖는 한국사회에서의 변혁운동사적 성격을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9. 연구내용

진보당은 전쟁이후 어떤 형태의 이데올로기적 반대에 대해서도 극도로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승만 정권 하에서 뚜렷한 이념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법적인 정치공간에서 정치권력의 획득에 가장 근접하였던 혁신세력이었다. 즉 진보당은 한국사회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그 방법으로 폭력적 방법을 부정하고 의회에서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민주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을 지향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추구하는 한편, 민주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한 진보당은 당시 한국 진보세력의 변혁적 요구와 현실적 제약여건의 타협점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 진보당은 당원의 조건이나 생활준칙에 있어서 엄격하였으며 정치 환경을 고려, 일선조직과 특수조직이라는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진보당 중앙당부의 인적 구성을 보면 단정수립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분산적으로 잠적할 수밖에 없었던

전통적 혁신세력의 복귀라는 측면이 있다.

진보당의 활동은, 특히 평화통일론, 수탈 없는 계획경제체제의 수립, 혁신정치의 실현이라는 목표가 국민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 전후 변혁적 사회운동의 표출이 금기시 되었던 상황에서 분단의 극복과 민족통일을 지향하고 집권보수세력에 의해 단일화되어 가는 정치의 보수화 경향에 대해 국민대중의 진보적 의식을 불출시켰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갖는 변혁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지역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았는데 이 지역들은 변혁적 전통이 강했던 지역들이었다. 이는 진보당운동이 단순히 반이승만적인 성격을 띠기보다는 보다 복합적으로 국민들의 진보적 의지가 우회적으로 표출된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0. 연구의의

진보당에 대하여 비록 제도권내의 합법정당이었지만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약화된 상태로 분산되어 있었던 전통적 변혁운동세력들을 합법적 공간으로 복귀시켰다는 사회변혁운동사적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즉 기존 진보당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실패의 원인, 제약의 조건들에 대한 열거보다는 그 주·객관적 한계 속에서도 진보당의 활동이 평가 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였다고 하겠다.

1. 제목 : 진보당 연구 - 그 불법화에 이르는 과정과 성격 -

2. 저자 : 전성환

3. 발행년도 : 1987

4. 쪽수 : 91쪽

5. 형식 :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 서울대

7. 목차

1. 서론 : 문제의 제기/ 연구의 범위와 논문의 구성

2. 진보당의 결성

가. 보수세력의 득세와 대립

나. 진보당의 결성과정

(1) 조봉암의 헌정동지회에의 참여 좌절

- (2) 혁신대동운동과 광릉집회
- (3) 야당 후보의 단일화운동
- (4) 조봉암의 3대 대통령선거 출마
- (5) 서상목계의 이탈과 진보당의 창당

다. 조봉암과 진보당의 결성

3. 진보당의 성격

가. 진보당의 이념과 정책

- (1) 혁신정치
- (2) '사회적 민주주의' 이념
- (3) 진보당의 정책
 - 1) 경제정책 : 자유제 계획경제
 - 2) 통일정책 : 평화통일론

나. 당의 조직 및 정치자금

- (1) 조직
- (2) 정치자금

다. 진보당의 조직구조상의 성격

4. 진보당의 소멸과정과 그 배경

가. 진보당의 소멸과정 : 진보당사건

나. 진보당 불법화의 배경

5. 결론

8. 연구목적

지금까지 주로 저널의 수준에서 논의되어 오던 진보당에 대하여 정치학적 영역으로 부각시켜 진보당의 혁신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진보당의 이념, 정책, 조직,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정치치사에서 진보당의 위상을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9. 연구내용

이승만 한민당이 해방직후의 정치세력간의 투쟁에서 승리한 후 여와 야로 나뉘어 대립하였지만, 동일한 보수성을 가진 세력에 의한 정당정치는 매우 제한된 것이었다. 이

러한 보수세력의 득세 하에서 혁신세력은 부정형적인 상태로 존재하다 혁신대동운동을 통하여 결집되어 탄생된 진보당은 사회적 민주주의이념을 통하여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자 모두를 비판하면서 모두를 지양하는 이념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정책인 계획통제정책과 평화통일정책을 보면, 먼저 계획통제정책은 선진제국과는 달리 반공건적 상태에 있는 한국사회는 경제적인 발전과 합리화가 요청된다. 그러나 자유방임주의경제는 불경기, 대량실업, 부의 불평등 및 빈곤을 가져오게 됨으로, 보다 계획성 있는 경제정책이 요구되지만 전면적으로 계획적인 전체주의경제체제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자유와 계획을 조화시킨 자유제 계획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소유형태를 국유국영형태(기간산업 및 독점기업), 공공소유형태(공익적 성격의 대기업), 자유형태(일반대중의 사유재 및 중소기업)로 분류함으로써 계획과 자유를 결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통일정책을 통하여 밝힌 남북한 통일방안은 남북총선거를 통한 평화적 방안이었다. 이것은 사실상 북진통일도 불사하는 무력통일을 주장하는 자유당이나 기본적으로 무력통일에 가까운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남북 총선거의 전제로 남한에서 민주세력의 결집과 단결을 통해 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달성되어야 한다고 한다.

한편, 조직적인 면에서는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 중소기업자, 양심적 종교인 등의 광범한 근로대중을 토대로 한 대중정당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지만, 조봉암이 호헌동지회에의 참여좌절을 계기로 결집된 소수 인사들에 의해 결성된 원내집단적 성격의 신당추진위원회가 진보당의 기원이었다. 또한 이승만의 통치하에서 어떠한 사회집단도 그에 대한 지지를 보내지 않고는 기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노총세력도 자유당 수립시 원외자유당의 한 기동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대중정당으로 정착하기에는 이데올로기적 환경 역시 너무나 척박하였다.

다음으로, 진보당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의 성격 또한 뚜렷한 이념성을 찾아볼 수 없다. 진보당은 우익에서 온건좌파, 임정계 남북협상파 출신, 우익청년단 출신 인사 등 다양한 세력이 조봉암을 중심으로 결집된 것이다.

진보당의 불법화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극단적인 반공이데올로기, 억압적 국가기구를 통한 폭력 등이 그 배경이었다. 비록 짧은 기간에 존재했던 진보당은 실제 정치현실에 정당이념형태로 진보와 보수의 논쟁을 제기하면서 해방이후 혁신세력의 맥을 잇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진보당은 민주사회주의 이념과 정책을 주장하여 한국전쟁 이후 극단적으로 보수화 되어 가는 사회분위기에 일시나마 제동을 걸었다는 면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조봉암 개인에 지나치게 의존하였다는 점, 사회조직을 결여한 채 급조된 선거정당으로서의 모습 속에서 결국 조봉암의 과거 경력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10. 연구의의

개별 정당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서 정당운동이 갖는 의의를 그 시대적 배경과 구조적 조건 속에서 분석하고 있다. 인물중심의 사건나열이 아닌 보다 정치학적 수준에서 진보정당이 불법화된 배경에 대한 설명과 정당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하겠다.

1. 제목 : 한국에서의 진보적 군소정당의 실패에 관한 연구 : 1987년 -1992년

2. 저자 : 노찬백

3. 발행년도 : 1995

4. 쪽수 : 279쪽

5. 형식 : 학위논문(박사)

6. 발행처 : 경희대학교

7. 목차

1. 서론 : 연구목적/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2.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가. 진보정당의 개념과 특성

(1) 진보정당의 개념

(2) 역대 진보정당의 활동상의 특성

나. 이론적 분석틀

(1) 정당내적 요인

(2) 정당외적 요인

3. 진보정당 실패의 외적 요인

가. 정치상황적 요인

(1) 민주화과정의 일반적 특성

(2) 한국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과정

(3) 국제정치적 상황 : 사회주의권의 변화

나. 법적 제도적 요인

(1) 규제입법

(2) 노동통제정책

다. 정치문화적 요인

4. 진보정당 실패의 내적 요인

가. 조직형성

(1) 창당논쟁

(2) 창당과정

(3) 조직구성

나. 정당활동

(1) 주요 활동

(2) 재야조직과의 관계

(3) 보수야당과의 관계

다. 정강정책

(1) 한겨레민주당의 주요 정책

(2) 민중의 당의 주요정책

(4) 민중당의 주요 정책

(5) 정강정책상의 문제

5. 결론

8. 연구목적

이 글은 제 3세계의 일반적 정치현상으로 민주화의 과정에서 진보적인 정당의 활동과 정치세력화의 실패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진보정당이나 진보적 세력들이 정치체제 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9. 연구내용

분석의 시기는 1987년 6월항쟁을 전후부터 1992년 3월 14대 총선 이후 민중당이

해체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군부권위주의정권에 의해 폐해들을 극복하려는 자생적인 사회운동조직들이 급격하게 분출되었고, 이러한 단체나 조직의 정치세력화의 가능성, 즉 이러한 단체들의 구성원들이 주축이 된 진보정당이나 이념정당의 수립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시기로 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의 분석대상으로 진보적 소수정당들은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특징을 정강정책으로 채택하거나 수용했던 정당이나 이와 유사한 분별점이 있는 정당들이다. 즉, 자본주의의 전면적 부정이 아니라 의회제도나 점진적 개혁에 입각하여 경제적 사회적 평등에 중점을 두는 정강정책을 채택하는 정당들인 한겨레민주당, 민중의 당, 민중당이 그 대상이다.

이 글에서는 진보정당 실패의 외적요인으로 정치상황적 요인, 법적·제도적 요인과 정치문화적 요인을 통해 살펴보고, 내적 요인으로 조직형성의 문제, 정당활동의 문제, 정강정책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정치상황적 요인으로 1987년 6월 항쟁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운동은 자본가계급이나 노동계급 등 자본주의 사회의 두 주력계급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학생, 지식인, 종교인, 재야 정치인 등의 중간집단들에 의해 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러한 세력들은 대체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주도하는 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저항세력내의 진보적인 강경파나 노동자계급의 요구에 비하여 보수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 민주화과정의 보수적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진보정치세력이 민주화과정에서 중간집단들로부터 효과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요인과도 연결되는 문제였다. 또한 민주화 이후 중간집단들의 연합이 분열되는 과정 역시 정치세력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보수야당의 분열과 지역주의의 동원 속에서 사회운동세력의 분열이 정치세력화를 더디게 했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정치적 상황으로는 사회주의권의 변화가 초래한 이념적 혼란을 들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변화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고, 사회운동세력의 입지를 좁히게 만들었다.

법적·제도적 요인으로 특히 국가보안법과 노동통제정책을 들었고, 아울러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같은 관행에서 보이듯이 정권의 억압기구들의 활동도 진보정당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미국식 정치제도의 무조건적 수용과 선호에 따른 양당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제 3정당의 출현이 어려웠다고 지적한다.

다음으로 정치문화적 요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제약 요인인 반공의식은 법·제도적

제약이나 정치상황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진보정당들이 발전을 가로막는 지속적 요인이다.

진보정당 실패의 내적 요인으로서 조직형성을 창당논쟁, 창당과정, 조직구성의 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창당논쟁에서 87년 대선을 기점으로 후보단일화론, 독자후보론, 비판적 지지론으로 분열되면서 이러한 분열에 따라 후보단일화론에 동참했던 일부 세력은 한겨레민주당을, 독자후보론을 주장했던 세력은 민중정당결성 추진위원회를 거쳐 민중의당을 창당하였고, 비판적 지지론자들은 평민당에 입당, 평화민주통일연구회(평민연)을 결성하는 경로를 밟았다. 민중당의 창당 역시 진보정당의 창당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시작으로, 진보정당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 즉 독자정당창당론, 민주연합정당건설론, 민주연합추진위원회 등의 분열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열 속에서 단일진보정당의 출현은 불가능했으며, 사회운동세력의 분열과 이합집산은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이 정권대체세력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창당과정에서는 첫째, 진보정당의 창당 시기나 정당의 성격을 둘러싼 의견대립이 창당 과정에서도 전개되어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켰다. 둘째, 이로 인하여 당내 내부분열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급조된 창당은 몇몇 인물 중심적 정당의 양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또한 조직구성상에 있어서도 이러한 과도제적 양상을 탈피하지 못했고, 다만 민중당의 경우 당원중심의 정당운동을 위한 노력이 보였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 진보정당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당원의 충원이나 정당내의 민주적인 절차의 실현을 꼽고 있다. 그 동안 진보정당들은 법정당원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를 진보정당 스스로가 제공해야 하며, 노동조합의 정당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양성적 정치자금의 비중이 높아져야 하고 이를 위해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야 함을 지적한다. 이를 위해 국가보조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수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력한 야당을 필요로 하는 정치상황들로 인하여 그 동안 진보정당들은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했다. 특히 민주화과정에서 당대당의 정책연합이나 선거연합보다는 주로 보수야당에 통합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이러한 양상을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산업화과정에 소외된 산업노동자 등 서민계층의 이익 수렴, 정책대안화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차별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한편 사회운동세력과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민중당의 경우에서 보이듯이 민중당의 후보가 출마한 지역의 노동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시민운동 및 대중운동과 밀접히 결합되고 그것을 정치력으로 전화시켜 낼 수 있는 조직력이 필요하다.

10. 연구의의

이 논문은 진보정당의 실패 요인에 대한 진보정당의 내적·외적 조건들을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1987년~1992년 사이의 진보정당들이 출현하게 되는 논쟁들과 활동사항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이 시기의 진보정당운동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1. 제목 : 차이와 반복, ‘4·19혁명’과 ‘6월항쟁’ 이후의 진보정당 비교,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2. 저자 : 손호철

3. 발행년도 : 1999

4. 쪽수 : 28쪽

5. 형식 : 일반논문

6. 발행처 : 푸른숲

7. 목차

1. 정당의 핵심: 정강·정책
2. 진보정당의 추진주체
3. 진보정치 실험의 한계
4. 가능성의 단면들

8. 연구목적

이 글은 두 차례의 민주화 국면, 즉 4.19혁명 이후의 민주화 국면과 87년 6월 항쟁 이후의 민주화 국면에서 시도된 진보정당 건설 움직임을 비교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이 글은 민주화에 의해 확대된 정치적 공간 속에서 진보 세력의 진보정당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으며, 민주화의 조건 속에서도 이들 움직임을 좌절시킨

요인은 무엇이고, 60년대 초와 80년대 말, 90년대라는 상이한 조건 속에서 시도된 진보정당 실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그 정강과 이념, 주도세력, 결과와, 그 같은 결과의 원인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9. 연구내용

우선 1장에서는 정당의 핵심으로서 정강·정책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은 보수정당과 달리 이념정당인 진보정당의 경우 정강·정책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때 이 글은 60년대 초 진보정당들의 정강·정책에서 두드러진 것은 모든 정당들이 당의 이념으로서 그 내용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주의’ 내지 ‘민주적 사회주의’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공산주의 세력들이 대부분 괴멸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같은 온건한 진보 세력이 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역사성에다 분단현실, 국가보안법 등 법적 제약에 의해 설사 더 급진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든가 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이 시기 당의 성격에 있어서는 대부분 ‘국민의 정당’, ‘국민의 대중정당’ 등 의회정당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의 진보정당들이 가지고 있던 정강·정책들에 대해서는 민중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바, 민중당은 ‘민중주체 민주주의’를 그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60년대의 진보정당들이 내걸었던 사회민주주의 내지 민주적 사회주의 보다 훨씬 급진적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것은 내용적으로 과거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사회주의의 전단계로 파악했던 ‘민중민주주의’를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적용시킨, 80년대 운동권의 ‘좌파’ 세력이었던 ‘PD’ 진영의 반제반독점 민중민주주의론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한다.

또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상·결사의 자유가 아직도 제한되어 있는 등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자본주의의 폐절과 사회주의라는 기치를 직접적으로 내걸고 있지는 못하지만 “노동해방, 인간해방”이라는 기치를 명시적으로 내걸음으로써 사실상 사회주의를 지향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 다만 민중의 주체성과 주도성을 강조하고, 시장 사회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는 등 사회주의와 구별되는 차이점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의 성격 역시 60년대 대중을 이루었던 의회정당을 넘어서고 있다고 분석한다. 즉

광범한 민중운동과의 결합과 직접민주주의 등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60년대의 진보정당과 달리 의회주의적 국민대중정당이 아니라 평의회민주주의 내지 '유로코뮤니즘 좌파'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이 글은 민중당이 60년대 진보정당과 구별되는 중요한 또 다른 차이를 반제외식이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 통일문제에서도 60년대에는 꿈도 꾸기 어려운 주한미군의 철수를 과감하게 주창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밖에도 민중당은 '68혁명' 이후 서구에서 새롭게 부상한 포스트모더니즘과 신사회운동의 합리적 측면에 주목, 성차별의 근절, 생태학적 발전모형이라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음을 규명하고 있다.

2장에서는 진보정당의 추진주체의 측면을 비교하고 있는데, 4.19정국에서의 진보정당의 경우 다수파를 이루는 주류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이들이었고, 비주류는 해방정국에서 조선공산당, 남로당, 빨치산 등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가 살아남은 잔존세력으로서 사회민주주의적 노선을 추구한 주류와는 달리 반제민족해방을 목표로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때 이 글은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점이 60년대 초의 경우, 80년대 말의 진보세력과는 달리 주류, 비주류 할 것 없이 진보세력은 모두 보수야당과의 정책연합이나 비판적 지지라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독자적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독자노선을 추구한 사람들이었음을 강조한다. 그것은 보수야당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친일지주들을 중심으로 한 한민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역사적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데다가, 56년 대선과정에서 조봉암이 추구했던 야당 통합운동, 이후 조봉암 출마, 진보당 사건 등에서 보여준 보수야당의 반민주적 태도, 나아가 해방정국 등에서 남아있는 진보세력의 독자적인 자기정체성에 대한 강한 집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

한편 80년대 말~90년대 초의 진보세력의 경우는, 60년대 초와는 달리 80년 광주학살과 이후 소위 C-N-P 논쟁을 시발로 이루어진 사회구성체 논쟁 등을 통해 세력을 확대한 주체사상과 등 민족해방이데올로기 세력(NL파)이 다수파인 주류로 자리 잡았다고 말한다. 반면에 소수파인 비주류는 민중민주주의 내지 '민중주체 민주주의' 이념을 내세운 소위 PD세력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보세력의 내부 구성의 차이 이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것은 바로 진보정당건설에 대해서 이들 세력이 추구한 노선이라고 말

한다. 즉 주류, 비주류 모두가 독자적인 진보정당 건설을 추구했던 60년대 초와는 달리 80년대 말의 경우 비주류인 민중민주주의 세력만이 독자적인 진보정당 건설을 모색했을 뿐, 다수파인 민족해방운동 세력은 이 같은 진보정당건설에 반대하여 보수야당과의 정책연합 내지 보수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노선을 추구하였다는 것이다.

3장에서는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두 시기에 걸쳐 이루어진 진보정치 실험의 한계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 글은 두 시기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규정하는 요인들을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선 60년대 초의 실험이 좌초된 것은 유권자가 아니라 군부 즉 5.16쿠데타였던 데 반해, 90년대 초 민중당 실험을 좌초시킨 것은 제도적 장벽이었다고 분석한다. 또 민중당의 경우 내부분열도 한계요인이었음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한편 이 글은 60년대 초 실험이 '상대적인 선전'이었으며 80년대 말 실험이 실패였다고 규정하고서는 그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이때 60년대 초가 4.19혁명에 의해 정치적 공간이 넓어지자 '졸속으로' 정당을 만들고 정치활동에 나선 무임승차자였던 데 반해, 80년대의 경우 70년대 민주화 투쟁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민주화운동의 조직적 역량과 노동자계급이라는 잠재적 지지세력을 갖추고 있는 등 유리한 조건에 놓여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문제는 이처럼 훨씬 유리한 조건에 놓여있던 80년대 말의 진보세력이 어떻게 해서 오히려 60년대 초보다 훨씬 저조한 성과를 거두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 지역주의이다. 60년대 초의 경우 지역주의는 선거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80년대 말~90년대 초의 경우는 지역주의가 지배적인 정치적 균열구조와 투표결정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둘째, 진보진영의 다수파인 주류의 '우경적'인 노선, 즉 진보진영의 다수파인 민족해방운동세력이 독자정당건설에 반대하여 보수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노선을 취했다. 이외에도 60년대 초의 경우 기존 보수정당들의 시민사회 침투력이 낮았으며 일반유권자들의 부르주아 정치에의 포섭이 상대적으로 덜했다는 점, 그리고 일반대중 수준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월성이 내면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이 글은 60년대 초, 90년대 초 두 시기 모두 단지 급진적 지식인 위주의 위로부터의 운동이었지만, 이후의 진보정치실험은 대중조직들의 성장에 기반 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 가능성의 단면을 볼 수 있다면서 글을 맺고 있다.

10. 연구의의

이 글은 진보정당실험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두 시기, 즉 4.19혁명 이후와 87년 6월 항쟁 이후 시기를 비교하고 있다는 자체부터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즉 비교연구를 통해 정치참여운동, 특히 진보정당운동 연구의 주종을 이루는 성과와 한계요인에 대한 분석이 보다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60년대 초 진보정당운동의 상대적인 성공과 80년대 초의 상대적 조건의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실패요인으로서 주류파의 노선에 주목하고 있는 점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글은 이후 90년대 후반을 경과하면서 다시금 활성화되고 있는 진보정당 운동의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게 참조될 것이라고 보인다.

1. 제목 :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현실성, 『동향과 전망』³⁸⁾

2. 저자 : 장상환

3. 발행년도 : 1999년 가을

4. 쪽수 : 29쪽

5. 형식 : 일반논문

6. 발행처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7. 목차

1. 머리말

2. 진보정당의 필요성

3. 과거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검토

1) 민중당의 실패 이유

2) '국민승리21'의 비판에 대하여

4. 진보정당의 현실적 가능성

1) 참여세력 면에서 진보정당 건설 역량은 강화되었다

2) 주도세력의 정치적 역량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5. 진보정당 추진현황과 문제점

38) 독자정당활동의 참여동기/ 논쟁과 중복

6. 진보정당의 발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 1) 창당시기
- 2) 진보정당의 주체
- 3) 진보정당의 이념과 정책
- 4) 내부민주주의의 확립
- 5) 대중투쟁과 선거 등 정당활동
- 6) 대중단체와 정당의 역할분담
- 7) 지역과 부문-조직문제

7. 맺음말

8. 연구목적

이 글은 1999년 4월 18일 진보정당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것 등과 관련, 진보정당의 필요성, 진보정당의 현실적 가능성, 진보정당이 담아야 할 진보적 정책과 이를 위한 형식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9. 연구내용

머리말에서 이 글은 우선 진보정당운동의 발전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가지 논점들에 대해 정파적 입장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그리고 노동운동의 발전, 사물의 변증법적 발전의 시각에서 이에 접근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2장 진보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1997년 말의 외환위기와 IMF구제금융 이래 우리 사회는 불황, 실업, 빈익빈 부익부, 독점심화 등 자본주의적 모순을 첨예하게 겪고 있다. 둘째, 이러한 위기적 사태에 대처해야 할 책임을 지닌 기성 보수 여야당의 정당동향은 대중들의 정치적 실망만 증폭시킬 뿐이다. 셋째, 노동운동의 발전과정을 보더라도 진보정당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이러한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가운데, 이 글은 3장에서 과거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검토를 민중당의 실패요인과 국민승리21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선 민중당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는 이 글은 주도세력들의 전술적 오류도 작용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객관적 조건의 한계가 더 컸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사회는 최근까지도 자본주의적 모순을 첨예하게 겪지 않았고, 이 때문에 노동대중들이 진보정당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았다는 점이 실패의 결정요인이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승리21에 대한 비판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대선과정의 오류(“일어나라 코리아!, 국민후보론)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둘째, 대선 후 국민승리21은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출신인사들이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고 그들의 행태는 ‘패권주의적’ 이고 ‘선점주의적’ 이다. 셋째, 변혁적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넷째, 국민승리21은 의회주의정당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다섯째, 국민승리21의 실천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승리1을 대체하는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정치조직 내지 정당의 창설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세력화를 추구해야 한다와 같은 것들이다.

이에 대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논박하고 있다. 첫째, 이러한 비판은 정파적인 비판의 성격이 강하다. 둘째, 조직과 활동의 변증법적, 역사적 발전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관념적 비판을 하고 있다. 셋째, 국민승리21의 노선은 비변혁적인 개량주의로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 넷째, 의회주의정당 노선과 투쟁정당 노선을 완전히 이질적인 것으로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이 아니라 관념적이다. 다섯째, 국민승리21의 현재의 행보는 진정추 인사들이 좌우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진보정치 세력이 아직 미약한데, 그리고 대중들의 의식과 정치적 활동경험의 정도가 아직 낮은 수준인데 지금 여러 정치세력 분파들이 독자적인 창당을 하는 것은 공멸을 초래할 따름이다.

한편 이 글은 2장의 진보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이어 4장에서 진보정당이 현실적으로 성립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위한 조건과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선 대중들의 적극적 참여와 정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도세력의 정치적 경험 축적 등의 역량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현실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참여세력의 면에서 진보정당 건설의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여전히 주도세력의 정치적 역량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진보정당을 추진할 주요 주체가 되어야 할 세력이 민주노총, 국민승리21,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청년진보당, 정치연대 등으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이들 간의 제반 이견을 종합해내고 대안적인 이론과 현실을 통일시켜 나가는 정치적 지도역량이 아직은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글은 5장에서 진보정당의 추진현황을 소개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 글이 제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진보정당에 참여할 제반 정치세력들을 충분히 집결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추진위원대회를 준비한 과정은 참여자의 적극적 참여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조급한 면이 있다.

이와 함께 이 글은 진보정당의 발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 창당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선거를 겨냥하여 성급하게 창당해서는 안 된다. 2) 진보정당의 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자계급정당이 아니라 '노동자 중심의 계급연합정당, 민중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진보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하여 재벌대기업의 소유경영체제의 개혁과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사회적 조절과 민주적 통제를 구체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4) 내부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분파들의 공통 주장과 요구를 집약해야 한다. 5) 대중투쟁과 선거 등 정당활동 문제에 대해서는 당면한 시대적 과제 내지 대중적 요구의 해결을 위하여 앞장서서 투쟁함으로써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고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6) 대중단체와 역할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자주적인 위치를 유지하면서 상호 지원 협력하는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7) 지역과 부문-조직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문의 당원들을 지역조직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끝으로 이 글은 본격적 진보정당활동이라는 국면을 맞이하였음에도 민중들의 경험이 부족함을 재차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반적 원칙과 이론, 여러 선후진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10. 연구의의

이 글은 무엇보다도 진보정당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쟁점들을 상세하게 추적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진보정당의 발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소개와 그에 대한 입장의 제시는 이후 진지한 논쟁지점들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진보정당운동의 연구에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더불어 진보정당건설을 추진하는 제반 주체들의 주요 논리구조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현재 진보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제세력들이 어떠한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분화(분리)'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참조가 될 것이다.

나. 참여동기/ 논쟁

1. 제목 : 합법 비합법 정당의 변혁론에 관한 연구

2. 저자 : 최문성

3. 발행년도 : 1991

4. 쪽수 : 244쪽

5. 형식 : 학위논문(박사)

6. 발행처 : 서울대

7. 목차

1. 서론 : 문제의 제기

2. 연구방법론 및 연구대상 : 연구방법론/ 연구대상

3. 진보당의 변혁론

가. 변혁운동론에 대한 기본 인식

나. 변혁운동사에 대한 인식

다. 변혁운동론의 대상과 동력

라. 대중운동의 방식

마. 종합 비판

4-1. 제 2공화국 기간의 진보정당의 변혁론(1) - 사회대중당

가. 변혁운동론에 대한 기본 인식

나. 변혁운동사에 대한 인식

다. 변혁운동론의 대상과 동력

라. 대중운동의 방식

4-2. 제 2공화국 기간의 진보정당의 변혁론(2) - 민족자유통일협의회

가. 변혁운동론에 대한 기본 인식

나. 변혁운동론의 대상과 동력

다. 대중운동의 방식

라. 종합 비판

5. 통일혁명당의 변혁론

가. 변혁운동론에 대한 기본 인식

- 나. 변혁운동사에 대한 인식
- 다. 변혁운동론의 대상과 동력
- 라. 대중운동의 방식
- 마. 종합 비판
- 6.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의 변혁론
 - 가. 변혁운동론에 대한 기본 인식
 - 나. 변혁운동사에 대한 인식
 - 다. 변혁운동론의 대상과 동력
 - 라. 대중운동의 방식
 - 마. 종합 비판
- 7. 변혁론의 변천
 - 가. 변혁론의 비교
 - 나. 변혁론의 전반적 특징
 - 다. 변혁론의 변화의 배경
- 8. 결론

8. 연구목적

이 논문은 그간 한국의 진보정당이 추구한 사회변혁의 성격은 무엇이며 어떤 이념과 가치체계를 지니고 사회변혁을 도모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이 그 목적이다. 여기서 진보정당은 변혁의 핵심문제의 해결(민중권력의 창출)을 통해 변혁의 근본문제(생산양식의 대체)를 해결하고자 하는 세력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진보정당들이 갖는 각각의 차이점 혹은 공통점은 대체로 변혁운동론에 대한 기본 인식, 변혁운동사에 대한 인식, 변혁운동론의 대상과 동력, 대중운동의 방식 등을 둘러싼 것으로 보면서, 이에 대하여 진보당, 사회대중당, 민족자주통일협의회, 통일혁명당, 남조선민족해방전선 등 합법·비합법 정치조직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대상으로서 변혁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혁운동에 대한 기본인식(변혁운동의 지도사상 혹은 철학적 기반, 모순론, 역사관 등), 둘째,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한국사회의 성격, 변혁운동의 임무와 성격 등), 셋째, 변혁운동의 대상과 동력에 대한 인식(사회의 기본 대립관계, 국가권력에 대한 인식, 중심투쟁방법 등), 넷째, 대중운동의 방식(대중의식화의 주된 내용, 조직노선, 대중투쟁의 원칙)

9. 연구내용

진보당은 의회를 통한 평화적 이행으로서 자본주의 모순을 지양하고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노동자, 농민, 빈민, 양심적 인텔리, 종교인, 중소기업자 등의 연합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념적 공간의 부재, 보수정당들의 정책과 차이 점이 드러나지 못하였고, 통일전선노선을 등한시하여 민주연합, 선거과정에서 반자유당연합마저 구축하는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중정당을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정당으로서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는데 실패하였고, 대중조직과의 어떠한 유기적인 조직적 연관을 맺지 못하였다.

사회대중당은 4.19에 이어 민주혁명의 완수를 주요 임무로 파악하면서 이와 더불어 자주적 경제체제의 확립, 민주적 복지사회의 실현을 꾀었다. 이러한 변혁운동을 위하여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자, 기술자, 관리자, 자유직업자 등 근로하는 전체국민과 청년 지식층의 결합으로서 사회대중당을 규정하고, 계급형성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노동자, 농민보다는 진보적 인텔리를 변혁운동의 주력군으로 상정하였다. 하지만 강력한 반공 국가를 원했던 미국의 아시아전략 등 국제정세에 어두웠던 점, 민중부문에 대한 고려 없이 의회진출을 위한 정당결성에 치우쳤다는 점, 국가기구의 민주적 개조와 일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결여 및 민중생활의 보장을 위한 대안의 불철저함 등으로 인하여 4.19 혁명의 지속을 위한 정치적 지향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단순히 자유당과 진보당을 반대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민족자주통일협의회는 4.19 이후 고조되는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를 수렴하고 조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통일방안의 단일화를 위한 범국민적 협의체 구성에 제 사회단체와 정당들이 합의하여 결성된 민족자주통일협의회는 자주, 평화, 민주주의 3대 원칙에 의거 남북협상에 의한 자주적 통일을 주장하는 등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집중시켰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전략적 목표의 부재로 인하여 투쟁목표를 단계적으로 쟁취하지 못하고, 주어진 정치공간을 지나치게 조급하게 이용하였다.

통일 혁명당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국사회를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규정하면서 민족적 독립과 민주주의, 그리고 조국통일을 주요 임무로 상정하였고, 지하당 전통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자생적인 민주화운동가들의 결합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은 신식민지 지배하의 매판적 관료독점자본주의로 한국사회를 바라보면서 반제반파쇼투쟁을 위한 통일전선 구축을 당면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합법·비합법 정치조직들의 변혁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비과학적 인식으로 인하여 대중과 괴리되었거나 선도적 투쟁에 머물렀거나, 민족자주 통일협의회와 같이 통일운동에서의 관념적 과격성과 낭만성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변혁의 지도사상과 매시기 그들이 채택한 전술과의 불일치 및 정세인식의 오류 등으로 기층 대중조직과의 연대에 실패하였다.

10. 연구의의

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합법·비합법 정치조직들에 대하여 변혁론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이들의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활동 주체의 입장을 짚어봄으로써 그들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1. 제목 : 진보정당운동을 둘러싼 쟁점과 반론, 『동향과 전망』

2. 저자 : 장상환

3. 발행년도 : 2000년 봄

4. 쪽수 : 20쪽

5. 형식 : 일반논문

6. 발행처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7. 목차

1. 머리말

2. 민주노동당의 진보세력 대표성

3. 진보정당의 주체

1) 정파적 입장과 노동자계급의 입장

2)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정당

3) 노동자계급 정당화 계급연합 정당

4)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능력의 문제

4. 진보정당의 이념과 조직문제

1) 진보정당의 이념

2) 제반 정파의 진보정당 내 정치적 블록화 가능성

3)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관계

5. 맺음말

8. 연구목적

진보정당과 관련되는 여러 이론적, 조직적 문제에 대한 본격적 검토를 위한 글로서 1999년 〈동향과 전망〉 가을호에 실린 저자의 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현실성”에 대한 이해영 교수와 오창엽 씨 비판에 대한 반론 형식의 글이다.

9. 연구내용

이 글은 머리말에서 저자 장상환 교수의 글에 대한 이해영 교수와 오창엽 씨 비판이 진보정당과 관련한 여러 이론적, 조직적 문제에 대한 본격적 검토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객관적 조건과 사실과 사물은 변화 발전 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2장에서 이 글은 이해영, 손호철 교수 등과 같은 이론가와 오창엽 씨와 같은 청년진보당이라는 또 다른 진보정당운동가의 비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제 논자들은 민주노동당이 노동자계급의 아래로부터의 동력에 기반해 있지 않으며(이해영), 민주후보 운동을 계승하고 있지 않아(오창엽) 진보세력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비판적 지지론과 독자후보론, 그리고 후보단일화론 등의 분열을 일으킴으로써 ‘1987년의 DJ’가 되고 있다(손호철)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자 장상환은 민주노동당이 민중의 당, 민중당 등 과거 진보정당과 달리 민주노총, 전국민민연합 등의 대중조직과 국민승리21을 비롯한 여러 정치세력이 참여해서 만든 정당일 뿐만 아니라 농민, 여성, 시민운동, 학계 등 다양한 대중조직과 단체, 개인이 참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절대다수 민주진보 진영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3장에서는 역시 제 논자들의 비판지점이었던 민주노동당 ‘옹호’에 대한 정파주의, 정당중심주의, 계급연합주의 ‘혐의부과’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정파주의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승리21은 하나의 정파이지 않았으며, 민중당 잔류 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둘째, 정당중심주의 혐의에 대해서는 사회운동의 한 영역인 정치투쟁이 정당이라는 조직형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운동주체들의 역량이 성장하고 객관적 조건이 정당결성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조건의 변화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계급연합주의 혐의에 대해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종속적 성격과 재벌 주도적 성격 때문에 근로민중 가운데 소생산자 계층의 상당부분의 생활상

태가 노동자계급에 비해 결코 더 낮지 않기 때문에 계급연합당이 필연적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의사결정구조를 볼 때에도 노동부문의 실질적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중심성에 있어서 별반 문제될 것이 없다.

4장에서는 이념과 조직에 대한 문제제기에 답변하고 있다. 우선 이 글은 민주노동당의 이념이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 대부분이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으며, 의회주의 합법주의라는 비판 역시 합법과 비합법은 상황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판이 아니라고 말한다. 한편 제반 정파의 진보정당 내 정치적 블록화 가능성과 민주노총과의 관계문제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도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민주주의 관철을 통해 해결해 가는 방안을 통해 가능할 수 있으며, 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전국조직이나 산별노조, 산별연맹, 조합원 개인 모두 특정 정당을 지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못마땅한 점을 과도하게 의식한 탓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마저 부정하는 무리한 논리의 전개라고 반비판한다.

결국 이 글은 이러한 반비판을 수행하고 진보정당을 둘러싼 여러 자기 논쟁점에 대해서 논리적, 관념적 접근이 아닌 정세적 조건을 고려하는 역사적 구체적 접근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

10. 연구의의

이 글은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등장한 민주노동당이라는 실체를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적 글로서 당시의 논의지형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을 둘러싸고 전개된 이들의 논쟁을 통해서 형성된 쟁점들은 이론-실천적 쟁점들을 함께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고 있다 하겠다. 한편 이 글이 정치참여운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접근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역사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이 분야 연구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할 것이다.

다. 결과 및 평가

1. 제목 : 정계개편의 전망과 정당운동의 위상, 한국사회연구소 편, 『대중정당-민족민주대중정당의 이론과 현실』

2. 저자 : 고성국

3. 발행년도 : 1989

4. 쪽수 : 21쪽

5. 형식 : 일반논문

6. 발행처 : 백산

7. 목차

1. 문제의 소재
2. 정치세력화의 문제
3. 보수야당과의 관계문제에 대하여
4. 정계개편과 민족민주대중정당

8. 연구목적

이 글은 1989년경 한국 민주주의의 '정초선거' 라고 할 수 있는 87년 대선과 88년 총선 이후 조성된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도권 정치세력 내부로부터 제기된 '보수연합적 정계개편론' 과 관련하여 국민대중 및 민주화운동세력의 정치세력화의 문제와 합법정당 건설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9. 연구내용

우선 이 글은 첫 장에서 당시 제기된 보수연합적 정계개편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정계개편론은 지배세력의 정치력에 의한 지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기까지 하다는 현실인식을 근거에 깔고 있다. 즉 그간의 물리적 억압과 일방적인 정치적 배제방식에서 동의와 설득에 의한 지배방식으로의 전환에 바탕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계개편론이 상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정국구도가 다수의 강력한 보수와 소수의 취약한 혁신 간의 이분법적 구도이다. 소위 '보수-혁신' 구도로 불리는 이러한 의제

적 대립구도는 이미 '민주와 반민주'라는 현하의 대립구도를 자의적으로 지양하면서, '보수와 혁신'이라는 구래의 이데올로기적 분식(粉飾)을 강제함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계개편론은 향후의 한국사회가 상당한 지속성을 가지면서 성장·발전해 나갈 것임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배세력에게는 경제성장률이나 수출증가율 등 성장지표의 지속성이 유지된다면, 한국자본주의의 종속적 구조와 독점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발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있어 한국사회발전을 위한 관건적 문제는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강화로 모아지게 되며, 정계개편은 이러한 발전전망에 조응하는 정치권의 재편이라는 차원에서 제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은 정계개편이 비록 제도권 정치세력의 재편을 기본축으로 하면서 민주화운동세력을 대상화하려 한다 하더라도 정계개편의 결과가 '보수-혁신'의 이분법적 대결구도로 외화되는 보장은 미약하며, 정계개편이라는 최초의 발상이 꾸준히 성장하는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그리고 이미 그 정치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민대중의 정치적 진출에 대한 수세적 대응으로서 제기된 것이므로 향후 정계개편을 가름할 결정적인 변수는 오히려 민주화운동세력의 향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이 글은 민주화운동세력이 정계개편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민주화 운동세력의 정치세력화와 끊임없는 대중적 정치실천을 통해서이며, 이 때문에 민족민주대중정당 논의는 불가피하게 제도권정치세력들의 정계개편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게 된다고 말한다.

두 번째 장에서 이 글은 정치세력화의 문제를 국민대중의 정치세력화와 민주화운동의 정치세력화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 양자는 약간의 범주적 상이성을 가지면서도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이 문제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정치역학구조와 관련하여 매우 커다란 실천적 중요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선 국민대중의 정치세력화는 국민대중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는 것으로써, 국민대중이 다양한 형태의 정치조직화를 통해 정치의 구체적 행위집단으로 정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이 글은 국민대중의 정치적 진출이 장내·장외 식으로 구분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하며, 오히려 장외에 형성될 다양하고 광범위한 국민대중의 정치조직화야말로 장내정치를 내용 있는 것으로 하면서 그 전개방향에 대한 규정력을 발휘하는 것에 착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민족민주대중정당이 정치세력화 문제와 연관을 맺게 되는데, 국민대중의 정치적 조직화가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될 때 정당형태의 조직화란 그 중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영역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음 민주화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해서 이 글은 첫째, 민주화운동의 정치화세력화가 소수의 문제제기 집단의 정치적 위상이 격상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국민대중에 튼튼히 뿌리박는 대중적 정치세력으로 자신을 세워야 함을 의미하며, 바로 이 부분이 민주화운동세력의 정치세력화와 국민대중의 정치세력화가 만나는 영역이라고 말한다. 즉 (민주화운동세력이) 국민대중의 정치적 조직화 과정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정치세력화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는 한편, 정치적 조직화라는 구체적인 정치현실을 통해 국민대중과 결합함으로써 국민대중 속에 자신의 입지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주화운동의 정치세력화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대중적 정치실천을 구체적 매개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정치세력화가 일방적 자임으로서가 아니라 인정과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존 정치세력은 물론 국민대중으로부터 인정과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의미와 존재의 합법적 근거를 대중적 정치실천을 통해 납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민주화운동의 정치세력화가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조직화작업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최고의 발전형태가 정당형태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현 단계 민주화운동의 정치세력화란 다양한 계급·계층·부문정치세력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일반민주주의적 범주에서의 정치세력화이며, 제계급·계층·부문의 독자적 이해와 분절적 요구를 조직화하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그러한 복합적 이해관심을 포괄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이 국민정당으로서의 민족민주대중정당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 글은 국민대중의 정치세력화와 민주화운동의 정치세력화가 민족민주대중정당이라는 정당형태를 가짐으로써 다음과 같은 부수적 효과를 갖는다고 말한다. 첫째, 민주적 운영원리를 자기생명으로 하는 정당수준의 정치활동경험을 통해 민주화운동세력의 질적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정당형태의 활동을 통해서야 말로 민주화운동세력은 현재의 국민대중이 익숙해 있는 의회주의적 정치구조 내에서의 수권세력으로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장, 보수야당과의 관계문제에 있어서 이 글은 우선 보수야당은 ‘보수·혁신’

대결구도에서 보수연합의 구성에 있어 중요한 상대역이라는 데에서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화운동세력은 보수야당이 보수연합적 지배연합에 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수야당의 중요성은 그들이 현 단계 범민주연합전선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민족민주대중정당은 범민주연합 형성을 위한 하나의 계기로써 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장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정계개편이라는 상황이 민족민주대중정당의 건설 시점 및 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때 이 글은 정계개편과 관련, '정치의 실종', '정치력의 부재'라는 제도권 정치세력의 무력증과 고착상태가 새로운 정치력을 갖는, 그리고 정치발전의 장단기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국민대중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전향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민족민주대중정당의 출현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출현 시점과 관련하여서는 제정치세력 간의 역관계 추이가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민족민주대중정당이 단순히 소수가 의회로 진출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정치공간을 포함한 전체 국민대중과의 모든 계기적 만남의 장을 자신의 활동영역으로 상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결국 민족민주대중정당은 일차적으로는 주체역량의 준비정도, 그리고 출현의 구체적 시점과 관련해서는 보수연합전선과 범민주연합전선의 상반된 운동력의 대립의 추이가 범민주연합전선의 구축으로 귀결될 수 있는 현실정치적 조건을 감안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0. 연구의의

이 글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정세상황으로서 보수연합적 정계개편론을 분석하면서 대안정당의 출현양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장점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89년경부터 제기된 정계개편론은 90년 3당합당으로 구체화되면서, 한국 정당정치는 물론 민주주의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안적 정치세력화의 형태를 국민대중의 정치세력화와 민주화운동세력의 정치세력화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안정당으로서의 민족민주정당이 어떠한 바탕과 방식으로 건설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만하다. 이는 주로 대안정당에 대한 논의가 그 주도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운동세력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렇다.

한편 이 글은 대안정당으로서의 민족민주대중정당이 범민주연합을 구축하는 계기로서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논쟁점을 제기하고 있기도 한데, 이때 주목되는 것이 보수정당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당시 매우 치열한 쟁점을 이루었던 것으로서 대안정당운동의 경로와 방식을 연구하는 데 있어 유용하게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1. 제목 : 진보정당의 가능성에 대한 일 고찰 - 인천지역 조직노동자와 대학생들의 14대 총선 투표형태분석을 통해, 『한국과 국제정치』

2. 저자 : 정영태

3. 발행년도 : 1992년 12월

4. 쪽수 : 31쪽

5. 형식 : 일반논문

6. 발행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7. 목차

I. 문제제기와 조사방법

II. 인천지역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의 특성

III. 진보정치운동진영의 14대 총선 전략

IV. 투표결과에서 나타난 정당별 지지율과 민중당의 한계

1. 전반적인 비교

2. 민중당후보출마지역과 불출마지역의 비교

V. 학생과 노동자들의 투표행위에 미친 요인분석을 통해본 진보정치세력의 한계

VI. 요약과 이 글의 한계

8. 연구목적

이 글은 계급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세력, 특히 민중당이 14대 총선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상정되어 있는 계급 또는 집단, 특히 노동자와 대학생들의 지지가 어느 정도였으며 왜 그 정도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이 글은 인천지역의 노동자와 인하대 학생들의 투표행위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인천지역이 80년대 중반 이래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이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곳이며, 노동자와 학생들의 정치의식도 대단히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9. 연구내용

Ⅱ 장에서는 92년 총선 직선 시기 인천지역의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 있다. 우선 노동운동의 경우 노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할 때 한국노총계, 87년 7월 임금인상과 노조민주화의 기치를 걸고 등장한 주로 중소기업장에 근거를 둔 인노협계, 한국노총의 어용성과 무능을 비판함과 동시에 인노협의 지나친 정치투쟁에 대한 강조노선을 경계하는 중간노조계 등으로 삼분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다음 학생운동의 경우 인천지역 학생운동의 중심축이었던 인하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볼 때, NL과 PD론자 사이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정파별 지지비율은 대체로 NL계가 15%, PD계가 37%이며, 나머지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학생회지도부는 정치적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학생대중을 가두정치현장으로 이끌고 나갔으며, 인노협 중심의 민주노조운동과 마찬가지로 '선진인자 중심의 선도적 정치투쟁'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특히 노학연대의 기치 아래 학생 시절 뿐 아니라 졸업 후 노동현장으로 직접 뛰어들거나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재야정치운동조직 또는 노동운동연구단체에 참여 또는 새로이 만드는 학생들도 많았다고 파악하고 있다.

Ⅲ 장에서는 인천지역에서 출마한 민중후보현황과 정치세력들의 선거전술을 살펴보고 있는데, 인천지역의 민중정치세력은 다양한 입장을 가진 단체와 조직들이 연합한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인천연합)에 의해 대표되었고,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형태와 경로에 대해서는 단체의 수만큼이나 다양하여 행동통일이 잘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크게는 '민주대연합론'과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론'의 두 입장으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조운동진영은 인노협을 중심으로 민중당 지지자들이 많았으며, 인하대 학생운동의 경우는 NL론자들은 민주대연합론을 내지 범민주후보론을 지지하였으며, PD론자들은 민중의 독자후보론에 입각, 민중당후보지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말한다.

Ⅳ 장에서는 투표결과에서 나타난 정당별 지지율을 살펴보면서 민중당의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전반적인 비교를 통해서는 첫째, 투표율을 보면, 인천지역 유권자들의 68%가, 조사한 노동자는 84.6%가, 그리고 학생은 85.9%가 투표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경우 총액임금제 등 중요한 현안이 걸려있었던 데다가 노총 등 노조들의 투표참여운동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학생들의 경우 총학생회에서 투표참여운동을 적극 전개한 결과였다고 보고 있다.

다음 인천유권자들의 각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투표율은 민자당 34.32%, 민주당 30.73%, 국민당 20.42%, 무소속 7.52%, 민중당 5.41% 등의 순이나 조직노동자들의 경우 민주당 53.3%, 민중당 22.1%, 국민당 10.6%, 민자당 8.0%, 무소속 5.0%의 순이며, 학생들의 경우 민주당 44.7%, 민중당 19.2%, 국민당 12.4%, 신정당 6%, 민자당 7.6%, 무소속 6.5%, 공민당 0.7%의 순으로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일단 학생과 조직노동자들의 여권성향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일반유권자에 비해 대단히 낮음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셋째, 후보당 평균득표율을 기준으로 볼 때, 인천지역 전 유권자들의 민중(당)후보에 대한 지지율(7.12%)이 전국평균(6.34%)보다 높으며, 부산(10.19%), 경북(9.46%), 서울(7.87%) 다음으로 높게 나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민중(당)후보에 대한 인천지역 조직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지지는 인천지역유권자전체의 그것보다 훨씬 높은 20%내외에 이르렀다고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민중(당)후보에 대한 인천지역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지지율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인천지역 조직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야당성향을 강하게 가지면서도 투표에서 민중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대부분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표현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넷째, 노조탄압의 대명사이고 독점재벌의 핵심인 현대그룹의 총수가 주도하여 만든 국민당에 대한 인천지역 일반유권자의 지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고, 인천지역에 한정시켜 볼 때 일반유권자보다 훨씬 낮은 지지율을 보여주었지만, 국민당이 조직노동자와 학생들로부터 10% 내외의 지지표를 획득한 것은 국민당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성과였으며 민중운동세력의 입장에서는 '충격'이라고 풀이한다.

한편 이 글은 민중당후보출마지역과 불출마지역을 중심으로도 정당별 지지율을 살펴본다. 이때 정당별 지지는 민중당 후보의 출마여부와 상관없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즉 학생과 노동자의 민중당에 대한 지지율은 일반유권자의 그것보다는 대단히 높은 편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보다는 떨어지고 국민당과 신정당 후보에게 가 버린 표도 적지 않게 나왔다는 사실은 현 단계에서 진보정치세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V 장에서는 바로 민중당의 그러한 한계를 규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선호정당 또는 정치적 입장에 따른 투표를 했지만, 이것이 민주대연합론(혹은 범민주후보론)과 민중독자후보론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민중당에게 반드시 유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 정당이나 정치조직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거나 그 여부를 모르겠다고 한 정치 불신 혹은 무관심층에게는 후보의 공약이나 경력 또는 과거지역봉사정도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분석한다. 이것이 민중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욱 주목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잘 대변하는 정당으로 민중당을 들었던 노동자들마저도 거의 50%가 민중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으며, 민중당을 가장 높게 평가한 노동자와 학생들도 민중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 심지어 PD론자들이 오히려 민주당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표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 글은 지역이데올로기,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의 이데올로기 지형의 전반적 보수화, 그리고 민중당과 민주당의 속성과 활동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글은 특히 노동자들에게 출신지역 내지 지역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끼쳤으며, 이데올로기 지형의 보수화에도 불구하고 민중당의 대응방식이 대안적 이데올로기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이 진보적 정치세력의 강령과 정책 심지어 주요 인적자원을 집단적으로 흡수해온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이 글의 의의는 진보정당이 자신의 주된 지지기반으로 상정하고 있는 노동자와 학생들로부터 왜 그 정도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는가의 이유를 단지 논리적 추론의 형식이 아니라 설문 등을 통한 구체적이고도 실증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이 글 스스로는 한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이라는 특정 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는 진보정당운동 연구를 보다 구체적인 지역연구의 차원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다 하겠다. 물론 이는 여타 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상승발전 할 수 있다 하겠다.

다만 이 글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조직노동자 가운데 비제조직 노동자, 특히 사무직, 서비스직 등 90년대 초반을 경과하면서 조직화와 노조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문의 노동자들과 중간계급층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표본선정 등에 있어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도 이 글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리한 일반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 제목 : 2002년 6·13 지방선거 평가와 16대 대선 전망: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제5회 비판사회학대회 자료집』

2. 저자 : 조현연

3. 발행년도 : 2002

4. 쪽수 : 12쪽

5. 형식 : 일반논문

6. 발행처 : 한국산업사회학회

7. 목차

1. 6·13 지방선거가 남긴 것

1) 민주노동당이 거둔 성과

2) 성과의 의미

2. 16대 대통령 선거와 민주노동당

3. '우리 시대의 진보'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포지티브 선거전략

8. 연구목적

이 글은 6·13 지방선거의 평가와 관련하여 특히 민주노동당의 정당득표가 갖는 의미와 그 원인, 그리고 16대 대선에서 민노당이 가야할 바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9. 연구내용

2002년 6·13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하여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과 지방수준에서 보수 대 진보의 정치적 경쟁 구도를 형성하려는 진보정치세력의 도전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이번 선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었는데, 즉 첫째, 전국적 차원에서 진행된 공직선거 사상 최초로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가장 낮은 투표율(48.9%), 둘째 '3김'의 정치적 퇴조와 '한나라당 압승-민주당 참패-자민련 몰락', 셋째 8.13%의 득표율로 상징되는 민주노동당의 약진으로 요약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초 민주노동당이 내건 목표는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송철호 후보의 울산시장 당선, 둘째 정당투표 득표율 5% 이상 획득, 셋째, 7명의 후보를 낸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체 평균 득표율 2% 이상 획득이었다. 결과는 첫 번째 목표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목표 모두 달성된, 형식적으로 보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절반 이상의 승리'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창당 2년 만에 모두 218명

의 후보가 출마하여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32명, 총 45명이 당선 20.6%의 당선율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당락과 관계없이 출마지역에서 광역단체장 12.80%, 기초단체장 15.35%, 광역의원 19.92%, 기초의원 30.68% 등 10% 이상의 의미 있는 득표율을 얻기도 했다.

특히 사상 처음 실시된 정당명부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전국득표율 8.13%, 1,340,376표를 득표하였으며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9곳에서 광역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키는 비례대표 1번을 모두 여성으로 할당함으로써 9명의 광역비례대표 의원들 모두 여성 약진을 이루어냈다. 더군다나 정당투표에서는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로 자민련(1,072,429표, 득표율 6.5%)을 앞섬으로써 비록 지방선거 수준이긴 하지만 '제3당'으로 부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광주(14.79%), 울산(28.70%), 전남(14.99%), 전북(12.77%) 등 일부 지역에서는 2위를 기록하였으며, 또 제주지역에서는 10.60%, 강원 지역에서는 8.64%의 정당 득표율을 획득함으로써 전국정당으로 뿌리내릴 기반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결과는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함으로써 비로소 정당으로서 자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줄곧 '마의 2% 벽'을 넘지 못하던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8.13%, 134만표라는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노력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되찾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분기별로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는 성과도 지적한다.

이러한 득표결과에 대하여 무엇보다 정당투표제의 실시에 따른 제도적 효과의 결과이자 주체적 실천의 결실로서, 218명에 달하는 다수 후보의 출마와 선거 실천을 통해, 특히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이미지를 높이는 핵심적인 두 축으로 서울의 이문옥 후보와 울산의 송철호 후보 카드를 통해 당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상승시켜낸 결과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실천도 꺾고 있다. 민주노총은 새로 구성된 비대위와 정치위를 중심으로 '정당투표'를 노동자 계급투표의 전략적 타깃으로 설정하고 선거기간 내내 이 부분에 대한 정치 사업을 집중하여 민주노총이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조합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조합원의 72.2%가 정당명부제 투표에서 민주노동당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노총 금융노조의 산별 차원의 지지 결정과 울산 등 구체적인 현장 지원은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이미지 제고와 지지기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당 득표에서 농촌지역의 고득표 현상의 표출은 농민단체의 지지가 현실로 나

타난 측면이 있는데, 특히 호남지역에서의 제2당 부상과 강원지역의 선전 결과는 농민회 활동과 어느 정도 연관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대하여 기성의 보수정치, 부패정치, 무책임정치에 대한 증폭된 불신감과 실망이 작용하여 높은 득표율이 가능했던 것으로 본다. 또한 꽤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노동당과 당 후보에 대해 '교차 투표' 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영남권(부산 10.67%, 경남 8.96%, 울산 28.7%)의 경우 비(非)한나라-반(反)민주 성향의 유권자, 호남권(광주 14.79%, 전남 14.99%, 전북 12.87%)의 경우 반(反)한나라-비(非)민주 성향의 유권자들이 차선으로 민주노동당을 선택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민주노동당을 적극 지지한 결과라기보다는, 기성 보수정당에 대한 일종의 견제 투표의 결과로 보고 있다.

16대 대선의 의의에 대하여 대통령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이래 최초의 '3김 없는 대선'으로, '새로운 지역주의 구도와 보수정치, 3김 정치를 넘어설 수 있는 시험대'이자, '종속적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온 빈부격차의 심화와 엄청나게 악화된 노동자 민중 서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의 문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요하고 또 전쟁국가체제를 완비한 채 제국주의적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미국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 문제,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과 노동자 민중 중심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 문제, 자본 주도의 극도로 보수화 된 시민사회의 극복 문제'가 관건이라고 규정한다.

16대 대선과 관련하여 주요 변수로 보수정치세력의 역관계와 동학이며, 부차적인 측면은 진보정치세력의 대응으로 보면서, 전자와 관련해서는, 사실상의 준정권 교체 효과를 나타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구도로 정치지형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이회창 대세론의 재부상과 확고한 입지 구축, 노무현 지지율에 대한 거품론 대두와 민주당 내분 사태의 심화 가능성, 새로운 변수로서 정몽준 카드의 부상, 자민련 몰락의 본격화에 따른 중부지역 선점 논쟁 및 대선후보군의 이합집산 가능성 등을 지적한다.

진보정치세력의 대응과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시민권을 대중들로부터 검증 받은 '실체' 정당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 4.5~6.8% 수준에서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제16대 대선에 임하면서 ① 6·13지방선거의 성과를 계승하고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진출한다, ② 5만 당원의 확보(현재 23,000 당원)와 전국 정당화(현재 건설된 지구당은 95개)의 기초를 확고히 한다, ③ 진보진영의 정치적 대표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한다(당을 중심으로 범진보진영의 단결과 후보단일화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3대 목표의 실현가능

성 여부가 주목된다고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기성 보수정당, 특히 노무현 후보로 상징되는 ‘(변형) 비판적 지지론’의 흐름과의 경계선 긋기와 진보정치세력의 전략적 독자성의 원칙 확립, 범 진보진영의 총단결과 단일후보의 성공적 선출, 생산적인 정책 경쟁 및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의 결합의 현실화를 통해 대안적 이념정당, 정책정당으로서의 민주노동당의 차별성과 대중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특히 (변형) 비판적 지지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진보진영은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차별한 ‘보수정당 동시 심판론’의 기조보다는 ‘이회창 후보 타격, 노무현 후보와의 차별성 부각’이라는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민주노동당은 색깔론이나 DJ 정권 5년 실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나가되 ‘노무현 흠집 내기’, ‘노무현 죽이기’ 식의 네거티브 한 대응은 지양하고 ‘우리 시대의 진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정정당당하게 분명히 보여주는 포지티브 한 선거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10. 연구의의

이 글은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노동당이 얻은 성과를 분석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16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입장에서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대응하기 위한 고민을 던지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4. 기타(시민·노동운동의 정치참여,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가. 총괄(참여 동기/ 논쟁, 활동사항, 결과 및 평가를 모두 포함)

1. 제목 : 『한국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2. 저자 : 김세균, 김대환, 정영태, 최재현, 손호철, 신광영

3. 발행년도 : 1990

4. 쪽수 :

5. 형식 : 단행본

6. 발행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7. 목차

제1장 노동조합과 정치활동

1절 노동문제와 정치

2절 정치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

3절 한국노동자 정치운동의 기본방향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제2장 한국사회와 노동조합의 역할

1절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 구조적 특성

2절 한국의 정치상황과 정치세력

3절 한국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정치활동

제3장 노동조합 정치참여의 역사와 평가

1절 노조정치참여의 역사

2절 현단계 노조정치활동의 현황과 과제

제4장 정치활동의 대상영역

1절 문제의 제기

2절 입법부

3절 정당

4절 입법부로의 진출

5절 행정부

6절 사회단체 및 여론

7절 노동조합의 국제활동

제5장 노동조합 정치참여제도

1절 정치활동장애법규의 개정

2절 피선거권적 정치활동 극대화 방안

3절 선거권적 정치활동 극대화 방안

4절 정책입안 · 집행과정 참여의 의미

제6장 지방자치와 노동조합

1절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2절 지방자치제도와 노조의 정치활동

3절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노조정치활동

4절 지방자치제도와 노조정치활동의 실천방향

5절 노조의 효과적 정치참여를 위한 과제

8. 연구목적

이 책은 그간 한국노동운동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경제투쟁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 하에, 운동의 질적 도약을 위해 정치운동으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9. 연구내용

이 책은 첫 번째 장에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왜 필요하며, 그 운동의 지향점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전개를 위한 전제조건은 어떤 것인지를 다룸으로써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의 전략과 전술을 수립함에 있어 가져야 할 기초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함께 요청되는 정치사회적 역할을 규명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의 경제·정치적 여건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과 이와 관련된 정치세력 편성 및 정치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세 번째 장에서는 노동조합 정치참여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바, 해방 직후 전평으로부터 시작하여 1990년 전노협에 이르는 동안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살펴보고 있다.

네 번째 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좁은 의미의 정치활동, 즉 특정의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직접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정치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정당과 정부조직,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일반여론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넓은 의미의 정치활동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 장에서 이 책은 좁은 의미의 정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와 이의 수행을 위한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활동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종류를 유형별로 살펴보는 가운데, 이들 각 유형에 따라 장애가 되는 법규와 그 개선방향 및 운동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때 이 책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유형을 크게 그 대상에 따라 정당, 의회, 행정부, 사법부 등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정부정치활동과 여론조성을 통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대국민정치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

고 대정부정치활동은 다시 1) 피선거권적 정치활동 2) 선거권적 정치활동 3) 정책입안, 집행과정의 직접참여 4) 정책입안, 집행과정의 간접참여 5) 로비활동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장에서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노동조합이 취해야 할 대응적인 조직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때 이 책은 그 대응으로서 첫째, 노조조직이 종적 조직에서 종-횡적 조직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둘째, 지역노동조합단체들이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자들에게 조합원들의 표를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일상적인 지방정치활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감시하고 사후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연구의의

이 책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정치참여운동을 그 역사적 전개과정은 물론, 활동의 대상 및 유형 그리고 제도적 측면과의 관계 등을 망라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노동조합의 정치참여운동양상에 대한 단순한 서술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규정하는 경제적·정치적 요인을 살펴보고 있으며, 그로부터 정치참여운동이 어떠한 전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다만 이 책은 쓰인 시기가 1990년이라는 점 때문에, 전노협과 그를 둘러싼 보다 ‘급진적인’ 노동(조합)운동세력의 정치참여운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하겠다.

1. 제목 : 한국 민주화과정에서 운동조직의 역할에 관한 연구 - 1987년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

2. 저자 : 윤모린
3. 발행년도 : 2000
4. 쪽수 : 97쪽
5. 형식 :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 서강대
7. 목차

1. 서론 :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기존연구의 검토,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2. 국본의 활동

가. 6월 항쟁의 배경

- (1) 4.13 호헌조치
- (2)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나. 국본의 생성 : 1987년 5월 결성 ~ 6. 10 국민대회까지

- (1) '상층연합전선'의 조직구조
- (2) 참여세력 - 보수야당, 민주화 단체, 학생조직, 종교계
 - 1) 민주화 운동단체
 - 2) 보수야당 - 통일민주당
 - 3) 종교계
 - 4) 학생운동조직
- (3) 국본의 이데올로기 - 온건적 · 최소주의

다. 국본의 발전 및 활동 : 1987년 6. 10 국민대회 ~ 9월까지

- (1) '반독재연합전선'의 상징적 구심체
- (2) 운동조직의 연대활동
- (3) 대중집회의 개최
- (4) 반독재 · 민주화 투쟁
 - 1) 투쟁목표의 최소주의
 - 2) 투쟁의 지도 및 전술의 개발
- (5) 보수야당과의 연대

라. 국본의 쇠퇴 및 해소 : 1987년 10월 ~ 11월까지를 중심으로

- (1) 공정선거감시 기구로의 전환
- (2) 부정선거 무효화 투쟁

3. 국본의 정치적 함의

가. 6월항쟁과 국본의 관계

나. 국본의 의의

- (1) 정치적 구심체
- (2) 최초의 통일전선운동조직
- (3) 대중조직화 - 대중노선의 구현
 - 1) 최소주의 · 온건적 전술

2) 중산층 통합전략

다. 국본의 한계

(1) 국본 내 조직적 문제

1) 상층연합전선의 한계

2) 정세판단의 오류

(2) 한국 정치지형의 모순

4. 결론

8. 연구목적

87년 6월항쟁의 주요 요구였던 직선제 쟁취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투쟁의 구심체로서 국민운동본부의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9. 연구내용

5공화국 말기 대중의 불만이 고조되었다고는 해도 표출되는 데에는 그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 즉, 대중들의 불만이 고조된다고 해서 곧바로 집합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집합행동은 어떤 형태이든 조직에 의해 매개될 때 조직력과 지속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6월 항쟁 역시 반군사독재 연합전선의 중심체인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를 중심으로 6월 항쟁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분석하기 위해 운동조직의 대내·외적 동학, 다시 말해 대중동원과 국본에 참여하고 있는 운동조직간의 연대를 통해 6월 항쟁 기간 동안 대중적 참여와 동원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국본의 대응전략으로서 국본의 운동 위상 및 목표의 적실성, 영향력 수단, 주요활동에 대해 고찰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본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다.

국본 이전에 김근태 민청련의장에 대한 고문이 밝혀지면서 꾸려진 '민주화운동에 대한 고문수사 및 용공조작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이어진 야당과 재야의 공조는 권인숙, 박종철사건, 4.13 호헌조치들을 겪으면서 국민운동연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탄생하였다.

전체 민주세력 사이에서 국민의 민주화의자와 힘을 결집하고, 제운동권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한 범국민적 연대기구인 국본은 민주협과 통일민주당 등 정치단체, 민통련과 같은 재야, 종교세력 등이 망라된 상층연합의 전선체이다. 국본의 목표를 보면, 온건

적·최소주의이다. ‘호헌철폐, 독재타도’라는 구호에서 보이듯이 최소강령적 요구였고, 비폭력 대중동원을 통해 이를 관철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투쟁목표의 최소주의는 권위주의 정권 역시 정권의 퇴진이 아닌 정권교체의 방식에 관한 것이어서 이전의 5.3인천 항쟁이나 건대투쟁과 같이 억압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지 않았고, 또한 권위주의 정권의 수용이 용이했으며, 도시 중간계급들의 정치적 요구수준에 부합되었다. 그러나 보수야당과의 연합은 직선제 쟁취 이후 국본의 활동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후보 단일화의 시도가 실패하자 거국중립내각 수립과 선거감시운동의 수준으로 마무리되어 해체의 길을 걸었다.

민주화 이행기에 있어 정치적 구심체로서, 그리고 80년대 후반 전국적 규모의 통일전선체로서 그 의의를 갖는 국본은 상층연합전선이라는 측면에서 기층 운동과 결합되지 못하여 6.29 이후 보수야당의 이탈 속에서 보다 대중의 정치적 요구를 수렴하여 확산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최소주의적 접근은 대중의 민주화 열망을 단지 대통령 직선제라는 절차상의 문제로 평가절하 하였다.

10. 연구의의

본 논문은 87년 민주화 이행기에 재야의 구체적인 정치운동으로서 국본의 활동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실제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소주의적 접근이 재야의 정치참여를 가능케 했지만, 상층연합전선이라는 조직적 한계와 최소주의라는 전략의 문제, 즉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주화 요구를 개방된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없었던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제목 : 한국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경쟁, 그리고 헤게모니

2. 저자 : 은수미

3. 발행년도 : 2001

4. 쪽수 : 90쪽

5. 형식 :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 서울대

7. 목차

1. 서론 : 논문의 구성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기존 연구 및 문헌 검토/ 분석틀과 연구방법, 연구대상
3. 프레임 연결: ‘반독재 민주화’ (1980-1987년 6월까지)
 - 가. 운동환경과 프레임
 - 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프레임
 - 다. 소결: 반독재민주화와 내부 프레임 분쟁
4. 프레임 확대: ‘반독재민주주의’ (1987년 7월부터 전노협까지)
 - 가. 운동환경의 변화와 프레임
 - 나. 노동운동의 프레임: 반독재민주주의
 - 다. 시민운동의 프레임: 경제정의/사회개혁
 - 라. 소결: 프레임확대 실패와 분화의 시작
5. 프레임 분화: ‘노동의 시민권’ 과 ‘공공선’ (1993년-1997년까지)
 - 가. 운동환경의 변화
 - 나. 노동운동의 프레임
 - 다. 시민운동의 프레임: ‘공공선’ 과 진보적 시민운동
 - 라. 소결: 뚜렷한 프레임 분화
6. 경쟁적 프레임형성: 낙선운동과 당선운동(97년 이후 현재까지)
 - 가. 운동환경의 변화
 - 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프레임: 경쟁적 양상의 전면화
 - 다. 소결: 경쟁적 프레임의 형성과 향후 전망
7. 요약 및 결론
 - 가. 요약: 동시적이고 경쟁적인 프레임으로의 변화 · 발전/
 - 나. 동시적 · 경쟁적 성장의 원인
 - 다. 동시적 · 경쟁적 성장에 대한 몇 가지 반론
 - 라.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와 경제주의적 경향
 - 마. 해계모니, 그리고 사회운동을 위한 제언

8. 연구목적

이 논문은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한국의 사회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의 전개 양상이 ‘동시적’ 이고 ‘경쟁적’ 인 것이었음을 규명하고, 이러한 점이 해계모니와 정치세력화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프레임은 어

편 성격을 가졌으며, 경쟁적 양상으로의 발전이 사회운동의 헤게모니 지형의 변화를 의미하고, 이것과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검토하고 있다.

9. 연구내용

이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은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마스터 프레임의 변화인 프레임의 연결·확대 그리고 전환에 대한 분석과 비교·검토이다. 여기서 프레임이란 일반적으로 대안적 해석체계나 대항이데올로기에서부터 각종 이슈, 슬로건 등 다양하게 규정된다. 이 논문에서 프레임은 '사회운동의 인지적 동원틀' 즉 쟁점, 슬로건 그리고 이데올로기 및 가치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이러한 프레임 개념을 통한 접근은 그 동안 구조적 분석에 치중한 기존의 방법론에서 벗어나 사회운동의 구조적이고 외부적 조건에 사회운동의 주체적 조건 특히 인지적 측면을 결합시킨 것이다.

또 프레임을 정치세력화의 중요한 요소이자 헤게모니적 능력을 확보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위치 지운다. 이것은 정치세력화와 헤게모니를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통해 재구성 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처럼 정치세력화의 합리적 핵심으로 헤게모니를 강조하게 될 때 프레임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결국 사회운동이 프레임 결속에 성공한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한해서 헤게모니적 능력을 갖추고 또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 된다.

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마스터 프레임의 변화발전 과정은 '동시적' 이고 '경쟁적' 이다. 그 과정은 ① 프레임 연결(민중생존권과 반독재 민주화 프레임의 연결 및 '반독재 민주화' 단일 프레임 형성) ② 프레임 확대('반독재민중민주주의' 로의 확대 및 온건한 '경제정의, 사회개혁' 프레임의 등장) ③ 프레임 분화('노동의 시민권/공익·공공선') ④ 프레임경쟁('노동의 시민권, 당선운동/공익·공공선, 낙선운동')이다. 이러한 과정은 서구의 경험과는 달리 출발부터 '동시적' 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적' 양상을 띠었던 이유로, '거래에 의한 이행' 혹은 '권위주의와 병존하는 느린 민주화' 등으로 규정된 한국민주화 이행의 특징, 90년대 이후 급격하게 이루어진 세계화(globalization)의 효과(사회주의 이념의 쇠퇴와 세계화 등 자유주의적 담론의 부상), 그리고 사회운동의 내적 요인, 즉 노동운동으로부터 노동조합 운동으로의 리더십의 대체 및 이전, 기업별 노조 체계 등의 한계와 광범위한 민주주의 확대를 추구한 포괄적 시민운동이 노동운동의 발전과는 별개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 결과 급진적 이념이 설득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부재한 공간을 시민운동이 대체할 수 있었다. 게다가 기존의 민주화 운동에서 성장하였던 조직적 자원들이 노동운동으로부터 대거 이탈하여 시민운동으로 흡수되었던 것 역시 시민운동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다음으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동시성장과 상호경쟁은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제약하였다. 초기 시민운동의 노동운동과의 ‘거리두기’는 노동운동의 고립화를 초래하였고, 스스로의 이념 및 가치, 요구 등을 공익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노동운동의 그것을 반공익적인 것으로, 즉 계급이기주의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낳았고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설득력을 떨어뜨렸다.

10. 연구의의

이 연구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간의 관계를 주목하면서 왜 노동운동세력의 정치세력화가 실패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운동주체의 문제의식과 이념이 구체적인 현실조건 속에서 헤게모니화 되는가 혹은 되지 못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치운동의 주체가 추구해야하는 ‘프레임’에 대한 폭 넓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한국의 특수한 상황인 시민운동, 노동운동 혹은 민중운동의 분화 속에서 각 주체들의 한계와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제목 : 한국의 시민사회와 낙천·낙선운동에 관한 연구 -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

2. 저자 : 권재홍

3. 발행년도 : 2000

4. 쪽수 : 174쪽

5. 형식 :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 고려대학교

7. 목차

1. 서론 : 문제의 제기/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논문의 구성

2. 시민사회·사회운동이론 : 분석틀 모색

가. 시민사회론에 관한 이론적 경향

나. 사회운동에 관한 이론적 경향

- 다. 분석틀의 모색
- 3. 한국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운동의 변화
 - 가. 시민사회의 형성과 성장
 - 나. 민주화와 시민사회
 - 다. 시민운동의 확산과 시민운동조직의 분화
- 4.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의 전개
 - 가. 태동기 : 정치사회의 지체와 시민사회의 도전
 - 나. 공천반대운동시기
 - 다. 공천철회운동시기
 - 라. 낙선운동시기
- 5. 총선시민연대의 운동조직과 전략
 - 가. 운동의 목표와 이슈, 가치
 - 나. 운동조직의 구성과 특징
- 6. 총선시민연대의 운동 전략과 행위양식
 - 가. 운동전략
 - 나. 행위양식
- 7.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의 결과와 한국시민운동의 과제
 - 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결과와 쟁점
 - 나. 시민사회·시민운동의 과제
- 8. 결론

8. 연구목적

이 논문의 목적은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사례를 통해 그 의미와 특징, 그 결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시민사회의 대안적 비전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9. 연구내용

총선연대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총선시민연대와 정치사회와의 역학관계, 운동조직, 운동에의 동원, 활동방식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

낙선운동의 배경에 대하여 분단과 군사독재의 유산인 낡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역사적 정당성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대안적 정치사회적 제도와 세력의 부재라

는 간극이 총선연대와 낙선운동의 태동배경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총선연대의 활동은 서구의 시민단체에 의한 낙선운동보다는 87년 민주화 운동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즉 87년에는 군부독재정권을 향해 단일한 전선이 형성되었고, 2000년에는 지체된 정치사회를 향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연대의 직접적인 계기는 시민운동단체들의 국감연대활동에서 비롯되었는데 이의 후속작업으로 낙천·낙선운동이 기획되었고, 전국의 480여 단체가 결집한 것이다. 총선연대는 정당으로 하여금 무능, 부패, 부적격, 반인권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도록 공천 반대운동으로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음모론과 연계론을 제기하는 등 대립 속에서 총선연대는 총 115명의 공천반대자를 발표하고 공천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가 처분신청, 다양한 캠페인 전개와 집회를 통해 공천철회운동을 벌여 정치사회를 압박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이후 낙천자 명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된 후보들의 병역, 납세, 재산형성에 비리가 있는 후보 86명에 대한 낙선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그 중 22명의 집중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낙선운동을 전개하여 낙선대상자의 70%가 낙선하여 시민운동단체가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했음을 보여주었다.

낙천·낙선운동의 성과는 첫째,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시민들과 시민운동단체들이 정치개혁의 주체라는 당위성과 가능성을 입증했다. 둘째, 900여 시민단체들이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해 조직적 활동을 한 점 역시 시민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셋째, 다양한 퍼포먼스와 행사, 젊은 유권자를 겨냥한 페스티벌 개최, 버스투어 등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 전개와 특히 인터넷을 통한 발 빠른 대응과 광범위한 소통은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총선연대의 활동은 정치엘리트들의 카르텔 구조를 가능케 하는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동요시키지 못하였다. 특히 정치문화적인 차원에서 '네거티브 운동'의 한계를 드러냈다. 낙선대상을 대신할 인사를 발굴하지 못함으로써 낙선이 정치권 개혁과 연결될 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게 되며, 네거티브 운동에 치중하다보니 진보정치 세력과 연대를 이루지 못한 문제도 있다. 이와 함께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기성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정치적 허무주의로 연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공천반대자와 낙선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의 한계와 문제를 지적한다. 부패기준을 제시하였지만 후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총체적인 평가를 할 수 없었고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난점이 있었으며, 낙선운동 대상 명단에서도 도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정책적 성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한다.

이러한 쟁점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87년 민주화 이후 지체되어 왔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본다.

10. 연구의의

이 연구는 비교적 꼼꼼하게 총선연대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고, 이 총선연대가 갖는 정치사적 의미와 한국의 시민사회에 남기고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1. 제목 :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에서의 민주노총사례를 중심으로 -

2. 저자 : 배덕신

3. 발행년도 : 2001

4. 쪽수 : 79쪽

5. 형식 :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 고려대 노동대학원

7. 목차

1. 서론 :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기존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관점/ 연구의 방법

2. 민주노총 정치사업의 전개와 현황

가. 민주노총의 정치사업의 전개

- (1) 96~97년 총파업과 97년 대선 참여
- (2)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과 2000년 총선
- (3) 소결 : 정치사업과정에 대한 평가

나. 민주노총의 정치사업현황

- (1)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조합원의 참여현황
- (2) 일상시기 민주노총의 정치활동 현황
- (3) 소결 : 참여현황 총괄

다. 정치세력화 과정 및 현황에 대한 총괄

3.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환경적 제약요인

가. 정치·제도적 환경요인

- (1) 국가의 강압적 노동통치
- (2) 법제도에 의한 제약
- (3) 도시공간의 제약
- (4) 소결 : 정치 제도적 환경요인 총괄

나. 재야세력의 분열과 절대역량의 축소

- (1) 학생운동출신 재야세력의 성장
- (2) 재야세력의 축소에 의한 진보운동의 제약

다. 환경적 제약요인의 총괄

4.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체적 제약요인

가. 민주노총의 구조적 제약조건

- (1) 기업별 노동조합체제의 한계
- (2) 지도역량의 양적·질적 한계
- (3) 기업 및 고용구조의 유연성 강화

나. 정치활동에 대한 간부들의 태도와 고민

- (1) 단위노조와 연맹간부수준에서의 설문조사
- (2) 민주노총 중앙 및 연맹간부와의 인터뷰

다. 소결 : 주체요인에 대한 총괄

5. 결론 및 전망과 과제

가. 제약요인 총괄

나. 주요 제약요인의 변화가능성

다. 정치활동 강화를 위한 모색

8. 연구 목적

이 논문은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추진이 어떤 이유로 정체상태에 놓여 있는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제약하는 환경적 요인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민주노총 중앙 및 연맹 임원, 단위노조의 간부들의 주체적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약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9. 연구내용

민주노총의 노동운동이 갖는 한계를 진보정당운동으로 전화시키려 할 때 그 주체의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제약조건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사업을 대상으로 서울지역에서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제약하는 민주노총의 구조적 조건, 주체들의 인식을 분석한다. 또 더불어 환경 요인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있다.

97년 대선 이후 2000년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이어진 총선의 과정에서 선거구제의 개정 실패라는 영향과 더불어 IMF 구제금융 이후 정리해고에 대한 투쟁과 지도부의 잦은 교체, 일부 지도력의 집권당 진출로 정치사업을 안정적으로 민주노총이 진행하지 못한 제약요건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 대선에서 국민승리21의 경험과 총파업 투쟁의 경험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축적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현재적 수준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조직 활동의 기반이 되는 당원 및 당비납부의 수준, 지구당체계의 구성, 지구당 활동의 내용의 측면에서 서울지역의 민주노동당의 수준과 여기에 결합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수준을 분석하면서, 재정난과 인력난의 어려움과 함께,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들도 지구당 연대활동의 틀인 지구협의회에 결합하는 수준으로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한다.

진보정당의 제약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한다. 1) 국가의 억압적 노동정책에 의해 진보정당운동의 인적·물적 기반의 형성 저해, 2)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반공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 3)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관계법, 국가보안법, 노동운동의 제약하는 노동관계법 등 법제도, 4)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업별 노조체제, 그리고 내적 요인으로 노선분열과 정치주체의 정당화전략의 부재 등이다.

여기에 덧붙여 서울지역에서 도시공간의 제약을 제기하는데, 직장과 거주지의 분리, 소선거구제 하에서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에게는 사실상 정당활동이 어렵게 된다. 즉, 거주지에서 민노당의 후보로 출마한다고 할 때 직장에서 지도력을 구축한 노동자 출신 후보자들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자원을 거의 동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평상시 거주지에서 조직활동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선거구제도가 유지되는 한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이 지역구에서 도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편과 함께 전면적 비례대표제의 실시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정치세력화에 주도적 역할을 한 민주노총의 중앙 및 연맹 임원들, 단위사업장의 간부 및 대의원들이 정치세력화의 주체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한다. 민주노총은 대부분 기업별 노조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별 노조체제에서는 고용안정, 임금인상 등 노동조합 본래의 임무뿐만 아니라 교육수당, 주택구입 자금 등 국가나 사회적 차원의 문제까지 회사 측에 요구한다. 이러한 기업별 노조체제는 계급의식의 성장을 어렵게 하고, 지도력을 사업장에 묶어 놓아 상급단체로의 진출을 어렵게 하며, 정치사업에 위한 재정동원도 쉽지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세력화 사업이 담보상태에 있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단위사업장의 간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치사업에 결합하겠다는 의지는 보이면서도 그 구심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 없는 조건으로 인해 정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동하기 어렵고, 가시적 전망이 부재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도 쉽지 않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민주노총의 지도부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조합원의 의식의 한계가 지도부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조합원의 낮은 정치의식과 정치세력으로 형성되지 않은 지도력의 문제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어렵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결론짓는다.

10. 연구의의

이 논문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문제를 매우 미시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 인터뷰 등의 작업을 통하여 노동자 스스로가 진단하고 있는 정치세력화의 제약요인을 점검하고, 민주노동당을 뒷받침하고 있는 민주노총에서의 정치세력화 사업이 어려운 점을 현재의 기업별 노조체제 등에서 찾음으로서 노동자가 정치적 활동에 나설 수 없는 조건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1. 제목 : 16대 총선에서의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자료집』

2. 저자 : 이갑윤 · 이현우

3. 발행년도 : 1990

4. 쪽수 : 21쪽

5. 형식 : 일반논문

6.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7. 목차

1. 서론
2. 시민단체의 활동
 - 1) 선거와 시민단체의 참여
 - 2) 총선연대의 낙천운동과 조직
 - 3) 낙선운동과 선거법개정운동
3.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반응
 - 1) 정당
 - 2) 국가기관과 언론
 - 3) 국민들의 반응
4. 낙천낙선운동과 선거결과
5. 결론

8. 연구목적

이 글은 지난 16대 총선에서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의 내용과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 그리고 총선에서의 영향력 등을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다.

9. 연구내용

이 글은 우선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정치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미쳤다고 보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김대중 대통령이 낙천부적격자 명단발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둘째, 경실련과는 달리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전국규모의 연합체였다.

이때 총선연대의 선거운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2-3일 간격으로 이벤트를 벌여 직접 유권자 대면을 통한 선거운동과 동시에 언론에 기사거리를 제공하여 국민의 관심을 증대시키려 노력했다. 둘째, 기존의 시민운동이 엘리트에 의한 시민운동으로서 시민 없는 시민운동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의 경우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시민운동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각종단체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었다는 것과 서울중심의 행사가 아니라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고 각 지역의 대표들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켜 모든 행사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질 수 있도록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하지만 이 글은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은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투표행태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선거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총선연대에 대한 지지와 투표행태 사이의 괴리를 의미하는데,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들고 있다. 하나는 정치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결과이다. 즉 유권자들이 정치 불신으로 인하여 낙천낙선운동을 지지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자신의 지역구에 해당후보자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정도의 열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정당중심적 투표성향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주요 정당들의 노선이 상당히 수렴됨에 따라 후보자의 개인적 역량이 득표에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지역주의의 고착화로 인한 정당지도자의 일인지배현상은 더욱 강화되어 지도자 이외 국회의원 개인의 자율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처럼 정당요인이 중시됨으로써 낙선운동과 같은 후보자 평가는 투표결정에 있어 영향력이 작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대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은 한국정치에 두 가지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한국정치과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역할과 위상이 낙천낙선운동으로 제도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낙천낙선운동을 계기로 국회의원후보자를 포함한 정치인의 개인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부정하거나 무능한 정치인의 교체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은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시민단체는 첫째, 부적격한 후보자와 적절한 후보자를 국민의 입장에서 차별화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기존정당과 독립된 또는 기존정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10. 연구의의

이 글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16대 총선 시기 커다란 정치사회적 반향을 가져왔던 시민운동의 정치참여운동으로서의 낙천낙선운동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그간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연구가 주로 '운동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이 글은 보다 객관적인 가치중립적 차원에서의 학술적 연구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 정당, 국가기관과 언론, 국민 등 각계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 글의 장점이다.

다만 낙천낙선운동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 시민운동과 대안정당운동과의 관계 등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1. 제목 : 6.13 지자체 선거와 시민운동의 정치참여, 그 변화와 한계,
『정치비평』

2. 저자 : 이광일

3. 발행년도 : 2002

4. 쪽수 : 18쪽

5. 형식 : 일반논문

6. 발행처 : 한국정치연구회

7.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정치참여 논리의 변화와 의미
3. '국가'와 '시민사회'의 경계에 서있는 '시민정치'
4. 6.13 지자체 선거와 시민운동: '조합주의의 징후'와 연대
5. 대선과 시민운동의 진로

8. 연구목적

이 논문은 2002년 지자체 선거를 전후해 나타난 시민운동진영의 변화된 정치참여논리와 배경, 그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이 논문에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로의 진전을 위해 시민운동이 고민해야 할 과제 또한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9. 연구내용

이 논문은 이번 2002년 지자체 선거에서 시민운동이 지난 2000년 총선연대 활동 시기와 비교해 볼 때, 활동반경이 확대되었음에 주목한다. 2002년 지자체 선거에서 시민운동은 '시민후보'를 내는 것(환경운동연합의 녹색자치연대, 여성민우회)으로부터 시작하여 정당건설(녹색평화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때 그 주요논리로써 중앙의 권력지향 부패정치, 그 연장에서 부패, 타락해 가는 지방정치를 지양하고

진정한 주민의 참여와 자치의 실현, 지역공동체의 형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에 대해 그러한 논리들은 정치에 대한 시민운동의 생각이 실질적인 전환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즉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을 경과하면서 시민운동 내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낙천낙선운동의 '불법성', '정치성' 여부의 문제가 이번 6.13지자체 선거를 거치며 정치세력화라는 쟁점으로 대체되는 커다란 변화를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첫째, 그 의도 여부를 떠나 생활정치, 삶의 정치 등을 매개로 대중에 각인 되어 있는 협소한 정치개념을 확장시키는 계몽적 효과를 제고시키면서 지역주민,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기존의 무관심을 완화시키는 기여했다. 둘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우선적으로 사고하는 활동은 기존 보수정당이 보인 보스중심의 비민주적 운영 방식 및 활동과 비교되면서 그 개선을 자극했다. 셋째, 지난 시기 중앙집중적인 성장주의에 눌려 잠복되었던 환경, 소수자 문제 등 미시적 수준의 새로운 이슈들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 논문은 시민운동이 정치참여에 대한 보수세력들의 공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그러한 소극성은 운동의 중장기적 전망과 관련해 볼 때, 이론과 실제 사이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시민운동이 진보적 방향을 재구성되는 것을 제약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논문은 2002년 지자체 선거에서 녹색평화당과 환경운동연합의 녹색자치위원회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구체적 예로 들면서, 시민운동들 간의 연대가 부재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논문은 그러한 연대의 부재 및 구축의 실패는 민중운동이나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활동을 조합주의적이라고 비판해왔던 시민운동이 반대로 그러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10. 연구의의

이 논문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2002년 지자체 선거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시민운동의 정치참여 양상 및 논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시민운동의 정치참여를 둘러싼 논쟁 지형이 자유주의적 정치관에 기반한 '소모적인 것'으로써 이것의 극복을 정치개념의 확장 및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모색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시민운동 정치참여의 규범을 공공성, 도덕성, 진보성, 민주성, 연대성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는 점 또한 이후 연구에 있어서 참조할만한 것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자신이 주목하고 있는 시민운동의 정치참여 양상과 논리의 변화 요인을 단지 2000년 총선연대의 활동에 대한 시민운동 자신의 반성이라는 ‘주관적’ 측면에서만 찾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이 논문은 시민운동의 정치참여 활성화의 자기근거로 삼고 있는 정치개념의 확장 및 재구성이 어떠한 물적 기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1. 제목 : 16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시민운동단체의 정치개입- 투표율 · 지역감정 · 세대교체와 총선연대 낙선운동의 상관성, 『동향과 전망』

2. 저자 : 정대화

3. 발행년도 : 2000년 여름

4. 쪽수 : 36쪽

5. 형식 : 일반논문

6. 발행처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7. 목차

1. 문제제기

2. 선거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3. 낮은 투표율, 지역주의 세대교체에 대한 평가

1) 낮은 투표율에 대한 평가

2) 지역주의 강화론 - 약화론에 대한 평가

3) 세대교체에 대한 평가

4. 시민운동단체의 선거참여 평가

5. 전망과 과제

8. 연구목적

이 글의 연구목적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낙천낙선 운동으로 상징되는 시민운동의

개입과 투표율, 지역주의, 그리고 세대교체가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9. 연구내용

우선 이 글은 16대 총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낮은 투표율이 낙천낙선운동과 같은 네거티브 캠페인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 우선 이 글은 총선연대의 낙선운동과 투표율을 연관시키는 평가는 선거 국면의 본질을 간과한 피상적인 평가로써, 투표율에 작용하는 정치구조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즉 이 글은 낮은 투표율은 첫째, 군사독재 퇴진과 같은 정치적 대주제의 소멸, 집단적 선거동원요인 및 메커니즘의 실종, 정치개혁의 지체 등에 기인한 정치 불신의 고조, 선거출마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안적 정치세력의 부재 등 복합적인 요소들의 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동기 부여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투표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낙선운동은 유권자의 참여폭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16대 총선이 구조화된 지역주의나 유권자들의 일반화된 지역감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에 반대하는 탈지역주의 흐름이 전국적 차원에서 강하게 일어나게 된 것에는 총선연대가 펼친 지역감정추방운동이 정치권과 중앙선관위와 방송사들에 의해 수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이와 함께 이 글은 민주노동당과 청년진보당의 존재도 탈지역주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민련이나 민국당에 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상대적으로 지역감정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 번째로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다선중진의원 다수의 낙선과 자민련을 몰락시킴으로써 국회의원 정수 41%에 해당하는 112명의 정치신인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은 세대교체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만은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는데, 즉 386세대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세대교체의 개혁성을 선형적으로 단언할 수 없으며, 정치구조적인 차원과 정당 간 경쟁의 차원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글은 총선연대의 이러한 낙선운동과 투표율, 지역주의, 그리고 세대교체 등이 일정한 상관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총선연대 자체의 선거참여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선 이 글은 낙선운동을 한국 선거사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꾼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낙선운동이 낡은 정치와 새로운 정치 사이에 존재하는 가상정치공간에서 정치개혁을 추구하는 시민운동단체들이 중요한 정치행위자로 등장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이 글은 낙천, 낙선을 외에도 지역감정의 차단, 정치 및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의식변화, 선거참여율, 독점적 부패정치카르텔의 해체, 정치개혁의 출발점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낙천낙선운동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그러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낙천낙선운동이 애초부터 대안적 정치세력에 대한 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출발하였다 둘째, 국민적 대중운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등 민중진영과의 연대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총선연대가 지역감정추방운동을 전개하면서 지역감정의 분출을 차단하는 효과를 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감정의 벽을 넘지 못한 점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공천반대자와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적용했던 기준의 한계를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패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 옥석을 구분하는 데 상당한 난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은 총선연대의 이러한 한계는 일부는 구조적인 한계이며 일부는 판단차원의 한계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시민운동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

10. 연구의의

이 글의 의의는 시민사회가 선거정치에 적극적 개입을 이루어내었던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한국정치 체문제의 해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표피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보다 구조적인 시각에서 한국정치의 문제를 이해하는 가운데, 시민운동단체의 정치개입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운동단체의 정치개입이 갖는 성과와 한계가 상호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적 정치의 진형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여러 과제들의 나열로 그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 할 것이다.

나. 결과 및 평가

1. 제목 : 사회운동단체의 선거참여 결과와 함의 - 91년 선거와 비교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2. 저자 : 조현연

3. 발행년도 : 1995년 가을

4. 쪽수 : 16쪽

5. 형식 : 일반논문

6. 발행처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7. 목차

1. 들어가는 글: 전체적 논의
2. 집권세력의 의도와 그 관철 여부
3. 사회운동의 시각과 대응
4. 성과와 문제점
5. 맺는 글: 절망의 정치에서 희망의 정치로

8. 연구목적

이 글은 사회운동차원에서의 95년 지자체 선거의 의미를 91년 선거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9. 연구내용

이 글은 95년 지자체 선거와 91년 선거를 비교해 볼 때, 집권세력의 의도와 그 관철 여부, 그리고 지자체 선거를 바라보는 사회운동의 시각과 대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갖는다고 말한다.

우선 집권세력의 의도와 그 관철 여부에 있어서 이 글은 95년 선거가 91년 선거와 달리 선거실시와 실시 시점에 대한 집권세력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파악한다. 이 글에 따르면 91년 양대 선거(기초의회 및 광역의회 선거)의 분리실시는 정국의 불안정과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최선의 타개책으로 집권세력에 의해 선택된 것이었다. 하지만 95년 선거는 집권세력의 선거 실시 연기 의도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의 비판과 반대에 부딪혀 예정대로 실시되었다.

또 이 글은 91년과 95년 두 선거 간 결과의 차이에도 주목하고 있다. 91년 양대 선거 결과 집권세력은 정국의 불안정 및 정권의 위기상황을 한시적이거나 극복할 수 있었던 데 반해, 95년의 선거결과는 집권여당인 민자당의 참패와 내부혼란, 퇴출세력이었던 김종필의 재기성공, 김대중의 '때 이른' 정계복귀, 대대적인 정계개편의 추동 등 원하지 않은 현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집권세력은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이 글은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된 것은 어떤 외부요인의 작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혁의 추진-실종-붕괴의 혼란스러운 과정이 민심의 동요와 이반을 가져왔고, 이로부터 집권세력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지자체 선거를 바라보는 사회운동의 시각과 대응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한다. 즉 91년 선거의 경우는 선거대응을 둘러싸고 사회운동진영이 선거 거부-적극적 참여-제한적 참여 등으로 견해 차이를 나타냈던 데 반해, 95년 선거의 경우는 적극적인 선거참여가 주된 흐름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글은 95년 6.27 지자체 선거가 91년 양대 지방 선거와 비교해볼 때, 정치참여운동의 관점에서 하나의 역사적 가능성과 함께 현실적 한계 및 문제점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성과와 관련하여서는 단지 당락만을 중심으로 한 평가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91년 지방선거에 비해 사회운동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당선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출마자 수는 91년에 비해 95년 선거의 경우, 240여 명에서 500여 명으로 증가했고, 당선자 수도 50여 명에서 260여 명으로 증가했다. 또 이 글은 특정지역과 부문에서 지역생활 속에 뿌리내린 꾸준한 지역활동과 인물의 참신성, 그리고 선거운동방식 등 주체적인 노력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것도 성과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와 비교해 볼 때, 출마자나 당선자 모두 아주 소수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15,400여명의 전체출마자 가운데 사회운동출신 출마자는 500여 명이었으며, 전체 당선자 5,768명 가운데 사회운동진영 출신 당선자는 260여 명으로 전체에서 점하는 비율이 5%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또 선거형태별로도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당선된 반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후보조차 낼 수 없었다는 점도 운동의 수준과 선거준비역량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아울러 이 글은 사회운동진영이 하나의 통일된 정치세력으로써가 아니라, 소속단체별 혹은 개인별로 선거참여를 했다는 점에서도 문제였다고 말한다.

10. 연구의의

이 글은 정치참여운동 연구에서는 보기 드문, 비교(선거)연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은 비교연구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들에 대한 고민이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91년 선거와 95년 선거 간에 보인 차이점들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1. 제목 :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시민사회에 대한 기대- 환경운동의 정치세력화 가능성 -, 『2001 한국 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2. 저자 : 차명제

3. 발행년도 : 2001

4. 쪽수 : 13쪽

5. 형식 : 일반논문

6.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7. 목차

1. 한국의 정치현실
2. 한국 정치의 위기 원인
 - 가. 민주주의의 전통 부재
 - 나. 세계화의 영향
3. 한국 시민운동의 잠재력
4. 한국 시민운동의 과제
5. 왜 시민사회인가?
6. 왜 녹색당인가?
7. 맺는 말

8. 연구목적

이 글의 목적은 거시적으로는 87년 민주화 이후 지체되고 있는 민주화와 국민의 정부 수립이후 계속되는 실정,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시민사회의 과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9. 연구내용

이 글에서는 현재의 한국을 위기상황으로 진단하면서, 이러한 위기의 원인을 민주주의의 전통 부재를 내적 요인으로, 외적 요인으로는 세계화(globalization)를 꼽고 있다.

먼저 민주주의를 일상생활에서의 민주주의로 구체화시켜 보면 역시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이해관계들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현실에서 이를 합리적 형태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일정 정도의 양보를 이끌어 내면서 상호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질서를 확고히 하는 제도와 구성원들의 가치관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 속에 과연 이런 민주주의의 실현시킬 기회가 있었느냐는 것이며, 동시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회의적이다. 즉, 특정 집단에 의한 권력의 남용과 독점, 각 사회집단 사이의 갈등 극대화를 통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켜왔던 우리의 문화와 전통 때문에 지난 80년대 말 이후 현재까지 그 짧은 시기 동안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개인보다 공동체가 중시되는 전통, 그리고 왕이나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 등을 정점으로 조직된 하향식의 사회구조가 그 원인으로,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과 사회집단의 분화, 그리고 전통적 가족관계의 해체 등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적절한 사회구조와 정치체제의 부재에서 온 모순과 부조리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이런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체제를 재구성하거나 창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체제는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으로, 세계화의 영향으로 구조조정에 따라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어 빈곤층이 확대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틈이 더 벌어지게 되었다. 즉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첨예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이들 초국적 기업과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대폭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질서와 모순 되는 각종 규제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공공부분의 투자 등은 수행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고유 기능인 조절자의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가중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1세기의 글로벌 가버넌스(global governance)라는 다자간의 수평적 협동 정치

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적응력 내지 대응력을 갖춰야할 과제도 동시에 고려해야함을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외형적 급팽창을 해 오면서 내실을 충실히 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성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 참여를 통한 시민운동의 발전보다는 소수 시민운동가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이끌려 온 측면도 있다. 이는 한국 시민운동의 특징인 시민 없는 시민운동, 스타운동가들에 의한 시민운동이라는 평가를 듣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둘째, 그 결과 시민운동은 자생력을 갖지 못하는 내적 취약성을 갖게 되었다. 몇몇 소수 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NGOs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었다.

셋째, 회원들의 참여구조가 취약한 한국의 NGOs는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대개 상근활동가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반 회원들의 참여구조가 취약해 지고, 상근자 중심의 사업 수행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운영비를 필요로 하게 만든다.

넷째, 시민운동의 특징인 다양성이 한국 시민운동에는 결여되어 있다.

다섯째, 80년대까지 한국 사회운동의 중심이었던 학생운동과 재야 내지 민주화운동이 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활성화에 반비례하여 급격히 위축되었다가 2000년 이후 시민운동에 편입되면서 시민운동의 지형이 매우 복잡해지게 되었다. 또한 각종 사회운동과 관련단체, 그리고 이익단체들도 시민운동을 표방하면서 이제 한국의 시민운동은 불과 몇 년 만에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시민운동의 정치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 졌고, 동시에 기존 정당의 영역이 시민운동에 의해 빠른 속도로 잠식되면서 정당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섯째, 과거의 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정부와 시민운동 사이의 관계 설정이 매우 복잡해졌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시민운동은 당시 야당과 사안에 따라 협력자 관계를 유지했으나 이제 야당이 집권당이 된 이상 그러한 관계는 재정립되었어야 했으나, 제2건국을 비롯하여, 현재 언론개혁에 이르기까지 시민운동을 개혁을 위한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려는 정부 여당의 자세가 결과적으로 시민운동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곱째, 국가와 시민사회의 영역이 과거에 비해 그리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특

히 국가영역에서 시민사회의 과제와 이슈들을 제도화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미래지향적인 시민운동 영역의 재발견과 재설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시민운동 내부에 혼재 되어 있는 시민운동과 국민운동, 연대활동과 개별 사업, 전문화와 백화점식 사업 방식, 자원활동가 중심과 상근 활동가 중심, 로비활동과 저항운동, 민중적 시각과 시민적 시각, 친북과 반북(반공이데올로기가 아닌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치세력화와 이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관점, 극좌와 극우, 보수와 진보 등의 이념과 가치관 등의 혼란 상황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색깔에 어울리는 운동방식과 방향을 찾는 작업이 앞으로 시민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와 함께 한국의 위기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로써 시민사회 내부의 발전과 함께 정치세력화를 제기하고 있다. 즉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분업을 통하여 정치적 이슈는 시민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갖는 시민사회의 정당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시민운동은 왜곡된 형태로 성장한 지금까지의 시민운동을 재정립하고 재구성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참여는 불가피한 선택인데, 특히 정치에 뜻은 있으나 여러 이유로 선뜻 정치로 나서지 못하는 일부 정치지향 시민운동가들이 공연히 시민사회에서 정치이슈를 제기하여 시민운동을 왜곡시키는 것보다 정치사회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훨씬 떼떽하고 시민사회와 정치 발전을 위해 요긴한 태도일 것이다. 또한 이들의 정치세력화는 한국의 정치발전에 커다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당은 기존 정당에 비해 보다 선명한 이념성을 띠게 될 것이고, 사회문제에 대한 보다 본질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세력화는 개별단체나 개인이 아닌 시민운동 차원에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실현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모색한다면 이는 시민사회의 지지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의 이상적인 형태로 “녹색당”을 제시한다.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녹색당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정당으로, 서구의 경우 시민운동이 그 기반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고민하는 시민사회의 정치참여를 위해 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훌륭한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녹색당은 극히 이상적인 민주적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다. 기초와 당 지도부, 당 내부의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등은 우리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녹색당이 추구하는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와 지속가능 발전, 상호인정과 공존 등은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동일하며, 미래 우리 시민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녹색당은 이미 제시하고 있다.

넷째, 특히 녹색당은 세계화의 부작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국제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계화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들과의 공조 체제 확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녹색당은 세계적 network을 가진 유일한 정당이다. 글로벌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 차원의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기본이며, 녹색당은 이 기본에 충실하고 있었다.

여섯째, 한국의 시민사회가 정치세력화 한다면 이런 국제연대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그 어떤 정당보다도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특히 아시아에서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아시아가 그들만의 통화기금과 경제협력체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미국과 EU에 대응해 경쟁할 수 없다고 (충)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제는 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와 정치집단간의 교류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녹색당, 특히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과 교류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의 과제를 각국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아시아의 통합은 그리 먼 훗날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여덟째, 녹색당은 한국의 시민들에게 다른 당에 비해 아직 참신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그리고 아마 녹색당의 인지도도 다른 당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친숙성과 높은 인지도는 정당으로의 성립에 매우 유용한 플러스 요인이 된다.

아홉째, 녹색당이 단일 이슈 정당이라는 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성과 인권, 평화와 민주주의 등도 환경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녹색당은 단일 이슈 정당이 아니며, 오히려 이 모든 이슈 등을 다루면서 보다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그리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과 우려는 한낱 기우에 불과할 뿐이다.

열째,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에 대한 고민을 녹색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21세기의 발전전략은 환경과 여타 부분과의 조화를 통해 수립될 것이며, 녹색당의 이런 입장과 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셈이다. 만약 녹색당과 같은 정당이 의회에서 활동한다면 정부의 새만금 개발을 비롯한 각종 반 환경적인 정책들

이 그대로 여과 없이 관철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회에서 녹색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시민사회가 부분적으로 정치세력화 하여 녹색당으로 출범한다면, 이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10. 연구의의

이 글은 한국의 시민사회의 분화 속에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갖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치세력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의 정치세력화 논의가 민주화, 계급정치의 수준에서 제기된 반면,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정치세력화를 제기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다.

1. 제목 : 4·13 총선과 시민운동: 총선시민연대의 활동과 시민운동의 정치적 과제, 『노동운동·시민운동·진보정당 발전전략을 위한 공동워크숍 자료』

2. 저자 : 김호기

3. 발행년도 : 2000

4. 쪽수 : 10쪽

5. 형식 : 저널(자료집)

6. 발행처 : 민주노동당·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7. 목차

1. 총선연대의 성과와 한계
2. 낙선운동을 둘러싼 논쟁
3. 한국의 시민사회와 낙선운동
4. 시민운동의 정치적 과제

8. 연구목적

이 글은 총선연대의 평가와 이 운동이 한국 시민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함의를 주고 있는가, 그리고 시민운동의 정치적 과제는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9. 연구내용

총선연대는 여성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민연련 등을 포함, 전국 412개 단체가 연합해 출범하여 해체할 때까지 100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한 한시적인 운동조직이다. 그 참여 단체 수와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서 볼 때 총선연대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가장 대규모의 운동조직이었다. 다만 1987년 국민운동본부의 경험과 차이가 있다면 이번 총선연대의 참여단체는 주로 환경, 여성, 평화, 인권, 사회복지 등 시민운동단체와 지역운동단체가 주축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총선연대의 성공은 역사적으로 87년 이후 민주화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낙후성은 시민단체가 이른바 ‘준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였고, 이와 함께 환경, 교육, 여성, 지방자치, 의료, 교통, 인권 등 새로운 이슈들을 담당하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대거 결성되었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러한 새로운 다층적인 구도 형성은 민주주의 이슈를 시민사회 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한국 정치사회의 특수성과 시민사회의 구조변화는 총선연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역사적·사회적 조건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연대의 활동에 대하여 수도권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반면에 영남지역에서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고 보고 있다. 영남지역의 경우 총선연대의 활동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당선가능성에 근접해 있던 부산의 노무현 후보 지역과 몇몇 경합지역에서는 총선연대의 활동이 지역감정을 강화시켰다고 지적한다.

총선연대의 성과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총선연대의 활동이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일깨우고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점을 꼽고 있다. 밀실정치, 담합정치, 부패정치 등 정치사회의 파행은 우리사회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병목 지점이며, 따라서 정치개혁은 우리사회 최우선의 과제 중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정치개혁과 연관시켜 볼 때, 낙선운동은 구정치인의 정계은퇴, 출마포기, 공천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지역감정을 부분적으로 제어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 뿐만 아니라, 낙선운동은 선거법 87조의 부분적 개정, 선거구 감축, 국회법 개정, 그리고 선관위의 후보자 신상공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총선연대 활동은 시민운동의 조직과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존 시민운동이 주로 중앙조직에 의해 선도되고 정작 지방조직의 활동은 미미했던 것에

반해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이 상호 자율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하나의 모범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선연대의 활동은 한국 시민운동의 약점이라 흔히 지적돼 왔던 '시민 없는 시민운동'에 대하여 '시민 있는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총선연대가 주최한 대중 집회의 참여율은 비교적 저조했지만, 상당 규모의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 총선연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커다란 관심은 총선연대 활동이 기존의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한계를 상당 부분 탈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총선연대 운동과 이에 대한 20·30대 세대의 폭발적인 관심은 시민운동의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총선연대의 한계에 대해서는 먼저 낙선운동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반대운동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보수정당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대안세력에 대한 지지로 전환되기 어려운 시민사회의 현재적 조건을 고려할 때 이런 네거티브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특정 후보의 낙선이 주요 쟁점화 됨으로써 총선에서 정작 이뤄져야 할 정책대결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리고 총선연대의 운동이 낙천과 낙선에 주력함으로써 선거법 개정 등 제도개혁의 이슈가 다소 희석된 것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표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적 정당구도를 타파하고 진보정당이 원내진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아쉬움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낙천·낙선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자료 조사와 유권자 100인 위원회의 심사 등 리스트 선정에서 상당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당시부터 선정 기준의 타당성과 선정 방식의 개방성에 대한 시비가 없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총선연대가 선택한 낙천·낙선의 주요 기준(부패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헌정파괴, 반인권 전력)과 보조 기준(지역감정 선동행위, 의정활동 성실성,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기타 선관위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 기초 사향의 진위)가 상당한 설득력과 객관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선정 과정이 보다 개방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했음을 지적한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대안적 정치세력화를 지지하는 대신 기존 정치사회 내 특정 세력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전략을 선택한 이유를 논의하고 있다.

첫째, 한국 시민사회의 현 단계에서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의 시민운동은 꾸준히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추진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이 아직 취약하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단체의 현실인식이다.

둘째, 시민단체의 다양성을 들고 있다. 시민운동의 단체들 가운데 특히 '삶의 정치'를 모색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정치적 세력화란 일차적인 과제라기보다는 부차적인 과제인 경우가 적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생활정치를 모색하는 시민단체들에게는 정치사회의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화보다는 정치적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사회의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치개혁이 우선 과제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의 정당성의 자원이라 할 수 있는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간 시민단체들이 도덕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추구하는 '순수한' 사회운동을 전개해 왔던 데 있었으며, 정치사회에 대한 불신이 증대하면 할수록 이러한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왔다.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대한 이러한 높은 신뢰는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왔지만, 또한 이것은 시민단체의 정치적 세력화에 작지 않은 부담을 주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이 정치적 개입의 중요한 기반인 한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포지티브 방식보다는 특정 세력을 거부하는 네거티브 운동이 보다 효과적인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총선연대는 이번 4·13총선에서 정치개혁을 일차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낙선운동을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총선연대의 성공은 그것이 네거티브 운동이라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한다.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에서의 이중적 개혁을 통해 성취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낙선운동은 기본적으로 정치사회에 대한 영향의 정치에 머물러 있으며, 정치사회 내부를 개혁하거나 그 세력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10. 연구의의

이 글은 총선연대의 활동이 갖는 시민운동 차원의 함의와 그 정치사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 특히 총선연대가 낙천·낙선운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을 지적함으로써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IV. 참고문헌

IV.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정치참여운동의 유형을 참여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이 구분에 따른 목록을 수록하였다. 총 문헌 477건을 형태별로 구분하면 학위논문 110건, 단행본 72건, 일반논문 148건, 저널 147건이었다. 이를 문헌의 형태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범주 형태	단행본	학위논문	일반논문	저널	계
종합	61	57	103	66	287
기존정당 참여	2	2		20	24
독자정당활동	3	24	24	35	86
개별참여				13	13
기타	6	27	21	13	67
계	72	110	148	147	477

이를 다시 연구의 범주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위논문(110건)

내용 참여방식	총괄	참여동기 / 논쟁	활동사항	결과 및 평가	계
종합	52	1	1	3	57
기존정당 참여	2				2
독자정당활동	20	1		3	24
개별참여					
기타	26		1		27
계	100	2	2	6	110

2) 단행본(72건)

내용 참여방식	총괄	참여동기 / 논쟁	활동사항	결과 및 평가	계
종합	40	3	12	6	61
기존정당 참여			2		2
독자정당활동	2		1		3
개별참여					
기타	6				6
계	48	3	15	6	72

3) 일반논문(148건)

내용 참여방식	총괄	참여동기 / 논쟁	활동사항	결과 및 평가	계
종합	77	2	1	23	103
기존정당 참여					
독자정당활동	10	5		9	24
개별참여					
기타	11			10	21
계	98	7		42	148

4) 저널(147건)

내용 참여방식	총괄	참여동기 / 논쟁	활동사항	결과 및 평가	계
종합	25	9	17	15	66
기존정당 참여	3	2	7	8	20
독자정당활동	7	11	11	6	35
개별참여	2	5	3	3	13
기타	6	3	1	3	13
계	43	30	39	35	147

참고문헌의 분류는 참여방식에 따라 기존정당참여와 독자정당활동, 개별참여로 크게 구분하고, 종합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루거나, 정치참여 일반과 한국민주화와 정당정치관련 주제들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기타는 여성·시민·민중(노동)운동진영의 정치참여와 정치활동을 다루는 문헌들이다. 여기는 주로 기존정당참여나 독자정당의 형태는 아니지만, 선거 시기 및 일반적인 여성·시민·민중(노동)운동 진영의 정치참여와 정치활동에 관한 문헌들이다. 이와 같이 정치참여 방식으로 5가지의 범주로 나눈 다음, 이들 범주의 하위분류로써, 총괄, 참여 동기/논쟁, 활동사항, 결과 및 평가를 두어 각각의 범주 하에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가를 구분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내용 참여방식	총괄	참여동기 / 논쟁	활동사항	결과 및 평가	계
종합	○40 ●52 ▲77 ▼25	○3 ●1 ▲2 ▼9	○12 ●1 ▲1 ▼17	○6●3 ▲23 ▼15	287
기존정당 참여	●2 ▼3	▲2	○2 ▼7	▼8	24
독자정당활동	○2 ●20 ▲10 ▼7	●1 ▲5 ▼11	○1 ▼11	●3 ▲9 ▼6	86
개별참여	▼2	▼5	▼3	▼3	13
기타	○6 ●26 ▲11 ▼6	▼3	●1 ▼1	▲10 ▼3	67
계	289	42	57	89	477

○ : 단행본 ● : 학위논문 ▲ : 일반논문 ▼ : 저널

참고문헌은 그 내용이 범주별 구분에서 중복되는 경우 2가지 이상의 분류에 모두 포함시켰다.

1. 종합(기존정당참여/ 독자정당활동 모두 포함, 한국 민주화/ 정당 정치관련)

가. 총괄

(1) 단행본

- 6월 민주항쟁 10주년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 편, 1997, 『6월 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사계절
- 강문구, 1994,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와 진로』, 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1993, 『한국 정치·사회의 새 흐름』, 나남
- 류근일, 1997, 『권위주의체제하의 민주화운동 연구 : 1960-70년대 제도외적 반대세력의 형성과정』, 나남
- 민족통일연구원, 1991, 『재야통일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1992, 『진보세력의 대두와 한국의 정당정치』, 서강대
- 성경룡, 1995, 『체제변동의 정치사학학』, 한울
- 세종연구소, 1995, 『한국정치의 민주화 : 권위주의정권의 해체와 자유민주주의의 모호한 이념적 위상』, 세종연구소
- 손호철, 1993, 『전환기의 한국정치』, 창작과 비평사
- 손호철, 1995,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새길
- 안병준 외, 1995, 『국가·시민사회·정치민주화』, 한울
- 안 식, 1993, 『현대화·혁신 그리고 연대』, 나라사랑
- 안희수, 1995, 『한국정당정치론』, 나남
- 예춘호, 1996, 『서울의 봄 그 많은 사연 : 예춘호 재야활동 회고록』, 언어문화
- 윤일웅, 1985, 『재야세력들』, 평범서당
- 이상식, 2001, 『역사의 증언』, 전남대학교 출판부
- 이수인·고성국·정관용 공저, 1990, 『한국정치의 구조와 진로』, 실천문학사
- 이신행, 1997,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 민음사
- 이은진·김석준 외, 1992, 『한국의 정치와 선거문화』, 사회문화연구소
- 임혁백, 1994, 『시장·국가·민주주의』, 나남

- 정경환, 2000, 『한국 현대정치사 연구 : 민주화과정과 정치개혁』, 신지서원
- 주대환, 1994, 『진보정치의 논리』, 현장문학
- 최장집 · 임현진, 1993, 『시민사회의 도전 : 한국 민주화와 국가 · 자본 · 노동』, 나남
-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 1987, 『기사연 리포트4: 군부독재 종식과 선거』, 민중사
-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1988, 『90년대 한국사회와 변혁운동 : 운동주체들의 정세인식과 투쟁전략』
-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1987, 『6월 민주화대투쟁』, 민중사
-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1988, 『기사연 리포트5: 대통령 선거투쟁』, 민중사
-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1983, 『1970년대 민주화 운동과 기독교』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편 · 김금수 외, 1999,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단과 모색』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6, 『노동운동과 정치 : 현장에서 미래를』
- 한국사 사전편찬회, 1990, 『한국근현대사 사전 : 1860-1990』, 가람기획
- 한국사회사학회, 1997, 『한국 현대사와 사회 변동』, 문학과지성사
- 한국사회연구소, 1989, 『대중정당-민족민주대중정당의 이론과 현실』, 백산서당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 김명섭 외, 1999, 『1970년대 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 배궁찬 외, 1999,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 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정치4 : 민주화와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
- 한국정치학회, 1991, 『새로운 세계질서의 도전과 한국정치』, 한국정치학회
- 한국정치학회, 1994, 『한국의 민주화 : 공고화』, 한국정치학회
- 한승헌 외, 1984, 『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 춘추사
- 홍득표, 1993, 『한국정치분석론 : 제5공화국의 위기와 변동』, 인하대학교 출판부

(2) 학위논문

- 강성우, 1994, 한국의 지역주의와 정당, 고려대학교, 석사
- 고성원, 2002, 지배구조의 성격변화와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 1987 · 1992 · 1997 대선과정 비교연구, 연세대, 석사
- 공덕수, 2000, 한국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 연구 : 시기별 실태와 유형비교를 중심으로

- 로, 동국대, 박사
- 곽경원, 1993, 80년대 6.29 민주화선언을 전후한 한국 국가자율성변화에 관한 연구 :
분단구조 사회세력과 국가기구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국민대, 석사
- 권정옥, 1998, 한국민주화의 두 유형 비교분석: 60년 4월과 87년 6월 비교, 고려대,
석사
- 김종우, 1988, 한국 정당의 파벌현상에 관한 연구 : 야당을 중심으로(1945-1979), 서
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 김혜진, 2001,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운동의 미시동원기제 : 총선시민연대와 민주노
동당의 사례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연세대, 석사
- 문용직, 1994, 한국의 정당정치 : 민주화 과정을 중심으로, 1985-1992, 서울대, 박사
- 문용직, 1987, 한국의 야당과 파벌(1963-1987), 서강대, 석사
- 박승규, 1987, 1952-1960 전라남도지방자치선거에 관한 연구-주민의 정치참여와 정
당 활동을 중심으로-, 전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 박영희, 1990, 정당파벌의 행태변화 연구 : 제3·4공화국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
- 박철호, 1993, 제5공화국 권위주의정치체제의 변화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
- 서진완, 1988,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와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석사
- 신동환, 1994, 한국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 분석:1985-1987.6.29까지의 경험적
연구, 서강대, 석사
- 신성규, 1993, 한국 민주화과정에서의 진보정치세력에 관한 연구 : 1987~1992년까
지의 진보세력을 중심으로, 충남대, 석사
- 신현국, 1994, 권위주의 체제와 한국정치발전에 관한 연구 : 권위주의 체제가 정치발
전에 미친 부정적인 시각을 중심으로,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 양성은, 1998, 신민당 파벌재편에 관한 연구, 1967-1979, 이화여대, 석사
- 유재일, 1997, 한국 정당체제의 형성과 변화 1951-61, 고려대, 박사
- 윤상철, 1997, 한국 권위주의체제의 정치변동 1983-1990 -지배블록, 제도야당 및 중
간계급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
- 이계환, 1999, 한국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정에 관한 연구(1987년-1997년),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
- 이계희, 1991, 권위주의정권하의 야당정치 연구 : 신민당(1967-1980)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

- 이규정, 2000, 한국의 민주화와 정당정치에 관한 연구, 강원대대학원, 석사
- 이기호, 1997, 한국의 민주화과정과 사회운동 네트워크: 1987-1996, 연세대, 박사
- 이대희, 1994,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의 3당합당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
- 이성일, 1990, 한국정당의 파벌에 관한 연구: 1957-1979, 경남대, 석사
- 이영제, 1999, 한국지배관계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발전에 관한 연구: 6월 항쟁 이후 국가의 포섭과 시민·사회세력의 대응, 동국대, 석사
- 이재현, 1999, 한국 민주화과정에서 민주자유당의 형성과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
- 이정만, 1990, 한국 야당의 정책기구와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통일민주당을 중심으로, 서울대행정대학원, 석사
- 이창택, 1989, 한국 야당의 사적 변천과 파벌(1945~1987),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 이철홍, 1991, 한국 야당의 변천과 역할에 관한 연구: 특히 제1야당을 중심으로, 연세대행정대학원, 석사
- 장경남, 1988, 한국 정당정치에 관한 연구: 제3공화국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
- 장광수, 1993, 한국 정통보수야당의 정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정치환경 엘리트 기원 및 정강·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박사
- 장성훈, 1998, 한국 정당통합의 배경과 과정에 관한 연구: 신민당(1967년)과 민주자유당(1990)을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
- 장우영, 1998, 한국 정당체제의 기원: 제1공화국 정당체제 제도화과정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
- 장인송, 1991, 한국 정당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정당의 제도화정착을 중심으로, 국방대학원, 석사
- 정기영, 1998, 한국의 민주화와 정당정치에 관한 연구: 야당의 구조적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
- 정대화, 1995, 한국의 정치변동, 1987-1992: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
- 정소진, 2000, 한국의 정치변동과 노동계급: 1987년 이후 국가·자본·노동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
- 정연정, 1993, 현대 한국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

- 정주수, 1990, 해방직후 좌익세력의 변혁노선에 대한 연구 : 1945-1946, 한국외국어대, 석사
- 조대엽, 1995, 한국의 사회운동과 조직유형의 변화에 관한 연구:1987-94, 고려대, 박사
- 조상준, 1978, 4.19까지 한국정당 발전에 관한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
- 조효래, 1995, 민주화와 노동정치 : 한국 브라질 스페인 비교연구, 서울대, 박사
- 주남수, 1989, 한국 정치문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민주화 과정과 관련해서,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
- 최광열, 1985, 노동운동의 정치경제학적 기초에 대한 일 소고, 서울대, 석사
- 최광영, 1987, 한국 정당의 당내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 민정당과 신민당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
- 최한수, 1984, 민주당의 성립과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정치적 배경과 인물을 중심으로, 건국대, 박사
- 최현명, 2001, 1970년대 재야 민주화운동 연구, 이화여대, 석사
- 최홍섭, 1988, 한국의 정당체계에 관한 연구: 제4공화국을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 하태호, 1996, 한국 민주화과정에 있어서 정당체계의 형성과정 및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
- 한의석, 1999, 민주화와 한국정당유형의 변화에 관한 연구: 카르텔정당의 등장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
- 호광석, 1987, 한국에서의 정치참여의 행태에 관한 연구-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

(3) 일반논문

- 강정인, 1989, 한국에 있어서 민주화와 정치참여 : 직접행동의 정치참여성 폭력성 및 합리성에 관한 고찰, 경남대, 『한국과 국제정치』 9집
- 강태훈·최진욱, 1993, 한국 정당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연구의 대상과 방법』, 한울
- 강현수, 1997, 87에서 97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역사적 대의, 『고대문화』 45·46

- 경남대학교, 1992, 92·3년을 민족민주세력들은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경남대 『경대문화』 26
- 고성국, 1989, 민중민주 대중정당의 이론과 현실, 한국사회연구소 편, 『대중정당- 민족 민주대중정당의 이론과 현실』, 백산
- 고성국, 1989, 한국의 민족민주대중운동사, 한국사회연구소 편, 『대중정당- 민족민주 대중정당의 이론과 현실』, 백산
- 권태환·송호근, 2000, 신사회운동과 정치 : 정치세력화의 요인과 쟁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사회과학』 221
- 김광남, 2000, 한국 정당정치 환경의 변화와 정당 민주화의 과제, 『2000년』 210
- 김금수, 1997, 한국 노동자 정치세력화 전망과 모색, 『당대비평』 2('97.12)
- 김동춘, 1990, 선거와 의회정치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경제와 사회』, 여름
- 김동춘, 2000, 한국사회운동의 현주소, 『황해문화』(통권29호), 겨울
- 김상곤, 2001, 권력재편기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 개혁과 연대의 과제, 『동향과 전망』 (통권50호), 가을
- 김석준, 1990, 비제도권 정치세력의 제13대 국회진출과 의회민주주의의 제도화, 이화여대, 『사회과학논집』10('90.12)
- 김영범·조희연, 1994,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진보정치세력화, 『한국사회의 변동 :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한울
- 김영수, 2001, 한국 노동자 정치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노동자 정치운동 연구의 대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제35집 제4호)
- 김용복, 2002, 한국민주주의와 야당정치,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 읽는 책
- 김용호, 1994, 민주화와 정당정치, 안청시·진덕규 편, 『전환기의 한국 민주주의 - 1987~1992-』, 법문사
- 김호기, 1994,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와 민주주의로의 이행, 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의 변동』, 한울
- 문용직, 1992, 한국의 정당과 지역주의, 『한국과 국제정치』, 봄·여름
- 문장순, 1987, 정치참여와 제도화에 관한 고찰, 『경남대논문집』 2('87.10)
- 민준기, 1999, 한국의 정치문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25

- 박상병, 1997, 한국정당체제의 균열구조, 『동향과 전망』, 봄
- 박상훈, 1997, 민주적 공고화의 실패와 그 기원, 『동향과 전망』 통권 34호, 여름
- 박은홍, 1995, 민주화 연구 비평 서설, 『동향과 전망』, 여름
- 박중성, 1989, 현 시기 노동계급의 진출과 그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직적 과제: 노동 조합과 노동자당을 중심으로, 『연세』 29('89.9)
- 백종국, 1992, 민중연합 민주연합과 한국의 민주화 - 계급연합과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비평』, 7월
- 변종헌, 1998, 한국 정치체제의 민주화 과정과 엘리트 합의, 『제주교대 논문집』 27('98.7)
- 성경룡, 1992, 한국의 사회계급과 정당구조, 이은진·김석준 외, 『한국의 정치와 선거 문화』, 사회문화연구소
- 성경룡, 1993, 한국정치민주화의 사회적 기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국 정치·사회의 새 흐름』, 나남
- 손학규, 1993, 한국정치의 진보세력,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집, 1993
- 손호철, 1999, 한국민주화 실험 비교연구: 1980년의 봄과 1987년 6월을 중심으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 8·9
- 신명순, 1992, 한국정당의 조직현대화 연구, 『연세행정논총』 17('92.4)
- 안승국, 2001, 한국의 민주화와 선거정치: 11대 총선에서 14대 대선까지의 정치적 동학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제19권 제1호
- 양길현, 1995, 한국의 1987년 민주화이행과 위로부터의 책략 -구조화된 가능성의 시각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봄·여름
- 유광진, 1980, 80년대 한국정치발전과 정치참여, 동국대 『행정논집』 910('80.12)
- 유재일, 1993, 한국 정치사회의 구조형성과 변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국 정치·사회의 새 흐름』, 나남
- 이갑윤, 1994, 민주화와 정치참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제16권 제1호)
- 이강로, 1999, 한국에서 진보적 노동운동의 성장과 민주주의 공고화의 진행: 1990-1999, 『한국정치학회보』(제33집 제3호), 가을
- 이계희, 1992, 민주화운동과 야당정치: 1980년대 한국의 사례, 충남대, 『사회과학연구 소논문집』 3('92.12)

- 이광일, 2002, 한국민주주의와 진보정치운동,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 읽는 책
- 이상식, 1986, 한국의 산업화와 정치참여의 제도화, 『부산교대논문집』 221('86.12)
- 이수연, 1985, 총선정국 재야신당의 야망, 『정경문화』 239('85.1)
- 이정희, 1999, 재야 정치집단의 민주화 운동 : 정치이데올로기 · 중심세력 · 정치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톨릭사회과학연구』, 11('99.11)
- 이정희, 1997, 재야 정치집단의 민주화 운동, 『한국정치학회-97년 연례학술대회-』
- 이종오, 1990, 사회변혁운동과 정치세력화: 변혁운동의 전환기로서의 90년, 『경제와 사회』, 여름
- 이종호, 2002,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진보평론』, 가을
- 이해영, 1999, 노동자 정치운동의 현 단계 : 장상환 교수에 대한 몇 가지 이의, 『동향과 전망』 43호
- 임현진, 2002,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는 가능한가?, 『비판사회학회토론회자료집』, 한국 산업사회학회
- 장기표, 1991, 정당체질 개선 방향과 현대적 정당의 요건, 『사상』, 겨울
- 장상환, 1989, 현 단계 민족민주운동과 변혁, 『경상대개척자』 26호
- 정관용, 1990, 3당 합당의 구조적 본질과 실천적 대안, 『동향과 전망』, 봄
- 정관용, 1991, 90년대 대중정당론, 『사회와 사상』(통권 26호), 가을
- 정기영, 1990, 한국정당정치의 특성과 야당의 역할, 『사상문예운동』, 가을
- 정대화, 1992, 대안 없는 선택 - 14대 총선거와 정국전망, 『동향과 전망』, 여름
- 정대화, 1996, 한국민주화의 특성, 『동향과 전망』
- 정범구, 1991,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정당구조와 관련하여, 『경제와 사회』, 가을
- 정영태, 1991, 계급정치의 등장과 한계: 노동조합과 정당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5집 제2호)
- 정영태, 2000, 진보정치운동의 현재와 미래, 『황해문화』(통권 29호), 겨울
- 정영태, 1997, 인천지역의 권력구조와 정치과정, 인하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소논문집』 15집
- 정영태, 1999, 인천시민의 생활여건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치참여양태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 정용대, 1990, 90년대 한국정치의 구조적 개편과 정당정치, 한국정치학회, 『산업사회와 한국정치의 과제』
- 정진민, 2000,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정치와 발전방향, 명지대, 『사회과학논총』 16집
- 정철희, 1995, 한국 민주화 운동의 사회적 기원 ; 미시동원맥락과 프레임의 형성, 『한국사회학』 293호
- 정해구, 2002, 한국민주주의와 재야운동,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 읽는 책
- 조대엽, 1995, 한국의 사회운동연구 : 동향과 과제, 『경제와 사회』 가을
- 조성렬, 1995, 노태우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0집 2호
- 조정현, 1992, 3당 통합의 원인 -3당 통합과정과 원인에 대한 정당체제론적 접근-, 『한국과 국제정치』, 봄 · 여름
- 조중빈, 1995, 한국 민주화와 선거제도, 『의정연구』 제 1권 1호
- 조현연, 1995, 재야운동과 정당정치의 상호연관성, 안희수 외 『한국정당정치론』, 나남
- 조희연, 1994,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이행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동향과 전망』, 겨울 봄
- 조희연, 1995, 현 단계 한국정치의 균열구조와 그 변화전망, 『동향과 전망』, 가을
- 조희연, 1993, 새로운 정치현실과 진보운동의 진로, 『경제와 사회』, 여름
- 주종환, 2000, 현 단계 한국사회의 성격과 사회운동의 과제- 총선연대를 계승 발전시킨 정의사회민족민주연합 을 건설해야 한다, 『동향과 전망』(통권 45호), 여름
- 최장집, 1993, 한국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문제-1987~1992, 『한국민주주의 이론』, 한길사
- 최장집, 1995, 변형주의' 와 한국의 민주주의, 『사회비평』 13집
- 최장집, 1991, 민중민주주의의 조건과 방향, 『사회비평』
- 최장집, 1991, 한국사회 민주변혁의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사회와 사상』(통권 26호) 가을
- Dennis Florig 저 김세걸 역, 2001, 한국의 민주화 : 성과와 향후 과제, 『평화논총』 제 5권 제2호 가을 · 겨울

(4) 저널

- 고성국, 1989, 민주화운동세력과 제도권의 역관계, 『사상과 정책』 25('89.12)
- 고성국, 1991, 민족민주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말』 58('91.4)
- 고성국, 1989, 정계개편론의 구조분석, 『월간중앙』, 9월
- 고성국, 1991, 통합야당과 민주진영은 어떻게 연대해야 하나, 『사회평론』, 11월
- 고정훈, 1988, 선진국가와 혁신정당, 『민족지성』, 2월
- 김근태, 1993, 운동권의 행방, 『철학과현실』 17('93.6)
- 김부겸, 1988, 재야 이렇게 재편된다, 『월간중앙』 153('88.10)
- 김영배, 1990, 제 2의 정계개편은 세대교체인가, 『월간중앙』, 7월
- 김영삼·남중구, 1985, 민주화만이 모두 살길이다 『대담』, 『신동아』 307('85.4)
- 박찬중, 1985, 개헌이 민주화의 지름길 꼭해야 한다, 『광장』 143('85.7)
- 박찬희, 1988, 태동하는 재야신당, 『조선』 94('88.1)
- 백화중, 1989, 당정개편 야당 구도 변화 등 정치권 물갈이 임박했다, 『주간 조선』, 12.31
- 서영석, 1989, 야권3당의 정치노선과 재야, 『민족지성』 40('89.6)
- 성유보, 1986, 민주화운동의 현황과 전망, 『교회와 세계』 52('86.7)
- 윤재걸, 1985, 재야 민주·민중 운동단체들, 『신동아』 311('85.8)
- 의정평론사 편, 1989, 청산과 민주화의 기로에 선 여·야; 4당의 표정, 『의정평론』 16('89.11)
- 임춘웅, 1980, 재야세력이란 누구인가, 『신동아』, 6월
- 정관용, 1991, 의회주의와 민주변혁운동, 『사회평론』, 11월
- 정대화, 1989, 문 목사의 방북과 보수연합의 대두, 『월간중앙』, 5월
- 정태윤, 1991, 진보진영의 대통합을 촉구한다, 『사회평론』, 11월
- 조남현, 1998,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추구할 듯 :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가능성, 『민족정론』 55('98.2)
- 조성관, 1989,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가 절실' ; 전노협결성준비위원장 단병호, 『월간 조선』, 12월
- 최경환, 1997, 진보진영의 97년 대선투쟁 전망, 『공안연구』 45('97.2)
- 한용원, 1986, 야당·재야에 바란다, 『민족지성』 4('86.6)

허재영, 1987, 민주화의 험로 : 재야 측의 문제의식, 『민족지성』 19('87.9)

나. 참여 동기/ 논쟁

(1) 단행본

이정로 외, 1990, 『민중당, 국민연합 그리고 민중통일전선』, 노동문학사

현대사회연구소, 1989, 『민주화과정에 있어서의 이념논쟁 : 정당의 이념적 성격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연구소

현대사회연구소, 1991,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 쟁점과 전망』, 현대사회연구소

(2) 학위논문

고성국, 1995, 한국의 민주화와 '사회변혁운동'에 관한 연구 : 1987년 이후의 운동의 변화와 전략전환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

(3) 일반논문

정진상, 1998, 현 시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산업노동연구』 42 ('98.12)

조현연, 1997,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와 15대 대통령 선거, 『정치비평』(통권 3호) 가을 겨울

(4) 저널

고성국 외, 1989, 「형식적 민주화」나 「실질적 민주화」나 『좌담』, 『신동아』 362 ('89.11)

고영진, 1990, 진통 겪는 재야의 노선투쟁, 『옵서버』 4('90.4)

김경환, 1999, 재야의 두 가지 선택 개혁대연합론과 반정부투쟁론, 『말』 152('99.2)

김재명, 1989, 재야신당 창당 막전막후; 장기표「창당론」·김근태「상조론」통해본다, 『월간

중앙』 11월

박영암, 1992, 대선 앞둔 재야의 난상논쟁, 『옵서버』 33('92.9)

이선민, 1990, 재야 3파의 노선투쟁, 『월간조선』 126('90.9)

이성희, 1997, 국민후보나 정책연합이나, 『길』, 8월

추지영, 1991, 5월투쟁 재야지도부 노선투쟁, 『옵서버』 18('91.6)

황병태, 1990, 민주-반민주 정당구조는 개편되어야, 『신동아』, 2월

다. 활동사항

(1) 단행본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1997, 『암흑속의 햇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4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1997, 『암흑속의 햇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3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1996, 『암흑속의 햇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1-2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2001, 『암흑속의 햇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8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2000, 『암흑속의 햇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7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1998, 『암흑속의 햇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6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1998, 『암흑속의 햇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5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류근일, 1997, 『권위주의체제하의 민주화운동 연구 : 1960-70년대 제도외적 반대

세력의 형성과정』, 나남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1997, 『민교협 10년사』, 관악사

윤재길, 1987, 『청와대 밀명』, 한겨레

장기표, 1991, 『민중시대의 정치와 운동』

장기표, 1991, 『창살의 노래 햇살의 노래』, 한길사

장기표, 1991,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한길사

(2) 학위논문

김진옥, 1994, 민주화추진협의회에 관한 연구 : 지역당구조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

유근일, 1994, 제도외적 반대세력의 형성과정과 반대활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 60-70년대 비통상적 정치참여 사례들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

(3) 일반논문

강형민, 1990, 1980년대 조직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경제와 사회』, 봄

(4) 저널

김상연, 2001, 동지애는 어디로...서글픈 '재야' : 70-80년대 함께 민주화투쟁 벌였던 정치인들-여·야 대립 전위대 되어 '으르렁', 『뉴스피플』 481, 8.16

김영희, 1989, 야 3당 비당권파와 통합운동, 『신동아』, 1월

김재명, 1991, '비폭력 저항' 전술 모색하는 재야; 이창복 전민련 상임의장 인터뷰, 『월간 중앙』 180('91.1)

김재홍, 1990, 거여에 맞서는 평민당의 모색, 『신동아』, 5월

김재홍, 1989, 5공 청산 4당의 마지막 전략, 『신동아』, 1월

박구재, 1995, 재야·시민운동 단체 지방선거 본격 참여선언 ; 선거 '들러리' 에서 '돌풍의 주역' 으로, 『뉴스메이커』 109('95.1.26)

박찬희, 1988, 재야 신당운동의 현장, 『조선』 95('88.2)

박창식, 1999, '노릇 제대로 해보자' : 여권신당 움직임에 재야 시민사회 화답...'짠맛' 을 지켜나갈 것인가, 『한겨레21』 270('99.8.12)

백기현, 1988, 통합으로 달리는 재야운동권, 『신동아』 351('88.12)

서중석, 1984, 70년대의 재야 변호사 그룹, 『신동아』 297('84.6)

- 선경식, 1989, 재야신당 출현은 박두했는가, 『신동아』 359('89.8)
- 신동호, 1995, '재야 3인방' 정치적 진로 결정, 『뉴스메이커』 110('95.2.9)
- 신승근, 1997, '새 세상' 향한 재야의 두 갈래 선택 : 국민승리21의 독자적 정치세력
화에 국민위원회는 야권단일후보 추진, 『한겨레21』 181('97.11.6)
- 심량섭, 1989, 표류하는「재야신당」, 『월간조선』 115('89.10)
- 이상우, 1990, 시동 걸린 정당간 이합집산, 『오피저버』, 1월
- 황수정, 1995, 민주당 재야출신 세 갈래로 흩어진다, 『뉴스피플』 182('95.8.10)
- 황수정, 1995, '정치개혁 시민연합' 신당 '시동', 『뉴스피플』 179('95.7.20)

라. 결과 및 평가

(1) 단행본

- 김삼웅, 1980, 『서울의 봄 민주선언』, 일월서각
- 새벽별 편집부, 1992, 『결산 14대 총선 민중후보전술』, 새벽별
- 학술단체협의회, 1993,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 제도, 개혁 및 사회운동』, 창작과
비평사
- 학술단체협의회, 1997,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 - II』, 당대
- 한국정치학회, 1997, 『한국 민주화 10년 : 평가와 전망』, 한국정치학회
- 홍영일, 1993, 『민족민주운동의 대선 방침 평가 전망과 진로』, 참솔

(2) 학위논문

- 양창진, 1993, 한국 야당의 선거전략 연구 : 14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반지배연합 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
- 엄병철, 1990, 한국 기독교인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국민대 행정대학원, 석사
- 유은정, 1993, 한국의 민주화이행 초기단계(1985-1987)에 있어서 제1야당의 역할과
한계, 고려대, 석사

(3) 일반논문

- 강문구, 1994, 한국사회의 민주화, 사회변혁, 반지배연합,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와 진로』, 한울
- 고성국, 1991, 대중정치투쟁의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 정당운동, 『동향과 전망』, 봄
- 고성국, 1991, 광역선거 후 정국전망과 정치적 대응, 『동향과 전망』, 가을
- 김도중, 1992, 제14대 총선 과정에 나타난 재야 운동권의 선거전술 및 한계,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연례학술대회』
- 류청하, 1992, 1985년 2.12 총선, 『역사비평』, 봄.
- 손혁재, 1996, 4·11 총선과 진보 진영의 정치세력화, 『경제와 사회』30('96.6)
- 손호철, 1993, 14대 대통령선거와 민중운동: 평가와 전망, 『전환기의 한국정치』, 창작과 비평사
- 손호철, 1999, 97년 대선으로 본 민중운동 그리고 선거공간,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 손호철, 1995, 6.27 지방자치체 선거와 민중운동, 『이론』, 가을
- 안상중, 1991,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광역의회 선거, 『동향과 전망』, 가을
- 안 식, 1993, 14대 대통령선거 평가, 『현대화 혁신 그리고 연대』, 나라사랑
- 안 식, 1993, 정치지형의 변화 및 지배방식의 고도화에 대한 전망, 『현대화 혁신 그리고 연대』, 나라사랑
- 양길현, 1993, 14대 대통령선거의 대결구도와 정주영의 패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사회의 새흐름』, 나남
- 정관용, 정당운동의 관점에서 본 영등포을구 재선거, 한국사회연구소 편 『대중정당 - 민족민주대중정당의 이론과 현실』 백산, 1989
- 정근식, 광주전남 지역운동의 구조와 전망: 지방의회 선거 국면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1991. 가을
- 정대화, 6.27지방선거 결과분석: 민심 이반론과 지역주의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동향과 전망』, 1995 가을.
- 정영국, 1993, 지역주의와 선거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가을·겨울
- 정영태, 1993, 계급별 투표행태를 통해 본 14대 대선,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나남
- 조현연, 1997, 한국의 탈권주의 정치변동의 쇠퇴과정에 관한 연구: 민중운동의 전략적 결정을 중심으로, 경남대 『한국과 국제정치』 25('97.7)
- 최장집, 1992, 한국노동운동은 왜 정치조직화에 실패하고 있나, 『한국의 국가와 시민

사회』, 한울

최장집, 1993, 1992년 대선과 한국의 민주적 이행,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한지수, 1991, 광역의회 선거결과 자료 및 해설, 『동향과 전망』, 가을

(4) 저널

김 철, 1987, 한국혁신정당운동의 회고와 전망, 『민족지성』, 2월

김근태, 1992, 재야의 반성 재야의 선택, 『신동아』 398('92.11)

김영배, 1989, 중간평가 그 후의 정국, 『월간중앙』, 4월

김종민, 2001, 노동운동 안 변하면 죽는다: 위기론 확산... 산별노조 전환·정치 세력화
등 대안 찾기 고심, 『시사저널』 611(2001.7.12)

김 철, 1987, 한국혁신정당운동의 회고와 전망, 『민족지성』, 2월

류청하, 1992, 1985년 2.12 총선, 『역사비평』, 봄

안상중, 1991, 87년 이후 진보세력의 선거투쟁과 그 교훈, 『사회평론』, 11월

양대석, 1988, 노태우집권 후 재야운동 1년, 『월간경향』 286('88.12)

이강산, 1997, 재야운동권 분열의 실상, 『새물결』 190('97.2)

이강산, 1998, 새 정부 출범과 재야운동권의 세 갈래길, 『자유공론』 373('98.4)

이계홍, 2002, '마지막 재야' 예춘호 씨가 회고하는 '나와 3김', 『신동아』 45권 3호
통권 510호, 3월

이광일, 1998,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인터뷰 자기상실에 빠진 재야 껌데기 벗어야,
『주간한국』 1731('98.7.30)

이용식, 1988, 중산층 정당으로 노선 정리해 가는 민주당, 『월간중앙』, 11월

이조원, 1992, 14대 총선에 임한 재야운동세력의 대응전술과 향후진로 분석, 『공안연
구』 20('92.6)

이종오, 1995, 모래시계 세대의 정치세력화와 그 의미, 『전망』 106('95.10)

2. 기존정당참여

가. 총괄

(1) 단행본

한국사회연구소, 1989, 『대중정당-민족민주대중정당의 이론과 현실』, 백산서당

(2) 학위논문

김진옥, 1994, 민주화추진협의회에 관한 연구 : 지역당구조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

박재일, 1986, 한국야당파벌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

(3) 일반논문

경남대학교, 1992, 92·3년을 민족민주세력들은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경남대 『경대
문화』 26

고성국, 1989, 민중민주 대중정당의 이론과 현실, 한국사회연구소 편, 『대중정당- 민족
민주대중정당의 이론과 현실』, 백산

(4) 저널

고성국, 1990, 재야의 정치세력화와 야권통합 향방, 『월간중앙』 173('90.6)

김이택, 1992, 민주당 재야계보들의 정치개혁 구상, 『말』 71('92.5)

박순섭, 1990, 평민당은 재야에 등을 돌릴 것인가, 『옵서버』 2('90.2)

나. 참여동기/ 논쟁

(1) 단행본

현대사회연구소, 1989, 『민주화과정에 있어서의 이념논쟁 : 정당의 이념적 성격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연구소

(2) 학위논문

신성규, 1993, 한국 민주화과정에서의 진보정치세력에 관한 연구 : 1987~1992년까지의 진보세력을 중심으로, 충남대, 석사

(3) 일반논문

백종국, 1992, 민중연합 민주연합과 한국의 민주화 - 계급연합과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비평』, 7월

(4) 저널

고성국, 1991, 제도권 진입한 재야3파의 진로, 『월간중앙』 183('91.4)

김광덕, 2001, 제3세력론... 개혁신당 태동하나 : 여야 개혁과 중심으로 재야와 합세 정치세력화 움직임, 『주간한국』 1869호

다. 활동사항

(1) 단행본

김영삼, 2001,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조선일보사

김영삼, 1992, 『나의 정치 비망록 - 민주화와 의정 40년』, 심우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1997, 『암흑속의 횃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4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1997, 『암흑속의 햇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3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1996, 『암흑속의 햇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1-2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2001, 『암흑속의 햇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8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2000, 『암흑속의 햇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7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1998, 『암흑속의 햇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6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1998, 『암흑속의 햇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5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2) 일반논문

이정희, 1999, 재야 정치집단의 민주화 운동 : 정치이데올로기 · 중심세력 · 정치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톨릭사회과학연구』, 11('99.11)

(3) 저널

고도원, 1988, 지자제 선거로 대권고지 노리는 평민당, 『월간중앙』, 11월

고성국, 1991, 통합야당과 민중진영은 어떻게 연대해야 하나, 『사회평론』, 11월

김근태 · 박영률, 2001, 민주화운동 세력이 DJ개혁 계승해야『인터뷰』, 『말』175, 1월

김보협, 2002, 어제의 투사 다시 뭉치마! : '개혁정치모임' 결성한 민주당 재야 출신... 개혁성 내세워 포스트 3김시대 도모, 『한겨레21』 통권417호, 07.18

김부겸, 1994, 어제의 재야 내일의 정치세력 향해 새로 달린다, 『월간중앙』 220('94.5)

김충식, 1990, 맹목의 정객 여당 된 야당의원, 『신동아』, 4월

한동윤, 1989, 민주 소장파 의원들 당풍쇄신 움직임, 『주간조선』, 9.3

홍석조, 1992, 인터뷰/ 이부영의 개혁정치론, 『길』, 5월

라. 결과 및 평가

(1) 학위논문

정기영, 1998, 한국의 민주화와 정당정치에 관한 연구 : 야당의 구조적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

(2) 일반논문

김도중, 1992, 제14대 총선 과정에 나타난 재야 운동권의 선거전술 및 한계,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연례학술대회』

김석준, 1990, 비제도권 정치세력의 제13대 국회진출과 의회민주주의 제도화, 이화여대, 『사회과학논집』10('90.12)

손호철, 1993, 14대 대통령선거와 민중운동: 평가와 전망, 『전환기의 한국정치』, 창작과 비평사

이정희, 1997, 재야 정치집단의 민주화 운동, 『한국정치학회-97년 연례학술대회-』

임현진, 2002,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는 가능한가?, 『비판사회학회토론회자료집』, 한국산업사회학회

(3) 저널

나병식·구영식, 2000, 동교동계가 재야세력을 학살했다『인터뷰』, 『말』 166(2000.4)

박덕건, 1989, 재야입당파 1년의 성공과 좌절, 『월간중앙』 161('89.6)

박병수, 2002, 새 정치 그 아슬아슬한 희망 : 정당민주화 물꼬 튼 국민경선제 보스정치의 벽을 깨고 우뚝 설 수 있을까, 『한겨레21』 통권393호 01.24

박영암, 1992, 재야출신 의원당선자들의 사고, 『오피서버』 29('92.5)

이년홍, 1989, 여야의 당내민주화 실험, 『월간중앙』 161('89.6)

정장열, 2000, 정치혁명' 이냐 정치세력화냐 : 밀실공천·보스정치 등 '늪은 정치' 타파

- 기대...일부선 지나친 '정치관여' 비판도, 『주간조선』 1588, 1.27
정희상, 1992, 민주당 재야입당파들의 현주소, 『말』 67('92.1)
제정구·서영석, 1988, 재야, 정치 전면에 나서야 ; 야당신당의 산파역 제정구 <대담>, 『월간경향』 276, 2월

3. 독자정당활동

가. 총괄

(1) 단행본

-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1992, 『진보세력의 대두와 한국의 정당정치』, 서강대
주대환, 1994, 『진보정치의 논리』, 현장문학
주대환, 2002, 『진보정당은 비판적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가』, 이후
장상환, 2000, 『진보정당을 말한다』, 책벌레

(2) 학위논문

- 구천서, 1989, 한국의 진보적 합법정당에 관한 일 고찰 : 진보당을 중심으로,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
김인수, 1994, 한국 혁신정당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 정치적 성격과 제약요인을
중심으로,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
김정진, 1999, 한국 진보정당의 연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중심으로, 국민대 정치
대학원, 석사
김주현, 1993, 변혁적 사회운동 세력 내의 합법대중정당 건설 운동에 관한 연구 : 민중당
운동 (1990년 11월 - 1992년 3월)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
김지선, 1986, 진보당과 한국정치체제의 구조적 제약, 고려대, 석사
김진향, 1996, 한국 혁신정당 정착화의 제약요인:87년6월 민주화운동 이후를 중심으로,
경북대, 석사

- 김호택, 1992, 한국혁신정당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
- 노찬백, 1995, 한국의 진보적 군소정당의 실패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
- 박상병, 1997, 한국의 진보정당에 관한 연구 -민중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하대, 박사
- 박상철, 1987, 한국 혁신정당에 관한 연구 : 민주사회주의 제정당의 전개과정(해방-제3공화국)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
- 박종한, 1989, 정당의 해산 : 특히 진보당 사건을 중심으로, 인하대, 석사
- 박진서, 1991, 1980년대 한국혁신정당 연구 : 한겨레민주당과 민중의 당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석사
- 유효상, 1993,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진보정당의 형성-한국과 브라질의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 고려대, 석사
- 윤순갑, 1991, 한국 혁신정당(1945-1960) 연구 : 생성의 제약요인을 중심으로, 경북대, 박사
- 전성환, 1987, 진보당 연구 : 그 불법화에 이르는 과정과 성격, 서울대, 석사
- 전영돈, 1988, 한국 혁신정당의 전개과정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행정대학원, 석사
- 정태영, 1995, 한국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연구, 1945~1961 : 이념적 정향과 정치행위를 중심으로, 건국대, 박사
- 현재호, 1996, 진보정당운동의 실패원인에 관한 연구: 정당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
- 황인원, 1991, 1950년대 한국정치와 진보당 - 진보당의 사회운동사적 위상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
- 최석만, 1996, 민주화와 진보정당의 성립에 관한 연구 : 한국의 민중당과 브라질의 PT(노동자당)를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

(3) 일반논문

- 고성국, 1989, 민중민주 대중정당의 이론과 현실, 한국사회연구소 편, 『대중정당-민족민주대중정당의 이론과 현실』, 백산
- 고성국, 1991, 90년대 한국정치와 정당운동의 진로, 『사회와 사상』(통권26호) 가을
- 길승흠, 1990, 혁신정당의 필요성과 가능성,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의 민주화와

통일방안』 을유문화사

오창엽, 1999, 진보정당운동의 역사와 이념, 『동향과 전망』 43호, 겨울

유기홍, 1991, 현시기 합법정당운동의 전망, 『동향과 전망』, 봄

유재일, 1989, 민주변혁과 진보정당,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제3세계의 민주 변혁』

이원주, 1991, 민중당을 생각한다, 『고대문화』 34('91.6)

이종오, 1995,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 논의: 진보정당운동의 좌절과 전망, 『경제와 사회』, 가을

장상환, 1999,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현실성, 『동향과 전망』 42('99.9)

정용대, 1989, 한국의 진보정당과 정치발전 -생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3집 제2호)

손호철, 1999, 차이와 반복 '4.19 혁명' 과 '6월항쟁' 이후의 진보정당 비교, 『신자유 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4) 저널

권영길 · 조세희, 1997, 노동자 정치세력화 21세기를 위한 '희망의 투자' <대담>, 『당대 비평』 2('97.12)

김낙중, 1988, 한국사회변혁과 혁신정당이 가는 길, 『민족지성』, 2월

김형식, 1997,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이 추진 중인 정치적 실험 : 97년 대선과 재야의 선택, 『월간조선』 210('97.9)

오동석, 2001, 민주주의와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이현수, 1991, 진보정당 의회진출 국가가 보장해야, 『사회평론』, 11월

지해범, 1989, 재야의 정치발판 진보정당, 『월간조선』 106('89.1)

우한기, 1993, 민중후보진영의 해체와 진정추의 진로, 『길』, 4월

나. 참여동기/ 논쟁

(1) 학위논문

최문성, 1991, 합법·비합법 정당의 변혁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2) 일반논문

강현수, 1997, 87에서 97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역사적 대의, 『고대문화』 45·46

경남대학교 편, 1992, 92·3년을 민족민주세력들은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경남대 『경대문화』 26

김민석, 1990, 합법정당 건설 및 성격 논쟁, 『80년대 한국사회 대논쟁집』 월간중앙 별책부록, 1월

박상훈 1989, 현 시기 정당운동의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연구소 편 『대중정당-민족 민주대중정당의 이론과 현실』, 백산

양재원, 1989, 합법정당 결성주장에 대한 비판, 『사상문예운동』, 창간호

박 동, 2002, 민주사회당 창당의 조건과 전망, 『현장에서 미래를』, 11월.

장상환, 2000, 진보정당 운동을 둘러싼 쟁점과 반론, 『동향과 전망』 통권 44호, 봄

(3) 저널

권우철, 1992, 한국노동당 무엇을 하려하는가, 『사회평론』, 2월

권호민, 1992, 노동당 창당을 반대한다, 『사회평론』, 2월

권희철, 1991, 노동자 정당 건설노선 변경에 대한 긴급제안, 『길』, 2월

김재명·이부영, 1990, 민중의 정치세력화 더 미룰 수 없어요; 전민련 이부영 상임공동의장 <대답>, 『월간중앙』 170('90.3)

박성인, 1998, 현 시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대해 : '진보정당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42('98.12)

사회진보연대 정세분석팀, 2002,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진

보연대』 통권22호 (2002. 1 · 2)

양재원, 1989, 합법정당 결성주장에 대한 비판, 『사상문예운동』, 창간호

이운재, 1992, 진보이념정당 강령작성에 부쳐, 『우리사상』, 3월

장기표, 1989, 나는 왜 합법정당 결성에 나서는가; 현재의 정치정세와 새로운 합법정당 결성의 필요성, 사회와 사상, 11월

이정로, 1989, 합법정당을 둘러싼 세 가지 노선과 '노동해방' 진영의 계급연합전술, 『노동해방문학』, 12월

정종주, 1992, 민중후보로 변신한 연세대 교수 오세철, 『길』, 4월

다. 활동사항

(1) 단행본

김철순, 1992, 『사회주의자의 실천 1』, 일빛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1997, 『암흑속의 횃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4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1997, 『암흑속의 횃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3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1996, 『암흑속의 횃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1-2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2001, 『암흑속의 횃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8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2000, 『암흑속의 횃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7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1998, 『암흑속의 횃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6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1998, 『암흑속의 횃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5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2) 학위논문

김혜진, 2001,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운동의 미시동원기제 : 총선시민연대와 민주노동당의 사례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연세대, 석사

(3) 일반논문

이정희, 1999, 재야 정치집단의 민주화 운동 : 정치이데올로기 · 중심세력 · 정치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톨릭사회과학연구』, 11('99.11)

(4) 저널

강승구, 1997, 재야 대선서 정치실험 : 첫 독자후보 출마 정치세력화 시도...98년 지자 선거-16대 총선까지 내다봐, 『뉴스플러스』 99('97.9.4)

권복기 · 김이택, 1996, 진보세력의 진지를 구축하라 : 노동 · 통일운동 고립위기 속 정치세력화 대실험, 『한겨레21』 99('96.3.14)

김경은, 2002, 친노 재야출신 모임 8 · 8 재보선 후 당 분화 시사 : 대선 패배주의 확산 되자 2004년 총선 대비 거론, 『뉴스메이커』 제11권 제27호 통권481호, 07.11

김대성, 1989, 재야신당 누가 입당하는가, 『신동아』 362('89.11)

김창석, 1997, 국민후보! 개혁정당!! : 진보민주진영 대선전략 단독입수 '3백만 표 득표로 정치세력화 기반 마련', 『한겨레21』 169('97.8.7)

김철수, 1992, 새 민중정당 건설추진 어디까지 왔는가, 『사회평론』, 2월

문갑식, 1997, 대선 복병 '민노당' ? : 민주노총 '합법' 날개 달고 본격 정치세력화... 반재벌 투쟁선언 주목, 『주간조선』 1444('97.3.20)

박성준, 2000, 이제 기필코 여의도로 가련다 : 민주노동당 16대 총선 '원내 진출'에 막판 사력...자금난 · 언론 홀대 '이중고', 『시사저널』 546, 4.13

신승근, 2000, 진보정당은 다시 일어선다 : 곧 재창당 뒤 재 · 보선 참여...불리한 정치관계법 개정에도 박차, 『한겨레21』 305, 4.27

오창현, 1991, 민중당과 재야의 총선대책; 14대 총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말』 65('91.11)

장성욱, 1988, 재야의 신당운동 어디까지 왔나, 『신동아』 341('88.2)

라. 결과 및 평가

(1) 단행본

손호철, 1993, 『전환기의 한국정치』, 창작과 비평사

손호철, 1995,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셋길

(2) 학위논문

김선빈, 1991, 한국 혁신정당에 관한 비교연구-제1공화국의 진보당과 제2공화국의 사회진보당의 정치적 실패요인분석, 서울대, 석사

안철진, 2002, 민주노동당의 정치역학구도와 선거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

정창현, 1993, 1946년 좌익정치세력의 삼당합동' 노선과 추진과정, 서울대 대학원, 석사

(3) 일반논문

고성국, 1989, 정계개편의 전망과 정당운동의 위상, 한국사회연구소 편, 『대중정당 - 민족민주대중정당의 이론과 현실』, 백산

김도중, 1992, 제14대 총선 과정에 나타난 재야 운동권의 선거전술 및 한계,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연례학술대회』

노중선, 1992, 4월 혁명기 혁신정당 왜 좌절하였나, 『역사비평』, 가을

박상병, 1998, 민중당의 조직관계와 14대 국회의원선거 1990-1992, 『동향과 전망』 (통권 39호), 가을

박영호, 2000, 민주노동당은 왜 패했는가?, 『동향과 전망』(통권 45호), 여름

박중성, 1989, 현 시기 노동계급의 진출과 그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직적 과제: 노동조합과 노동자당을 중심으로, 『연세』 29('89.9)

손혁재, 1996, 4·11 총선과 진보 진영의 정치세력화, 『경제와 사회』30('96.6)

- 손호철, 1993, 14대 대통령선거와 민중운동: 평가와 전망, 『전환기의 한국정치』, 창작과 비평사
- 손호철, 1999, 97년 대선으로 본 민중운동 그리고 선거공간,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 윤정석, 1986, 한국의 정치발전과 이념정당의 가능성, 현대사회연구소 『한국정치발전의 현실과 과제』
- 이정희, 1997, 재야 정치집단의 민주화 운동, 『한국정치학회-97년 연례학술대회-』
- 정영태, 1992, 진보정당의 가능성에 대한 일 고찰, 『한국과 국제정치』(제8권 제2호), 가을-겨울
- 정태윤, 1992, 한국에서 진보정당은 불가능한가, 『역사비평』, 가을
- 조현연, 2002, 2002년 6·13 지방선거 평가와 16대 대선 전망: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제5회 비판사회학대회 자료집』, 한국산업사회학회
- 정성훈, 2002, 민주노동당의 약진과 사회당 실패요인에 대한 분석, 『정치비평』 하반기
- 임현진, 2002,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는 가능한가?, 『비판사회학회토론회자료집』, 한국산업사회학회

(4) 저널

- 권영길 외, 1998, 제 15대 대통령선거의 평가와 민주진보운동의 진로(좌담), 『동향과 전망』 통권 제37호, 봄
- 노중선, 1992, 4월 혁명기 혁신정당 왜 좌절하였나, 『역사비평』, 가을
- 이동화, 1987, 한국혁신정당운동의 인맥과 활동평가, 『민족지성』, 2월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1,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97년 대선(민주노총 간부 토론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승호, 1989, 영등포 선거 참여전술의 성공과 '합법정당'의 결성을 위하여, 『노동해방문학』, 8월
- 유병진, 1992, 해산된 민중당, 표류하는 진보정당론, 『길』, 5월

4. 개별참여

가. 총괄

(1) 저널

안영배, 1993, 김영삼 정권에 참여한 재야인사들의 정치실험, 『말』 83('93.5)

윤석진, 1999, 신당에 합류한 '마지막 재야' 이창복 : JP와는 당같이 못한다, 『월간중앙』 288, 11월

나. 참여동기/ 논쟁

(1) 저널

김문수, 1994, 「극열재야」민자당 입당의 변; 지금은 혁명의 시대가 아니다, 『신동아』 415('94.4)

김종민 · 장기표, 2000, “장기표 민주국민당(가칭) 최고위원 인터뷰 : “비전 실현할 힘이 필요했다”, 『시사저널』 541, 2000.3.9

오동렬, 1995, 김근태의 민주당 입당 구상, 『길』, 3월

윤철호, 1994, 김영삼의 물갈이와 김문수의 전향 드라마, 『길』, 4월

한명숙 박형숙, 2001, NGO 때 마음가짐으로 일하겠다<인터뷰>, 『말』177, 3월

다. 활동사항

(1) 저널

강수웅, 1983, 한국의 재야법조인, 『조선』41('83.8)

장기표 · 김성환, 2002, 20~30년 후가 아니라 지금 권력의 향방이 내 관심: '마지막 재야', 『말』 통권 194호, 8월.

장기표 · 신동호, 2001, 민국당 탈당 · 신당 건설 선언한 장기표 씨 : 경제 파탄은 YS 아닌 DJ 때문 <인터뷰>, 『뉴스메이커』 430(2001.7.5)

라. 결과 및 평가

(1) 저널

- 서명원, 1992, 이문옥 : 광주 동구의 시민주권선언, 『길』, 5월
정관용, 1990, 재야의 정치세력화와 영등포 선거, 『월간중앙』, 3월
오민수, 1995, 재야 '마지막 대부' 김근태의 정치실험, 『시사저널』 279('95.3.2)

5. 기타

가. 총괄

(1) 단행본

- 권태환 · 임현진 · 송호근, 2001, 『신사회운동의 사회학 : 세계적 추세와 한국』, 서울대
학교 출판부
시민사회포럼 · 중앙일보시민사회연구소, 2002,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아르케
이재열 · 권현지, 1996, 『9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역할과 산업민주주의의
모색』,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임영일, 1998,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1987-1995): 변화를 위한 투쟁 협상을
위한 투쟁』, 경남대 출판부
조대엽, 1999, 『한국의 시민운동 : 저항과 참여의 동학』, 나남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 1987, 『기사연 리포트4 : 군부독재 종식과 선거』, 민중사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1988, 『90년대 한국사회와 변혁운동 : 운동주체들의 정체
인식과 투쟁전략』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1987, 『6월 민주화대투쟁』, 민중사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1988, 『기사연 리포트5: 대통령 선거투쟁』, 민중사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1983, 『1970년대 민주화 운동과 기독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0, 『한국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 학위논문

고은경, 1996,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 의회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동국대, 석사

공덕수, 2000, 한국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 연구 : 시기별 실태와 유형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

김기석, 1985, 1970년대 한국가톨릭의 정치참여활동에 관한 고찰, 한국외국어대, 석사

김두래, 1993, 한국 노총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

김보현, 1996, 한국 노동운동의 위축과정 분석: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

김은미, 2000, 한국 지역정치의 변화와 지역운동의 제도화, 이화여대, 박사

김기성, 1989, 정치변동의 관점으로 본 한국노동운동의 성격: 1987년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

김정의, 1996,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 정책에 관한 연구 : 제도적 영역과 비제도적 영역 참여를 중심으로, 한남대, 석사

김 준, 1993, 아시아 권위주의국가의 노동정치와 노동운동 : 한국과 대만의 비교연구, 서울대, 박사

김태균, 198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관한 법적 고찰, 숭전대, 석사

권재홍, 2001, 한국의 시민사회와 낙천·낙선운동에 관한 연구: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

김영수, 1999, 한국 노동자 정치운동과 민주노조운동 간의 연대관계: 1970년에서 1995년까지, 한국외국어대, 박사

김희석, 2002, 한국의 민주화과정과 시민운동에 관한 연구, 경성대, 석사

박선호, 2001, 6월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사회운동,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석사

손경미, 1995,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

서영섭, 1992, 70년대 이후의 진보적 기독교사회운동에 관한 고찰, 감리교신학대 신학대학원, 석사

배덕신, 2001,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에서의 민주노총

-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
- 은수미, 2001, 한국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경쟁 그리고 헤게모니: 이념과 쟁점형성을 통해서 본 사회운동의 동시성장과 정치세력화, 서울대, 석사
- 우승희, 2000, 한국 민주화와 시민사회운동, 조선대, 석사
- 윤모린, 2000, 한국 민주화과정에서 운동조직의 역할에 관한 연구: 1987년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
- 이병하, 2000, 충선시민연대를 통해서 본 시민운동 연대형성과 낙천낙선운동, 연세대, 석사
- 이상인, 2001, 시민단체의 선거과정참여에 관한 연구: 충선시민연대를 중심으로, 경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 이한규, 1989, 한국 대학생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이념서클 가입학생을 중심으로, 국민대 행정대학원, 석사
- 이혜숙, 1991,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교육한 지방의회 입후보 희망자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
- 장재영, 2000, 정치개혁과 한국시민운동에 관한 연구 -충선연대의 낙천낙선 운동을 중심으로-, 국민대 대학원, 석사
- 전현미, 1995,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 원광대, 석사
- 정계정, 1996, 4월혁명기 학생운동의 배경과 전개: 학원민주화운동과 국민계몽운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

(3) 일반논문

- 김도중, 1992, 한국학생운동의 쇠퇴와 전망: 제도화에서 탈제도화로, 『한국과 국제정치』 (8권 2호), 가을-겨울
- 김영수, 2001, 한국 노동자 정치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노동자 정치운동 연구의 대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제35집 제4호)
- 김상곤, 2001, 권력재편기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개혁과 연대의 과제, 『동향과 전망』 (통권50호), 가을
- 이갑윤·이현우, 2000, 16대 총선에서의 충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한국정치학회 2000년도 연례학술회의 자료집』, 한국정치학회

- 이강노, 1995, CBD에서 본 재야반체제운동, 고려대 『평화연구』 4('95.12)
- 이강로, 2000, 대통령직 승계와 지도력의 확립 :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의 사례 비교, 고려대 『정부학연구』 61, 2000.6
- 이광일, 2002, 6.13 지자체 선거와 시민운동의 정치참여 그 변화와 한계,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하반기
- 이광일, 2000, 현단계 시민운동의 딜레마와 과제, 『황해문화』(통권 29호), 겨울
- 이내영, 1996, 제15대 총선과 한국정치의 진로, 『경제와 사회』(제30호) 여름
- 이부영, 1991, 80년대 재야운동과 세 차례의 투옥; 이돈명 변호사 구속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배후 폭로의 진상, 『역사비평』 13('91.5)
- 정대화, 2000,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시민운동단체의 정치개입 -투표율 지역감정 세대 교체와 총선연대 낙선 운동의 상관성, 『동향과 전망』(통권 45호), 여름
- 조희연, 2000, 민주주의 이행과 제도정치 민중정치 시민정치, 『경제와 사회』, 여름
- 최장집, 2000, 한국의 민주화 시민사회 시민운동, 『정치비평』(통권 7호) 봄 여름

(4) 저널

- 강문구, 1991, 제3세계의 민주화운동과 선거, 『사회평론』 11월
- 김영래, 1989, 한국사회의 노동조합운동과 정치참여, 『현대사회』 34('89.7)
- 안상중, 1992, 재야의 총선참여계획전모, 『월간중앙』 194('92.3)
- 성유보, 1995, 새정치세력 누가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길』, 9월
- 고동우, 1997, 정치참여 선언한 민주노총, 『길』, 5월
- 조원민 · 백기완, 1992, 민중 염원 담아낼 정책대안 제시하겠다 <대담>, 『오피서버』 36, 12월

나. 참여동기/ 논쟁

(1) 학위논문

- 정연정, 1993, 현대 한국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

(2) 일반논문

김금수, 1997, 한국 노동자 정치세력화 전망과 모색, 『당대비평』 2('97.12)

(3) 저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2001,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민주노총 부산정치토론자료),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2001, 노동운동 어디로 나갈 것인가? - 현 정세와 노동운동의 대응 정치세력화 방향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노회찬, 1997, 15대 대선, 재야의 전략, 『길』, 3월

다. 활동사항

(1) 단행본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1997, 『암흑속의 햇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4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1997, 『암흑속의 햇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3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1996, 『암흑속의 햇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1-2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2001, 『암흑속의 햇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8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2000, 『암흑속의 햇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7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1998, 『암흑속의 햇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6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1998, 『암흑속의 햇불 :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5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2) 학위논문

- 감정기, 1994, 한국노총 정치참여의 특성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제3공화국-제6공화국 기간의 노동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
- 김혜진, 2001,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운동의 미시동원기제 : 총선시민연대와 민주노동당의 사례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연세대, 석사

(3) 일반논문

- 이강로, 1999, 한국에서 진보적 노동운동의 성장과 민주주의 공고화의 진행: 1990-1999, 『한국정치학회보』(제33집 제3호), 가을

(4) 저널

- 서영아, 1999, 재야 진보세력 '총선 앞으로' : 기성정치에 회의 곳곳서 꿈틀...선거법 개정 변수 속 '세확장' 본격화, 『뉴스플러스』194, 1999.7.29
- 박구재, 1995, 재야·시민운동 단체 지방선거 본격 참여선언 ; 선거'들러리'에서 '돌풍의 주역'으로, 『뉴스메이커』 109('95.1.26)

라. 결과 및 평가

(1) 단행본

- 학술단체협의회, 1993,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 제도, 개혁 및 사회운동』, 창작과 비평사
- 학술단체협의회, 1997,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Ⅱ』, 당대
- 한국정치학회, 1997, 『한국 민주화 10년 : 평가와 전망』, 한국정치학회

(2) 학위논문

박승규, 1987, 1952-1960 전라남도지방자치선거에 관한 연구-주민의 정치참여와 정당 활동을 중심으로-, 전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3) 일반논문

- 김수진, 1996, 민주이행기 한국 정당정치의 비판적 분석, 『의정연구』
- 박진섭, 2002, 6·13 지방선거의 결과와 향후 녹색자치운동의 방향, 『제5회 비판사회학대회자료집』, 한국산업사회학회
- 윤상철, 2002, 제16대 대통령선거와 한국정치의 전망 -제도적 권력과 비제도적 현실 세력의 부조음, 『동향과 전망』(통권53호), 여름
- 이광일, 2000, 민주화이행과 80년대 '사회운동'의 재평가 그리고 현재, 『정치비평』(통권7호), 봄 여름
- 정관용, 1989, 87·88년 민족민주운동의 활동평가, 한국사회연구소 편, 『대중정당-민족민주대중정당의 이론과 현실』, 백산
- 정승국, 1991, 전노협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조직 정치활동 평가, 『동향과 전망』, 가을
- 정영태, 1990, 노동조합 정치참여의 역사와 평가,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논문집』 9집
- 조현옥, 2002,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그 실험, 『제5회 비판사회학대회자료집』, 한국산업사회학회
- 조현연, 1995, 사회운동단체의 선거참여 결과와 함의, 『동향과 전망』, 가을
- 차명제, 2001, 한국에서의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모색, 『2001년도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한국정치학회

(4) 저널

- 김호기, 2000, 총선연대와 시민운동의 정치적 과제, 민주노동당·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노동운동·시민운동·진보정당 발전전략을 위한 공동워크숍자료
- 주대환, 1993, 민중후보운동의 경험은 운동권의 자기혁신을 요구한다, 『길』, 1월

이기호, 1999,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의 반성과 과제 : 사회운동의 민주화전략을 중심으로, 『환경과 생명』19('99.3)

한국정치운동관련문헌해제

펴 낸 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펴 낸 이 / 박형규
펴 낸 날 / 2003년 4월
인 쇄 처 / 내일기획(02-2279-271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43번지 신동아화재빌딩 3층
전화 : 02-3709-7500 팩스 : 02-3709-7516
<http://www.kdemocracy.or.kr>
